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원준호 김경미 오세혁  
설규주 차조일 고성호 김용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주관연구기관 :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 대전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인 쇄 2005년 12월

발 행 2005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66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가 격 10,000원

© 통일연구원, 2005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무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박광기 ... [등지음].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p. : cm.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05-08-05)

참고문헌수록

ISBN 89-8479-303-5

340.911-KDC4

320.9519-DDC21

CIP200500279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본 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1개 국책연구기관과 3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요 약



## 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의 필요성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았으며 동시에 평화위협을 제거하는 잠정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과거 일방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과 특히 남북한 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통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일련의 통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발효하였으며,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은 통일교육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 및 평화교육과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과거의 유사한 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남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극적인 타결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남북한간의 상

호 협력과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방안 및 시기 등 과거 통일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당위성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과는 현저하게 개선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둘째,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셋째, 사회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 평화교육과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기존 유사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1.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 가.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우선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현행통일교육 관련 법규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상황과 남북 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 예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에 의해 진행된 남북한의 관계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변화가 없었다. 1999년 1월 5일 국회의견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 통일교육지원법(법률5752호)은 급변하는 통일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법률 7355호로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원법은 국회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삭제 내지 수정되었다. 그로 인하여 실제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제6조의 2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조항을, 또 제6조의 3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둘째,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를 한 예를 들 수 있다.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들도 시급하게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과 상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교육 행위 그 자체가 찬양·고무죄에 해당되거나 통일교육 교재가 이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를 통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당국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호성이 노정되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 또한 미비하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독점해온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최신의 북한관련정보는 여전히 안보에 긴박한 위협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통일교육전문가들에게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통

일교육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일선에서 시의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최신자료의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 나.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

이와 같은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통일교육지원법 및 관계법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은 교육체계,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있어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비체계성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체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999년 8월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매년 그 다음해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부주도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의 운영실태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실무위원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제1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1999년 10월 6일과 12월 6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였다. 그로 인하여 현장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탁상공론식의 통일교육이 유지될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은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적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실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이 다분히 지방화 되고 분산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원연수원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양측으로 하여 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로 인하여 통일교육은 단순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넘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그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통일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 2. 현행 신평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 가. 신평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관련법규의 정비

통일교육지원법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기본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관련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도 사회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재 검토하고 아울러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면 현실적으로 집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첫째,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이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일반위원들의 임기를 통일교육 3개년 계획 수립 기간에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 분권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통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과 광주에 설치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원 산하로 이관하여 통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시할 수 있는 제안으로, 통일교육원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통일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순수한 의미의 교육기관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네트워크의 중심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센터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 Ⅲ.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 교사 연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계획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계획이 실제로 옮겨지는가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의 경우 그 빈도와 정도가 훨씬 덜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대체로 교과교육을 중

심으로 한 통일교육보다는 행사나 체험학습, 또는 각종 대회 등 교과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은 교사 개인 차원의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학교 통일교육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위학교 통일교육의 목표가 갖는 관성으로, 예컨대 실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목표설정의 추상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성은 통일교육에 대한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교과교육내용 속에 일방적인 반공 교육적 관점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학교통일교육 실시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주로 단기성 실적 위주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동적인 학습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 2. 실패러다임 통일교육 개념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한편 학교통일교육과는 구별되는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통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학습(Erziehung)의 개념과 교육(Bildung)의 개념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교

육내용, 교수법 등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새로운 교육내용과 새로운 방법론(교수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대내외 통일 환경의 변화 및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토출하는 새로운 통일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개선

학교 현장에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 체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은 단순히 교과교육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외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교과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과 교육과정을 수정하여야 한다. 교과 교육의 체계적 구성방안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를 체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덕과를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 조직하기 위하여 도덕교과에서 통일교육에 담당하는 시간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한다. 또한 도덕교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을 재조직해야 한다. 또한 도덕과 사회과를 핵심교과로 재 조직하여야 하며,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둘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반교과들에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들 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학교현장

에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들 내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하나는 통일교육 관련 교과 내에서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교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교과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 나.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개선

실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 간의 이해·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통일·평화의식 확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과 양태의 목표는 물론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전한 안보의식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결국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으로 수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순서와 위계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문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평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와 기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폭력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군축 논의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통일교육은 반전(反戰), 군축, 평화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통일교육은 곧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셋째,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사이의 노력이 우발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의 진정한 성과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목표가 보다 구

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통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나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교육목표보다는 ‘학교’라는 공간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학교 통일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 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의 다양함은 때로는 궁극적인 상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적인 하위의 목표나 구체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출발점에 있어서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통일은 ‘옳음’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당위적인 과제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교육도 다분히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적 통일관은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이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 등을 가까이에서 접한 세대들에게 통일을 당위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 필요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의식으로 전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옳음’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좋은’의 관점이다.

통일은 물론 옳은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좋은 점’을 조명한다고 해서 ‘옳음’의 중요성을 작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통일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무게중심이 ‘옳음’ 쪽에 있었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좋은’ 쪽으로 옮겨 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가져올 혜택만을 오로지 강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당위성보다는 유익함과 필요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



점의 전환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좀 더 친숙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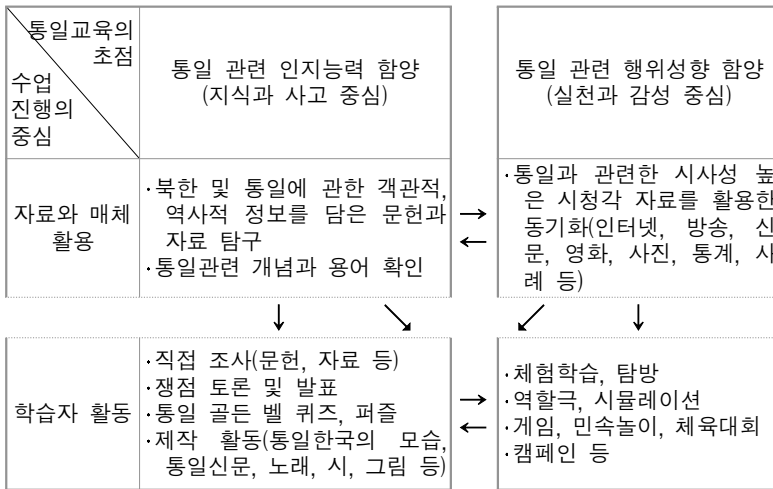
둘째,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하위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를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 정부기구, 경제상황, 국제관계 등에 대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지적 호기심과 감정이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차별, 차이, 갈등의 양상의 하나로서 통일에 접근하는 시도도 의미가 있다. 결국 학생들의 일상적 관심사와 생활세계에 좀 더 가까운 통일교육을 시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개선: 방법의 다원화 및 다양화

먼저 통일교육 방법의 다원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계획’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과 ‘반성’, ‘평가’의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통일 자체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관심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도덕과·사회과라는 교과교육, 계기교육과 같은 특별활동 등의 방법에 치우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통일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이 실천적 노력으로 보다 많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실천 사례가 보고서 형태로만 보관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하면, 통일교육의 행동영역 목표를 크게 통일에 관한 인지능력 함양과 통일에 관한 행위성향 함양으로 보고, 수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자료와 매체가 중심이 되느냐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방법을 하나의 예로 제안하고자 한다. 아래 표에 예시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느

순하게 유형화해 보았는데 이것은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듯이 학습자의 수준 및 수업의 목표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그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며 서로 조합하고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료의 활용과 학습자의 활동이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지 능력과 행위 성향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통일교육에 맥락에 따라 융통성 있게, 그리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 마. 학교통일교육 평가의 개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영역이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육 영역으로 가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외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

양한 학교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성적산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를 학생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원래 자기평가란 학습영역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자기 평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통일일기 쓰기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적에 반영되기 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반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IV.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사회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 가. 사회통일교육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부분영역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우선 학교통일교육과 구별되고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공공 부문에 대한, 즉 공무원에 대한 통일교육과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은 사회통일교육과정을 통일교육전문위원,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통일교육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노동단체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과 함께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현 통일교육지원법은 민간단체를 통일교육 주체로 인장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회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공 통일교육기관과 민간 통일교육단체에 의해 민주시민의식과 민족통일의식의 함양과 육성을 위해 수행되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 나.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

고정식 외(2004)의 선행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도 대두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통일지향 교육패러다임”으로 표현하며 사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

- 교육의 원칙: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화해·평화와 같은 상호접근을 도와주는 교육
- 교육의 내용: 정치체제나 이념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의 교육
- 교육의 주체: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
- 교육의 내용과 방법: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신패러다임”적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장의 논의는 우선 통일 지향적 패러다임을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하고 이를 신패러다임으로 수용한다. 즉 본 장의 논의는 신패러다임에서 표현되어야 할 새로움을 이론적 차원의 논쟁을 통해 설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포착된 통일 지향적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시키되 사회통일교육의 체계, 내용, 방법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탐구해 가면서 한 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다.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는 다음 세가지 차원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체계상의 차원이다. 학교통일교육체계가 기존의 학교교육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새로운 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체계에서는 정부주도와 시민단체주도가 균형을 이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은 독재와 개발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부주도 형으로 수행되었고, 본질적으로 체제유지와 반공을 추구한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진민주국가에서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은 부재했었고, 또 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가 성립되거나 발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확산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그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민주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곧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의·협력하는 사회통일교육체계를 조직하여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내용상의 특수성과 과제이다.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함께 추구하고 추진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과 민족공동체적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개인적 및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방법상의 특수성과 과제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은 사회통일교육이 교육의 수용성이 낮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평생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시한다.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주요하게는 통일교육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민단체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국민적 남남갈등에 직면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민족통일교육의 통해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법이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구사되고 있는 문제는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전문적 교수법의 개발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

## 2. 사회통일교육 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가.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은 주로 후자의 주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증대, 통일정책과 통일미래상, 통일준비라는 통일과 북한에 관계된 주제 영역이 대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준비 영역의 한 주제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 외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남북한 문화의 만남과 다가서기, 대결을 넘어 화해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북한주민의 삶 이해, 남북한의 언어생활 이해, 북한주민의 생활문화 체험, 체험과 토론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연습이라는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들도 주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은 부차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일 및 통일교육 전문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 나. 통교협외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민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의 통일교육 역시 전적으로 통일이해와 북한알기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하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주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만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명칭 하에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학습하는 전문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 다.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은 원칙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추구하는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용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실용적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탈정치적 생활문화 교육을 권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에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1)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에는 부분적으로 마치 통일교육이 잘만 이루어지면 민주시민교육도 자동적으로 잘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반공적 통일교육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과거의 사고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된 이유가 어땠든 간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진일보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역점을 둔 기존의 통일교육이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통일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이 병행하여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고히 하는 교육과 함께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양산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 (2)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의 통일교육으로 전개하는 방안: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이른바 “남남갈등,” 즉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갈등이 남한사회의 기존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과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 갈등에 직면하여 이견의 조율과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 관련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설정하여 생활 속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즉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갈등을 민주적 대화와 토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와 방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시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서, 통일교육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 V. 실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새로운 교수법

### 1. 교수법(Didaktik)에 대한 재인식

일반적으로 교수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교수법에는 협의의 이해방식과 광의의 이해방식이 있다. 먼저 협의의 이해는 교육방



법을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한다. 이 경우 방법은 교육내용의 실행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그 가치가 제한된다. 그러나 여기서 목표와 내용은 주요한 것이고, 방법은 부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방법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이 잘 지적하듯이, 무엇(내용)은 어떻게(방법)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방법 자체가 교육의 대상, 즉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기학습 방법에 의한 교육을 구사할 때 자기학습은 곧 교육의 내용적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 절차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전문적 교수법”으로 명명되는, 교수법에 대한 광의의 이해는 방법의 문제를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가지 물음, 즉 무엇(내용)을 무엇을 위해(목표) 왜(근거) 어떻게(방법) 교육할 것인가를 유기적으로 조망한다. 이 경우 교육의 전 과정이 곧 교수법의 범위와 대상이 되고, 협의의 이해에서는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단계에서 작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된다. 이러한 교수법에서는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먼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난후 다음으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이미 처음부터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를 협의로 이해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고, 이에 비해 방법의 문제를 광의로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학습자를 단지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 학습자를 교육의 동반자로 간주하기를 지향한다.

## 2. 목표그룹 전략의 개요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통일교육에서 목표그룹 전략이 필요한 근거 내지 그 기대효과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그룹 전략은, 반복되는 말이지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

해 필요하고 수요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만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목표그룹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즉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목표그룹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자 층을 확대하고,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그룹별 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목표그룹 전략은 교육주체의 교육능력 향상을 보장한다. 즉, 그것은 교육주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목표그룹에 적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의 교수법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 3. 목표그룹 전략의 운용절차

위에서 서술한 전문적 교수법의 안목과 결합된 목표그룹 전략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기획 및 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눠 제시될 수 있다.

- ① 목표그룹 예비 선정: 교육을 제공할 목표그룹을 예비적으로 선정
- ② 사전조사: 기존 자료의 분석과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예비 선정된 목표그룹의 욕구·선호·관심·문제 등을 조사
- ③ 교수법 개발: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의 내용(무엇), 목표(무엇을 위해), 근거(왜), 방법(어떻게)을 체계적으로 개발
- ④ 목표그룹 선정 및 학습자 모집: 목표그룹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간 및 공간 계획을 설정하여 교육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
- ⑤ 교육실행: 기획된 교수법에 따른 교육의 실행
- ⑥ 평가: 교육을 실행한 후 학습자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
- ⑦ 발전적 적용: 목표그룹 내에서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습자를 확대

## V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통일교육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언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협의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통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과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한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에서의 통일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포괄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분리시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한다. 시민정치

교육본부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및 통일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정치교육본부가 네트워크의 핵이 되어 이들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교재, 전문 서적 및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을 제공하는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에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각각 주력사업을 설정·특성화하여 해당 업무에 주력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은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은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피교육자의 수준과 관심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이들 민간단체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잡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 개발에 주력하던 범주를 넘어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과 교육자료 및 보조자료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업무는 시민정치교육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본부를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들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정부와 집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교육심의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통일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체계는 우

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듯이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시민들의 정치교육과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된 헌법기관화 함으로써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치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기본 틀은 시민교육정치본부와 유사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는 지역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들은 각 업무분야별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시민단체나 중앙의 시민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이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단체(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전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재의 통일교육원이 위에서 언급한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는 통일교육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이념의 격차를 줄이고, 민주사회에 대한 보편적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에 대비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점차 민주시민교육까지 포괄하는 시민정치교육에 특화하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목 차

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	1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	3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연구 방법론 .....	6
II.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과 해결방안 .....	9
1.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	11
2.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	18
3. 소결론 .....	24
III.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한 학교통일교육의 구현방안 ···	31
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	33
2.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	59
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개념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 .....	89
4. 소결론 .....	136
IV.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 .....	137
1.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	139
2. 사회통일교육 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	144
3. 사회통일교육 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	156
4. 사회통일교육 방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	168
5. 소결론 .....	177
V.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	181

1.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와 문제점 .....	183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194
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방안 .....	195
4. 사례연구: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 현황 .....	199
<b>Ⅵ. 결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b> .....	211
<b>보론: 독일 신 연방주의에서의 정치교육과 학교교육</b> .....	217
<b>참고문헌</b> .....	239
<b>부록: 통일교육 설문 분석</b> .....	243
<b>최근발간자료 안내</b> .....	269



## 표 목차

- <표 IV-1> 통일교육원의 2005년 과정별 통일교육계획 ..... 146  
<표 IV-2> 통일교육의 내용체계(2005) ..... 156  
<표 IV-3> 통일교육협약회의의 통일교육 사례 내역(2004) ..... 158  
<표 IV-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갈등해결 평화교육 ..... 166

## 그림 목차

- <그림 IV-1>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별 비율 ..... 148



# I

## 신패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필요성

과거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남북 화해협력정책은 남북간 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놓았으며 동시에 평화위협을 제거하는 잠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는 화해협력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남북의 공동번영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에 극적으로 타결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성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이 북한의 핵문제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과거 일방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통일교육도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과 특히 남북한 간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통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과거 우리 정부는 일련의 통일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발효하였으며,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2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통일교육기본계획(2004~2006)은 통일교육 인프라 정비 및 확대, 민간통일교육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통일교육의 정보화 확대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통일교육, 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한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 및 평화교육과의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과거의 유사한 통일교육 패

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극적인 타결에 따라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남북한간의 상호 협력과 교류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될 통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방안 및 시기 등 과거 통일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당위성에 근거한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와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의미의 통일교육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행되어 온 통일교육과는 현저하게 개선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즉,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은 첫째, 제도적·법적 측면에서, 그리고 둘째,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셋째, 사회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 마지막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 현행통일교육 관련 법규의 후진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적 정치상황과 남북 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둘째, 기타 통일교육과 관련된 법규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 또한 미비하다. 한편 이와 같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의 비체계성의 측면에서 보면, 첫째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체계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분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이 다분히 지방화 되고 분산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원연수원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첫째, 학교 통일교육체계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위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가 갖는 관성으로, 예컨대 실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통일교육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이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목표설정의 추상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추상성은 통일교육에 대한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아직까지도 교과교육내용 속에 일방적인 반공 교육적 관점이 남아있으며, 아울러 이러한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문제이다. 학교통일교육 실시방법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주로 단기성 실적 위주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동적인 학습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편 학교통일교육과는 구별되는 사회통일교육에 있어서도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통일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학습(Erziehung)의 개념과 교육(Bildung)의 개념에 따라서 통일교육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교육내용, 교수법 등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따른 새로운 교육내용과 새로운 방법론(교수법)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통일교육을 통하여 비로소 대내외 통일 환경의

변화 및 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통일정책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판단능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적 합의를 토출하는 새로운 통일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정치적 이념대립이 사라지고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탈 지역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구공동체 의식과 함께 정보의 상호공유와 상호의존의 공감대가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 역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분단 55년 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무드가 조성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민간차원의 사회문화교류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면서 남북화해분위기 조성 및 대북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아울러 청소년층의 통일무관심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국내적 통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의 정립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것이고,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고 아울러 통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 및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 2. 실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을 위한 연구 방법론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의 각종 법규와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현행 법규와 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실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연구가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등의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진행되어온 점을 주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학교통일교육의 풍부한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실체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과 일반학교들의 통일교육 내용과 통일교육계획서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검토를 통해 단위학교라는 학교공동체 내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함께 학교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교사들을 상대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교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구체적인 수업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교사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교사들이 느끼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현재 수준과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나아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구현을 위하여는 기존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개별적인 면담,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의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는 관

런 문헌과 함께 각 통일교육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참조·분석했다. 사례연구로서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부분은 문헌연구 이외에 독일의 연방정치교육본부 부원장인 휘빙어 박사(Dr. Bernd Hübinger)와의 개별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현실적인 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특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독일의 정치교육과 시민교육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아울러 현행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II

#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1. 현행 신파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통일지향교육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이라는 측면에서, 또 민주시민교육 내지 정치교육, 평화교육과 상관관계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그 개념이 불명확한 채로 남아 있다. 그러다보니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기존 유사통일교육 패러다임(반공안보교육과 통일안보교육)과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 의문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체계,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 가. 법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파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 우선 통일교육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부터 이른바 골격법안으로서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변화된 사회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물론 이들 문제점은 선행연구<sup>1</sup>에서도 지적된 바 있으나 통일지향교육 패러다임이 새롭게 정립되고 추진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대부분 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1) 현행 통일교육 관련법규의 후진성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시기의 남북관계 발전과는 달리 그 지속성이라는 점에서 남북 사이의 새로운 화해협력시대, 통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모두 보여준 정책의 변화에서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고 이산가족

<sup>1</sup> 제성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통일연구원, 2004).

의 상봉을 포함한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후속조치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남북한은 그 관계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독일 등의 사례와 국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지원법(법률5752호)은 1999년 1월 5일 국회의견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러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된 통일 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도 못하였다.

그리하여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2005년 1월 27일 법률 7355호로서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의 상당부분이 삭제 내지 수정됨에 따라서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제6조의 2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근거조항을, 또 제6조의 3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게 되었다. 이 점은 2005년 6월 23일 대통령령 18873호로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도 다를 바 없다. 그에 따라 개정법령 역시 당초의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기초로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sup>2</sup>

우선 통일교육지원법의 목적 내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입법목적, 개념정의,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지원법이 통일교육을

<sup>2</sup> 이영동, 『사회통일교육의 진단과 전망 토론회(2004. 12. 15.)의 토론문』(시민의신문, 2004. 12. 20), 참조.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완결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골격 법안에 불과하다. 그 내용은 대부분 추상적인 일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역시 주로 관련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규율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을 뿐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 뿐 아니라,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은 통일교육지원의 절차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통일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다. 또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도 결여하고 있다.

통일교육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설치된 실무위원회 역시 통일부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등 고위직 정부관료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일교육전문가들에 의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기구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는 비상임 전문위원들이 실무위원회와 어떠한 기능적 관련성을 갖는지가 불분명하다.

## (2) 기타 관련법규의 미비

현재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들도 시급하게 개정 내지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은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제시되고 있는 교육방법과 교육내용과 상치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통일교육 행위 그 자체가 찬양·고무죄에 해당되거나 통일교육 교재가 이

적표현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물론 국가보안법의 개폐 논의를 통하여 자의적인 법적용의 사례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당국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모호성이 노정되고 있다.

한편 유기적인 사회통일교육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과의 연계성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근거가 미흡하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서 다루는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과의 관련성이 모호하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5조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라고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이 단순히 대한민국 홍보에 그치지 않는 이상, 통일교육은 불가결할 뿐 아니라 핵심적인 교육내용을 차지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미흡한 것이다.

### (3)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규의 미비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제반규정이 미흡하다.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 독점해온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는 여전히 선별적으로 공개되고 있어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지식정보시대의 열린 통일교육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현행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년 1월 29일 전면개정 법률 제7127호)는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



법조항에 의하면 통일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인 것이다.

이처럼 북한에 관한 최신의 관련정보는 안보에 긴박한 위험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일부 통일교육전문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허용되고 있어서 통일교육내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그로 인하여 일선에서 시의적절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최신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 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의 미비는 통일교육 지원의 비체계성으로 이어진다.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지원법 및 관계법령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은 교육체계, 교육방법, 교육내용에 있어서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

### (1)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체계의 한계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그해 8월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설치되었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매년 그 다음해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해왔다. 그런데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 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정부주도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형식적인 심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제1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1999년 10월 6일과 12월 6일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대하여 심의를 완료하는 등 지금까지

의 운영실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점은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실무위원회도 1년에 수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sup>3</sup> 그로 인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한 마디로 현장중심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탁상공론식의 통일교육이 유지될 개연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게다가 정부주도에 의한 통일교육지원은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적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내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2001년 12월에는 중기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로 인하여 매년 수립되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은 사실상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계획이 반복된다는 점, 또 통일교육이 실적지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의존하여 타성적인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이 이어지고 있다.

## (2) 중앙정부중심 통일교육의 비효율성

지방분권화시대에 통일교육은 여전히 통일교육원, 공무원연수원, 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내지 중앙기관 중심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통일교육의 중추기구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원과 기타 관련기구들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하다. 공무원교육원과 교원연수원이 독자적인 통일교육을 분담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sup>3</sup>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통일연구원, 2003), p. 64.

있는지 의심스럽고 그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는 만큼 오히려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원에서의 위탁교육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공무원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통일교육을 연수과목 내지 연수과정의 하나로 포함시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역량을 축적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통일교육의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 통일교육원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편 지방분권화시대에 중앙정부중심의 통일교육은 교육내용이 획일적일 뿐 아니라 교육의 효과라는 측면에서도 극히 비효율적이다. 다만, 통일교육원은 2000년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2004년 부산과 광주에 통일교육원이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통일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지방분권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지역통일센터가 통일교육원의 지역지부가 아니라 지역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 통일교육센터가 지방 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불충분성

끝으로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통일교육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편이다. 통일교육 지원 예산 및 수강 등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정부 및 통일부장관의 재량 사항으로 되어 있다. 통일부 발간의 통일교육기본계획에 의하면,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하여 통일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예산규모가 현재까지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유일한 통일교육단체의 협의회로 취급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의 경우 2005년 4억원의 국고보조를 받아 2억원 가량을 각 회원단체로 지급할 예정인데 그 소속단체가 85개 단체임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각 단체는 연간 250만원도 못되는 금액을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셈이다.

현재 통일교육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양측으로 하여 참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통일교육단체-특히 사회통일교육을 위주로 하는 통일교육단체-는 여러 외부 단체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영향으로 인하여 통일교육의 내용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요컨대 통일교육은 제도적 뒷받침이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통일관 및 통일교육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단순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차이를 넘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확산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 2. 현행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나타난 문제점의 해결방안

무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이른바 통일교육 확산 패러다임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또 그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반공안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반영하여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단순히 통일지향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후 사회통합에 필요한 시민교육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점 역시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고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입법이 논의 중인 시민교육법 - 시민교육위원회법(안) - 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의 영역과 한계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유사법률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4</sup> 물론 아래 제4장에서 제안하는 바와

<sup>4</sup> 남윤인순, “시민교육위원회 법안 제정의 배경,” 『‘시민교육법’제정을 위한 토론회』(한국 NGO학회 및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공동개최, 2005. 4. 13), pp. 27~37.

같이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로서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을 설치하자는 구상에 따른다면, 관련 기구 및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업무가 일관성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히 통일교육지원법과 시민교육법은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관련법규의 정비

###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

통일교육지원법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이나 정책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적인 완결성을 갖추어야 한다. 물론 기본법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은 정부의 책임과 의무,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부처 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설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가사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 당시에 통일교육지원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입법의 전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날이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증시되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통일교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착안점에 대한 고려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법령명을 통일교육지원법이 아닌 ‘통일교육법’ 또는 ‘통일교육기본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장·절 구분 없이 11개 조문과 부칙

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제1장 총칙, 제2장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제3장 통일교육기본계획, 제4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로 구분하여 전면 개정함으로써 법률의 편제를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합당한 입법목적 및 통일교육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통일교육지원체계에서 필요한 각종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센터로 확대개편하고 그 산하에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둬으로써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새로운 방법과 내용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침해라는 내용은 대단히 추상적인 문구로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오히려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통일교육을 저해하고 위축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부장관에게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까지 부과한 것은 통일교육의 진흥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

## (2) 통일교육 관련법령의 개정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교육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가령 사회적응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 제15조에서 막연히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통일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과 밀접한 연계성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서도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사회통일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 (3) 북한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법적문제의 재검토

통일관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기초하는 투명성은 과정, 제도 및 정보가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하며 또 그것을 이해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대전제가 되는 북한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와 아울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부합하는 제도적 보완 방안

통일교육지원법이 기본법으로서 완결성을 갖추면 현실적으로 집행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 (1) 통일교육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

통일부장관은 각계의 통일교육전문가들을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부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범국민적인 통일교육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정부는 매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통일교육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교육의 일관성을 위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일반 위원들의 임기도 그에 맞추어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지방분권화시대에 부합하는 지역통일교육의 강화

지방분권화시대에 걸맞게 통일교육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과 광주에 설치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원 산하로 이관하여 통일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이나 집행에 있어서 기존의 하향식 체계를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상향식 체계나, 적어도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통일교육의 계획수립과 통일교육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통일교육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광역시 및 도에도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추가로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와 함께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와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학교 등 통일강좌를 운영하고 청소년 분단현장 체험연수 등 청소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통일교육 뿐 아니라 지역학교의 통일교육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 통일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

정부는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학교 뿐 아니라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의 주요 축을 구성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 등의 관련단체에 대하여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부에 등록된 통일교육 관련단체는 113개에 달하면서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는 2005년 5월 85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협의회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협의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



가 2003년 12월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4년 12월말 749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지역사회 주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청소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주민을 대상으로 연평균 250만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를 전국 12개의 북한관과 연계시켜 지역별 통일교육센터로 육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구색맞추기식으로 이루어진 통일교육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해줌으로써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교육 체계의 전면적 재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 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자료 등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각 부처사이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기관사이, 또 민간기관들 상호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전문가 뿐 아니라 모든 계층의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통일교육 수요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의 교류와 협의 하에 각 급 학교와 교육연수원의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일반 통일교육강사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해서도 통일교육원이 실제로 통일교육주관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sup>6</sup> 이 점에서 통일교육원은 현재 질적으로 보나 그리고 양적으로 보나 통일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원의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구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통일연구원으로 이관하고 순수한 의미의 교육기

<sup>5</sup> 통일부, 『2004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4).

<sup>6</sup> <부록> 통일교육 설문분석 표 18 및 19 참조.

관으로 재편함으로써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통일교육네트워크의 중심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센터로서 기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는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통일교육센터와의 긴밀한 연계 하에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면서도 자치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소결론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서 그 이후 큰 변화를 보여 왔다. 하지만 이는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공존을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냉전시대의 퇴적층은 한 순간의 만남으로 쉽게 해체되지 않는 단단하고도 복잡한 지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층구조의 근원적인 해체를 위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설득과 이해도 필요하지만 남과 북 각각 내부적으로 계층 간 집단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가지 고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에 흔히 개혁·개방으로 지칭되는 북한의 변화도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우리들 자신도 냉전적 사고를 탈피해야 하고 또 구시대의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각종 잔재와 이권들을 청산·포기해 나가는 노력도 당연한 시대의 요구라 하겠다. 바로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신 패러다임 통일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도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일교육법(안) 예시〉

### [통일교육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라 함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2. “민주시민교육”이라 함은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 및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3. “통일교육시설”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단체, 그리고 통일교육단체가 통일교육을 위한 설립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통일교육단체”라 함은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통일 실현의지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통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과 초정파성을 견지하며 특정 개인

이나 단체를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제2장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제6조(설치)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2. 통일교육 지원정책의 수립
3.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
4. 통일교육의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
5. 통일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그밖에 통일교육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은 관련부처의 당연직 위원과 계층·연령 등의 면에서 국민 대표성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추천을 거쳐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 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자격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의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통일교육센터) ① 위원회 산하에 통일교육의 방법연구·교재개발과 교육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통일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통일교육센터를 둔다.

- ②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역 통일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
- ③ 통일교육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통일교육 기본계획

제1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2. 통일교육의 추진목표와 추진내용
3. 분야별 교육체계에서의 통일교육 추진 세부계획
4. 통일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의 담당자에 대한 양성·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과 관련된 각 부처·기관 및 통일교육단체 등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통일교육의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8. 통일교육의 세부운영계획 수립지침과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수급계획
9.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5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 각 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준하여 연도별 통일교육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부 각 기관의 장은 운영계획과 추진결과 및 평

가서 등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기본계획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육단체가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하여 그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에 달성하는 데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공유의 시설·물품 기타 재산을 무상 또는 저렴한 임대료로 대여하여야 한다.

제1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 국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19조(통일교육협의회) 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통일교육단체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III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한 학교통일교육의 구현방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과 기타 일반학교들의 통일교육계획서(혹은 보고서)와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과 실시한 면담 결과도 일부 제시하게 될 것이다.<sup>7</sup> 또한 학교 수업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현재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내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 등의 주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sup>8</sup>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진행되

<sup>7</sup> 면담에 응한 교사들의 배경변인은 다음과 같다. 2학기 개학에 맞추어 8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지역	학교	과목 / 담임	교사	일시
서울	D 초등학교	3학년	K 교사	2005. 8. 29.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	2005. 8. 25.
	M 여자고등학교	사회과	K 교사	2005. 8. 27.
경기	S 초등학교	연구부장	K 교사	2005. 8. 31.
	A 고등학교	국어과	S 교사	2005. 8. 26.
	A 고등학교	사회과	L 교사	2005. 8. 26.
인천	H 초등학교	4학년	P 교사	2005. 8. 30.

<sup>8</sup> 윤용삼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서울: 통일교육원, 2003); 김동규 외, 『남북한관의 의식조사와 통일교육 개선방안』(서울: 집문당, 2001); 박찬

고 있는 통일교육의 모습에 대해 어느 정도 개괄적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설문조사만으로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교육의 풍부한 의미와 맥락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들과 일반학교들의 통일교육 내용과 통일교육계획서를 중심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검토를 통해 단위학교라는 학교공동체 내에서 통일교육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통일교육의 현재 수준과 위치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해 내는 것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가.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사례

### (1) 연구학교의 통일교육 실천사례

#### (가) 초등학교

충청북도의 S 초등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충청북도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

석 외, 『통일교육론』(서울: 백의, 2000); 문용린 외,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보고서』(199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목표	내용 및 방법
통일교육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가. 교사 연수 실시 나. 통일관 설치 및 환경 구성 다. 학교 통일교육 시간 확보
북한바로알기 지도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한다.	가. 북한바로알기 교과관련 지도자료 개발·활용 나. 북한바로알기 재량활동 지도자료 개발·활용 다. 북한바로알기 자유탐구 안내자료 개발·활용
통일이지 내면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가. 통일 관련 교내행사 실시 나. 통일 현장체험학습 실시 다. 통일 노트 제작·활용 라. 북한 바로알기 아침방송 실시

충청북도 S 초등학교에서는 통일관을 설치하고 통일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등의 특색있는 노력을 통해 통일교육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통일에 대한 의지와 가치관을 함양하는데 주된 목표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교과교육은 물론이고 재량활동, 행사활동, 체험학습 등의 교과외 교육을 고루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바로알기에 관한 자유탐구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한 것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통일교육을 돕는 데 기여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기도의 S 초등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목표	내용 및 방법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가. 탈북학생 학급 편성 운영 나. 탈북학생 적응 환경 조성 다. 탈북학생 특별학급 협력지원 체제 조직 운영
탈북학생 특별학급 통합교육과정을 구안, 적용한다.	가. 남북한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비교 분석 나. 탈북학생 특별학급 통합교육과정 구안·적용
탈북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구안, 적용한다.	가. 전통과 사회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 운영 나. 탈북학생을 위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다. 평생 친구 삼기 적응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S 초등학교는 특별히 탈북학생들의 적응과 화합이라는 특화된 목표를 가지고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실제로 탈북학생들을 받아서 학급을 편성하고 남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남한 학생들과 탈북학생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S 초등학교에서는 적응을 위한 환경 조성, 통합교육 과정 운영, 다양한 교과외 교육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 (나) 중학교

충청북도의 G 중학교는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충청북도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목표	내용 및 방법
북한바로알기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가. 북한 관련 교육 환경 조성 나. 북한 관련 연수 다. 북한 관련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확충
학습활동을 통해 북한바로알기 교육을 전개한다.	가. 교과 교육활동을 통한 북한바로알기 교육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북한바로알기 교육 다. 특별활동을 통한 북한 바로 알기 교육
북한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가.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북한 이해 나. 문예활동을 통한 북한 이해 다. 행사활동을 통한 북한 이해

충청북도 G 중학교는 대체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바로알기 통일교육을 전개하였다. 이 학교 역시 북한 및 통일교육과 관련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한 후, 교과교육은 물론이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등을 통한 교과외 교육도 다양하게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다) 고등학교

경상남도의 J 고등학교는 2002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2년에 걸쳐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연구학교로서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활동을 실천하였다.

목표	내용 및 방법
북한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제시를 통해 북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가. 개인별 탐구 활동(비관련 교과) 나. 반별 활동 다. 북한 문화 관련 게시물 설치 라. 통일 연구실 운영 마. 통일교육 연구반 활용 바. 통일교육 사이트 운영 사. 통일교육 파일 만들기
북한 문화의 간접 경험하기와 가상 체험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통일 역량을 배양한다.	가. 교과학습 활동 나. 북한 관련 비디오 감상 및 감상문 쓰기
다양한 계기 교육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역할을 알게 한다.	가. 통일 문예 행사 실시 나. 북한 및 통일관련 파일 만들기 대회 개최 다. 북한 전문가 초청 강연듣기 라. 탈북자 초청 북한 문화 알아보기 마. 학교 축제를 통한 통일교육 바. 통일교육 연수 및 현장 체험 활동

J 고등학교는 북한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라는 특성상 통일연구반과 같은 클럽활동, 학교축제와 같은 행사 등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되는 활동들이 많이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 일반학교의 통일교육계획서

### (가) 초등학교

경기도 H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005년 연간 통일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활동내용	목표	대상	시기	세부 추진 계획
통일안보 글짓기, 포스터 대회	1회	4-6학년	6월 2주	학년 대회 실시 후 학년별로 우수 아동 표창
	1회	4-6학년	6월 2주	
안보 현장 견학 및 체험 학습	1회	1-6학년	4-6월 중심	특별활동, 재량활동시간, 체험학습을 통해 안보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통일안보 계기교육	연중	1-6학년	수시로	학교장 훈화, VCR, 영상자료, 통일 관련 시사 자료, 학교홈페이지 활용
불온 문서 수거활동	연중	1-6학년	수시로	중점 수거시기 ( 4월, 10월 )
남북한 생활 비교문 쓰기 대회	1회	4-6학년	11월	학년 수준에 맞는 책을 읽은 후 비교문을 쓴다.
통일 교육 방송 프로그램 시청 및 안내	1회	1-6학년	6월	KBS (거레가 하나되어, 아름다운 통일, 북한리포트) MBC (통일 전망대) SBS (북한뉴스)

경기도 H 초등학교의 통일교육계획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비교과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이 많이 나타났고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한 각종 대회 실시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계획서에는 ‘통일안보’나 ‘안보’, ‘불온’ 등의 용어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통일교육 중에서 ‘안보’의 측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나) 중학교

서울 Y 중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005년 연간 통일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추진 영역	세부 계획	시기	담당
교과 교육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덕과, 사회과 수업- 통일문제에 관한 토의 학습</li> <li>·교육부 제작CD-ROM자료 적극활용 (대립에서 화합으로)</li> <li>·통일 관련 TV방송 시청 지도</li> <li>·관련 웹사이트 적극 활용</li> <li>·방법 개선 - 토의 교육을 통한 교육 주체의 자율성 확대</li> <li>·범교과적 통일교육 자료 지도자료 활용</li> </ul>	연중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통일대비 교육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나의주장 발표 대회 실시-우수작품 지구별 대회 제출</li> <li>·귀순 용사 및 강사 초청 강연</li> <li>·통일 관련 각종 외부 행사 안내</li> </ul>	6월	사회교육부
		4월	
		연중	
교외 현장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묘지 참배 및 헌화</li> <li>·통일 연관 기관 및 지역 견학 과제 제시(방학)</li> <li>·통일전망대·땅굴 견학, 자매부대 방문 및 위문행사</li> <li>·3학년 수련회 행사시 호국사적지 방문</li> <li>·체험학습시 통일 관련 기관 견학</li> </ul>	6월	사회교육부
		7-8월	도덕과, 사회과
		6월	생활지도부
		5월	학년부장
		6월	학급 담임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원 교내 연수</li> <li>·외부 연수</li> <li>·계도(가정통신문)</li> </ul>	6, 11월	사회교육부
		3월	
		6월	
시사 계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기 다는 바른 방법 계도</li> <li>·국경일 계기교육(방송, 유인물)</li> </ul>	연중	사회교육부
특별활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문제 관련 클럽활동 조직</li> </ul>	주1회	CA담당
통일교육 코너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 게시판에 통일 교육란 설치 (월1회 갱신)</li> <li>·게시판에 통일 관련 유인물 부착</li> <li>·불온 유인물 수거 및 신고 지도</li> <li>·문고에 통일 도서 비치 권장</li> </ul>	연중	학급담임
훈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장, 학급 담임 교사의 훈화</li> <li>·5분 통일 명상 방송</li> </ul>	연중	사회교육부
		월1회	

서울 Y 중학교는 통일교육을 위해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으로 한 교과교육과 기타 다양한 교과외 활동과 연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계획한 내용과 실천된 사항에서는 다소 차이도 나타났는데, 이 학교의

도덕과 P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통일대비교육 중 하나로 6월에 실시한 글짓기, 포스터, 나의 주장 발표대회의 명칭이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에서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립묘지 참배나 자매부대 방문행사 등은 학생회 간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통일과 관련한 클럽활동은 학교 사정상 조직되지 못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 (다) 고등학교

서울의 M 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통일대비 교육에 필요한 지도요소	대 상	지 도 내 용	3	4	5	6	7	8	9	10	11	12	1	2
민족 분단의 과정과 북한의 실상 교육	학생 및 교직 원 연수	관련교과 교육을 통한 지도	연 중 실 시											
		훈화 교육	연 중 실 시											
민족 공동체 교육	학생 및 교직 원 연수	시사·계기교육 (6·25계기 민족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한 글짓기, 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개최)				0								
		게시교육(게시관설치)	연 중 실 시											
안보교육	학생 및 교직 원 연수	현장교육(통일 전망대등 호국 사적지 견학)					0							
		통일관련 방송 프로그램 시청		0						0				
		강사초빙 연수											0	
민주시민 교육	학부 모 계도	단체활동 참여							0					
		자체 연수			0						0			
		가정 통신			0				0					
		학부모 연수 (학부모의 날)	0											

서울 M 여자고등학교는 북한이해 교육, 민족공동체 교육, 안보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일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고 역시 다양한 교과외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사회과 K 교사는 실제로는 1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이 실시되었는지 잘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계획서 상의’ 통일교육과 ‘실천 차원’의 통일교육, 그리고 실시 주체로서 ‘학교 차원’의 통일교육과 ‘교사나 학생 차원의’ 통일교육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까지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실천 사례 및 통일교육계획 부분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을 고루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다양한 교과외 활동을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으로 올라갈수록 학생의 인지수준을 고려한 내용이나 활동이 추가되기도 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때, 적어도 ‘계획’상으로는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행’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천 H 초등학교의 4학년 담임 P 교사는 교육청의 특별한 지시나 실적 요구가 없는 한 통일교육은 계획대로 실시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이것이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을 한가지 더 지적한다면, 연구학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선도하고 시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일반학교에서는 하기 어려운 특화된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때로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비해 일반학교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나 학교의 성격에 맞는 특화된 통일교육보다는, 대체로 무난하게 실시해온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거나 때로는 통일교육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나 패러다임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단위학교 차원의 여건과 환경이 통일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학교를 통일교육 연구학

교로 만들 수는 없으므로 연구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실천사례들을 일반학교로 전이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통일교육 관련 교과교육과 교과의 교육

앞서 살펴본 통일교육 연구학교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은 단순히 몇몇 교과의 전유물이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 전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크게 교과수업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과교육활동과 교과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교과의 교육활동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체계 또한 교과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교과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구분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과 교과의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과 교육과 학교통일교육

일선 학교의 교과교육활동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기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으로 정하였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10학년)까지 10년간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들이 분화되어 제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 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정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이다. 이 세 교과는 교육전문가들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199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가 전국의 교

육전문가 8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세 교과가 통일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9</sup>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교과의 통일교육 관련 단원들을 분석하여 통일교육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지,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직접적인 통일교육 단원	통일교육을 위한 의도에서 단원이 조직된 경우로, 단원의 목표나 내용이 통일교육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인 통일교육 단원	단원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원의 내용 중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 (가) 도덕과와 통일교육

도덕과 교과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들이 다른 교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도덕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다루는 단원들 또한 8학년 수준에서 국가와 민족 등의 내용과 연결되어 제시되고 있다.

## 1) 직접적인 통일교육 단원

###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매학년의 중단원 수준에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sup>9</sup>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전문가 중 34.2%가 윤리과를, 28.3%가 사회과를, 24.3%가 역사과를, 그리고 13.2%가 국어과를 통일교육의 중심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이외의 기타 교과가 통일교육의 중심 교과목이라고 하는 응답은 1% 미만에 그쳤다. 문용린 외,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보고서』(1995), p. 41.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3학년 도덕	IV. 국가 · 민족 생활	2.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1)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2)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3)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4학년 도덕	IV. 국가 · 민족 생활	2.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1)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3)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4)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5학년 도덕	IV. 국가 · 민족 생활	2. 평화 통일의 방법	(1)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2)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3)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4) 일상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6학년 도덕	IV. 국가 · 민족 생활	1.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1)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2)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3)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4)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 나)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통일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큰

쪽으로 줄어든다.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8학년(중학교 2학년)의 중단원 한 곳에서 통일교육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8학년 도덕	II.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4. 남북 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1) 통일의 의의
			(2)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3) 통일을 위한 노력
			(4)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다) 고등학교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통일교육이 도덕과의 핵심주제가 된다. 다음과 같이 대단원 수준에서 통일교육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1학기 동안의 학습분량에 해당한다. 통일교육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제시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는 단원이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10학년 도덕	II. 민족통일 문제와 통일한국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현실	(1) 민족분단의 과정
			(2)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비교
			(3) 민족분단의 극복방향
		2.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1)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2) 남북한의 통일 정책비교
			(3) 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 2) 간접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아니지만 8학년(중학교 2학년) 도덕에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통일교육 내용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8학년 도덕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1.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1) 민족과 민족문화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족의 의미</li> <li>• 민족문화(북한 지역에 형성된 문화도 포함)</li> </ul>
			(3)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 원인 및 실태</li> <li>•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 공동체 형성 노력</li> </ul>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3)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의 원인과 과정</li> </ul>
		3.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4)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안보의 의미, 그리고 안보위협요인과 그 극복방안</li> </ul>

## (나) 사회과와 통일교육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나타난다. 도덕과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원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기 한차례 정도 중단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 가)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6학년의 마지막 단원에서 통일문제를 ‘민족의 미래’와 관련시켜 제시하고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6학년 사회	IV. 함께 살아가는 세계	3. 통일과 민족의 앞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 원인과 남북 대결 과정</li> <li>•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li> <li>•통일 조국의 미래상</li> </ul>

## 나) 중학교

중학교 3학년(9학년)에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통일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해당 중단원의 2/3 정도가 통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9학년 사회	VII. 지구촌사회와 한국	3. 우리 민족의 발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 분단의 배경</li> <li>•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li> <li>•민족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li> <li>•국토 통일의 의의</li> </ul>
9학년 국사	X. 대한민국의 발전	3.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li> </ul>

## 2) 간접적으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사회과는 통일교육을 직접 목표로 하지는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주요 학습 요소로 삼고 있는 교과라는 성격상, 교육 내용 속에서 통일과 관련된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의 주요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 관련된 것들이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분단이며, 분단이나 통일과 관련한 사회적, 시사적 쟁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 관련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7학년 사회	IV. 북부지방의 생활	1. 대륙의 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li> <li>• 국토 통일의 필요성</li> </ul>
		2. 북부지방의 중심지 관서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화 이후 북한의 토지 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li> <li>•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li> </ul>
		3.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의 개방 정책</li> <li>•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li> </ul>
9학년 사회	IV.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복 후 우리나라 사회의 변동 과정</li> </ul>
9학년 국사	X. 대한민국의 발전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 광복이후의 분단과정 및 분단의 고착화과정</li> </ul>
10학년 사회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과제</li> </ul>

#### (다) 국어과와 통일교육

국어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일교육과 북한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극히 드문 편이다. 실제로 중단원 이상의 규모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은 다음과 같이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의 6단원 ‘남북한 언어 차이’ 뿐이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통일교육 관련 내용
9학년 생활국어	6. 남북한 언어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li> </ul>

이처럼 국어과에서는 통일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단원은 거의 없지만, 읽기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학작품들 중 상당수가 분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간접적으로 통일교육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국어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통일 관련 내용이 다루

어지지는 않지만 분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느끼도록 하며, 더 나아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분단 극복의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국어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 내용들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학년	대단원명	중단원명	내 용
7학년 국어	6. 문학과 독자	(1) 흰 종이 수염	● 6·25 직후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극복의지
		(2) 숨쉬는 영정	●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룸
8학년 국어	4. 삶과 문학	(2) 기억 속의 들꽃	● 전쟁의 폭력과 어른들의 이기심
10학년 국어	생각하는 힘	(1) 장마	●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극복되 는 과정을 그린 소설
	함께 하는 언어생활	(1) 역사 앞에서	● 한국 전쟁의 진행 과정을 기술한 일기

## (2) 교과외 교육과 학교통일교육

통일교육은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교과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통해 단위학교 차원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가)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특별활동이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비교과적 활동을 의미한다. 특별활동은 기본적으로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속한 개인의 개성·자율성·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과 이외의 모든 교육적 노

력을 포함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목표를 사회의 변화와 교육 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인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과 같은 학생들의 계발활동, 행사활동, 계기교육,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활동을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 1) 계발활동

학교현장에서는 교과활동 이외에도 통일교육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클럽이나 동아리를 만들어 통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반(동아리), 통일정보검색반(동아리) 등을 만들어서 1주일에 1시간, 혹은 2주일에 2시간, 혹은 1달에 4시간을 배정한 클럽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발활동을 통해 통일교육을 하는 경우는 대체로 학교 내의 통일교육 담당 교사가 해당 클럽을 전담하여 지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물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클럽과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교에 통일이나 북한관련 클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과활동에 비해 대상 학생들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의 직접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통일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 2) 행사활동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와 포스터’ 등을 공모하거나 ‘나의 주장 발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러한 학교행사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적어도 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 부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한 많은 행사들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앙 행정부처나 교육청 차원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사를 통한 통일교육이 하나의 ‘업무’로서 수동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만 남게 될 수 있다.

### 3) 계기교육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어떤 사건 등을 계기로 별도의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계기교육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한 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통일과 관련한 계기교육은 보통 호국보훈의 달인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참고로 6월에 주로 이루어지는 계기교육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 6월 6일: 현충일 계기교육
- 6월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계기교육
- 6월 25일: 6·25 전쟁 계기교육

형식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과 6·25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최근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비교적 원만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에 남북정상회담 계기교육보다는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6·25 전쟁 계기교육에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 사례: 전라남도 M 초등학교의 계기교육

기념일	주 제	학습 내용	학습방법
5. 5 (어린이날)	한이가 좋아하는 것은?	·남북한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것 알아보고 비교하기 ·남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장래희망, 좋아하는 것들을 비교하기	·설문조사·인터넷 활용 ·남한 어린이들에게 설문 조사 및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 인터넷 활용 조사하기
6. 15 (남북공동선언)	통일을 위해 맞잡은 손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살펴보고 평화통일의 의지 다지기	·6.15 남북공동 선언 비디오 자료 시청 ·편지쓰기, 어린이 평화선언문 만들기
6. 25 (6. 25전쟁일)	DMZ를 평화의 공원으로	·전쟁에 대한 공포를 평화로 생각 전환하기	·가상체험·협동학습 ·전쟁의 유산인 DMZ를 통일 평화공원으로 만들기
7. 17 (제헌절)	통일은 꼭 해야 되나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이슈중심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 주장을 듣고 내 생각 정리하기
8. 15 (광복절)	왜 우리는 허리가 잘렸을까	·국토 분단의 원인을 조사하고 통일의 참뜻 탐구하기	·역할놀이 ·통일의 방법과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의 할 일을 알아보기
8. 15(음) (추석)	우리도 명절은 즐거워요	·남북한 명절을 비교하기	·ICT 활용 ·남북한 명절을 조사하여 비교하고 내 생각 말하기
10. 9 (한글날)	훈민정음과 북한 언어	·북한말 중계 방송하기 (스포츠 한 종목 선정)	·가상체험 ·축구, 야구 등 한 종목을 선정하여 북한 아나운서가 되어서 방송하기
11. 30 (무역의 날)	남북한 경제와 남북교역	·남북한 경제를 비교하고, 남북경제 협력의 의의 이해하기	·만화로 나타내기 ·남북한 경제 생활모습을 만화로 재미있게 나타내기
12. 10 (세계인권선언)	우리 동포들은 지금?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 이해하기	·독서활동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북한 이탈주민의 수기를 통하여 이해하기

#### 4) 현장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교실에서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탐구력, 창의력을 키워 미래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과 관련한 현장 체험학습은 ‘청소년 통일수련회’, ‘통일관련 사적지 견학’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통일안보 관광단지, 통일전망대, 호국사적지, 국립묘지 등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찾고 있는 대표적인 견학장소이다. 현장 체험학습은 특정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이 담고 있는 정서와 의미를 배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장소를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방문하다보니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제대로 장소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학생들이 전시물에 오랫동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줄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풍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사례: 전라남도 M 초등학교의 체험학습

학년	월	주	프로그램명	학습 내용	체험 학습 유형	통일교육 지도요소	학습 시간	장소
6	6	2	남북한 비교	· 남북한 비교문 쓰기 · 남북한 비교 그리기	표현 노작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교실
		7	통일 한마당	· 통일OX 퀴즈대회 · 통일 노래 부르기 · 통일 놀이 한마당	표현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120' (4)	운동장
		10	북한 주민 생활은 이래요	· 귀순자 강연회 듣기 · 청취소감문 쓰기 · 탈북 청소년과의 만남	탐사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강당
1	11	3	우리는 하나	· 역할극 발표회	표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120' (3)	강당
2	2	5	경의선을 이어라	· 음악에 맞추어 경의선 열차놀이 하기	표현 노작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80' (2)	운동장
		11	통일로 가는 길	· 모듈별 협동화 그리기	표현 노작	통일의 당위성 인식	40' (1)	교실
3	3	6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이해하기	· OX퀴즈	탐사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교실
		7	다시 만날 우리 민족 - 생활 속에 실천하기	·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 저금통 만들기	표현 노작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40' (1)	교실
4	4	6	한반도 여행	· 통일교육 관련 게임 하기	노작 표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80' (2)	교실
		7	통일 퀴즈	· 통일 퀴즈대회	노작 표현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80' (2)	교실
		10	5·18 묘역 및 광주 북한관을 찾아서	· 현장 체험학습	탐사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160' (4)	5·18 묘역 광주 북한관

(나)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과 선택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혹은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주로, 교과외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둔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나 심화·보충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론 중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하며, 고등학교에서도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연간 2단위를 배정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은 전교생은 아니지만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범위가 넓고 1년 동안 꾸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생·학부모의 여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적합한 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재량활동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수업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의적 재량활동이 오로지 통일교육만을 위해 배정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는 성교육, 보건교육, 인권교육, 진로교육, 인성교육, 여가교육 등 기타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 통일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실제 운영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 M 초등학교의 재량활동 편성 예시표로서 1학기의 4월부터 7월까지 총 8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2)학년 (1) 학기

월	주	단 원 / 주 제	차시	지 도 내 용	통 관 영 일 련 역	관련 교과 및 제재 (재구성)	
4	1	1.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1) 유치원 생활	1/4	·북한어린이들의 유치원 생활 ·북한의 유치원과 우리의 유치원비교	북한사회의 합리적 이해	통일 교과서	
	3	남북 어린이들의 놀이	2/1	·북한어린이들이 즐겨하는놀이 ·남북한 어린이들의 놀이 비교	"	주제 학습	
5	1	(3) 북한 어린이들의 문화생활	3/4	·북한 텔레비전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기	"	통일 교과서	
	3	(3)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생활	4/4	·북한 어린이들의 휴일 활동 ·남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생활 비교	"	"	
6	2	프로젝트 학습 (통일의 상징)	통일국가의 화폐	1/4	·남북한의 돈 바로 알기 ·통일화폐 만들기	"	주제 학습
	3		통일국가의 국기	2/4	·국가 상징물 남북한 비교하기 ·통일 국가의 국기 그리기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4		통일국가의 노래 짓기	3/4	·통일 국가 노래 부르기 ·한국인 되기	"	"
7	1	통일국가 여행하기	4/4	·가고싶은 곳에 대해 조사하기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	

(3) 기타 방법을 활용한 통일교육

경기도의 H 초등학교에서는 6월에 다음과 같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였다.

## 6.25 계기 통일 안보의식 고취 가정 통신문

### 1. 통일 교육의 목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전후 세대인 학생들에게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식을 심어주고, 통일 시대에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배양하기 위하여 통일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 \*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한다.
- \* 통일 환경과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한다.
- \* 평화와 화해협력의 대북 포용 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형성한다.

### 2. 통일 교육의 기본 방향

- \* 남북한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평화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 확고한 안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화 공존을 추구하는 평화 의식을 함양하게 한다.
- \*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 통합에 대비한다.
- \*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변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함으로써 합리적 대북관을 형성하게 한다.
- \* 민족 동질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 통일 이후 민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민주 시민 자질 함양 교육을 강화한다.

### 3. 통일 교육의 지도 방향

#### \* 통일교육의 접근방식

- 현재의 남북관계와 통일 환경을 고려한 평화공존교육강조.
- 북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교육강화.
- 기존의 정치 이념적 접근에서 생활 문화적 이해교육.
- 확고한 안보의식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필요성 이해교육.

○○○○ 학교

서울의 S 중학교에서는 통일과 관련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퀴즈대회를 마련하였다.

## 북한 알기 퀴즈(예선)

※ 1번부터 10번까지는 OX 문제입니다.

1. 북한에도 만우절이 있다.
2. 북한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다.
3. 북한에도 학생들을 위한 학원이 있다.
4. 북한에 어린이날이 있다.
5. 북한에 어버이날이 있다.
6. 북한 주민들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조기 체조를 한다.
7. 북한에도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다.
8. 북한에도 지역감정이 있다.
9.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 하며 즐겨먹는다.
10. 북한의 학생들은 시험을 주관식으로만 본다.

※ 11번부터 20번까지는 주관식 문제입니다.

11. 북한의 공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12. 서울의 한강처럼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가로지르는 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3. 옛 고려의 수도이자 인삼으로 유명한 곳으로 남북경협 공단이 있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14.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로 복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기초 사업이 되는 철도 노선은?
15. 북한에서 가장 큰 돈은 얼마짜리일까요?
16. 남북의 관계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화제가 된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JSA란 무엇의 약자일까요?
17. 북한말로 '형짚신'은 우리말로 무엇일까요?
18. 다음의 북한말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이번 여름에는 전국에 내린 무더기비로 남새가 귀해졌다.
19. 북한의 현재 국방 위원장의 이름은?
20.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북한의 산은?

호랑이 두만강과 압록강의 발원지 화산으로 정상에 분화구가 있음

## 2.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

지금까지 학교통일교육의 현황을 통일교육 연구학교와 일반학교,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 교사 연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통일교육 계획 자체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계획이 실제로 옮겨지는가에 있어서는 일반학교의 경우 그 빈도와 정도가 훨씬 덜하였다. 또한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대체로 교과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보다는 행사나 체험학습, 또는 각종 대회 등 교과외 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교과교육을 통한 통일교육은 교사 개인 차원의 문제로 남겨져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현재 학교통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통일교육의 체계,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교사 연수의 측면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가.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문제

통일교육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또한 교과 영역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학교의 일반적인 교육목표이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는 교과교육 및 다양한 형태의 교과외 교육활동들을 사용할 수 있다. 통일교육이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효율적으로 조직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통일교육에서는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 (1) 교과교육과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문제

교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실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물론 실패러다임에 기반한 통일교육이 제시된 것은 제7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이후의 교과서 제작 및 검정 및 부분 개정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제7차 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을 독립된 교과형태가 아니라 도덕과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과, 국어과 등의 관련교과에 통일관련 내용들이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큰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각 교과 내부의 편의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열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학교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관련 교과간에 통일교육 내용들이 교과의 계열적 구성 측면에서 밀도있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내에서도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통일교육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을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도덕과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마다 1개의 중단원이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3개 학년 중 1개 학년에서만 중단원 1개가 제시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4개의 중단원에서 집중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게 된다.

초등학교 도덕				중학교 도덕			고등학교 윤리
3학년 중단원	4학년 중단원	5학년 중단원	6학년 중단원	7학년 중단원	8학년 중단원	9학년 중단원	10학년 중단원
○	○	○	○		○		○ ○ ○ ○

## (2) 교과외 교육과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문제

교과외 활동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외 교육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바탕하여 진행되는 교과교육과는 달리 목표나 내용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별활동과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연간 통일교육계획을 세워 실천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일회성 행사나 계기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여러 관계기관에 의해 개발·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인권, 청소년, 여성, 진로, 보건 등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재량활동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주제의 ‘공급 과잉’ 상태가 되어 오히려 깊이 있는 학습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외 활동들은 학교급간 혹은 학년간에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와는 달리 교과외 활동들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사이에 중복되는 활동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교육계획이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최대 6년, 중등학교에서는 최대 3년 동안 동일한 통일교육계획이 반복되고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했던 교과외 활동을 중·고등학교에서 반복하게 되고 심한 경우 12년 동안 매년 같은 시기 같은 내용으로 동일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유사한 교과외 교육활동의 반복은 통일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 나.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문제

### (1) 단위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관성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통일교육은 학교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 중 하나로 계획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의 실천 여부를 논하기 이전에, 일단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하고 확고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곧 통일교육의 패러다임 문제이기도 하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통일교육에 투자하더라도 그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통일교육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체로 통일교육의 방향은 국가 수준에서 결정되고 단위 학교에 반영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45년 분단이후 ‘국가 수준’에서 통일은 중요한 학교교육 목표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는데, ‘학교현장의 교육목표’로서 통일은 시대적 상황과 통일정책의 변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통일교육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건설 후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대비 교육
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대북화해협력정책)	



위의 표를 보면 국가 수준에서의 통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과 통일교육의 주요안점도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현재는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활발한 남북교류 현실을 반영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반공이나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이해, 동질성 회복, 화해와 협력 등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제6차 교육과정 고시 이후의 통일교육의 관점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패러다임에 기반한 통일교육 논의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과거 냉전 시대의 통일교육 패러다임도 잔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은 많은 교사들이 기존의 반공교육체제하에서 학교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른바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해 왔다는 점, 또한 학교라는 공간이 ‘반공’이나 ‘안보’ 등의 문제에 있어서 다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 등과 관계깊은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약 40여 년간 지속되어 왔던 반공교육의 토대가 불과 몇 년 만에, 그것도 이를테면 남북정상회담이나 금강산관광 등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계기로 사라질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진전 정도에 따라 그때 그때 크게 바뀌기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도 변화하지만, 학교 현장은 그에 비해 훨씬 더 ‘관성’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는 통일교육의 목표와 각급 학교에서 설정한 ‘실제’ 목표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 단위학교의 통일교육에서는 기존의 반공교육적 시각과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입장들 사이에서 갈등을 보이기도 한다. 예컨대 실제 학교통일교육의 현장

에서는 북한사회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을 동포이자 이웃으로 부각시키지만, 북한의 도발이나 서해 교전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응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인식상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군사행동에 대한 대응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한 상황이 실제 발생했을 때 ‘화해’와 ‘강력 대응’ 사이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자’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학교통일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다.<sup>10</sup>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목표에 대한 교사들의 혼란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내 경력이 29년째인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반공교육을 했다. 요즘 말하는 통일교육은 염두에 두지도 못했다. 그러다 90년대 와서 화해 무드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통일을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다. 무슨 체제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합쳐야 한다고만 했다. 통일교육이라는 것도 시대 분위기를 너무 많이 타는 것 같다. 조금만 왕래가 있으면 금방 통일이 올 것처럼 성급하게 착각을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희망이 좀 멀어지면 사람들도 지치고 통일교육 분위기도 사그라들고 하는데 지금도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통일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인천 H 초등학교 4학년 담임 교사).

학교 차원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나의주장발표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2005년)부터는 명칭이 ‘건전한 안보관 확립을 위한’으로 바뀌

<sup>10</sup> 면담에 참여한 전(前) 서울 Y 중학교 사회과 교사에 따르면, 서해교전이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1교시 국어시간에는 국어교사가 반공안보를 강조하고, 2교시 사회시간에는 사회교사가 화해협력을 이야기하고, 3교시 도덕시간에는 도덕교사가 다시 남북대결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들 사이에서도 북한관, 통일관 등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학생들도 자신이 만나게 되는 교사의 주장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었다. ‘민족공동체’에서 ‘안보관’으로 바뀌니까 느낌도 확 달라진다(서울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

이러한 문제점은 단위학교 수준의 통일교육의 목표 자체가 매우 혼란스럽게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up>11</sup>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통일교육 일반의 목표 체계는 논리성과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정립되어 있더라도,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부실하고 모순적인 목표 체계가 학교 통일교육을 적절히 이끌어 주지 못한 채 교사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2) 학교통일교육 목표 설정의 추상성

통일부(2005)의 『통일교육지침』에 따르면 통일교육 일반목표와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sup>11</sup> 통일교육에 대한 현장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서 현행 학교통일교육 부진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통일교육에 대한 합의된 방향이 없어서’(27.0%)였다. 문용린 외, 『남북통일대비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의 의견조사 연구보고서』(1995).

통일교육 목표 (일반)	학교 통일교육 목표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능력 배양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외지 확립	나.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다. 통일·북한 관련 지식체계 구성 및 올바른 인식태도 형성
라.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라. 화해협력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마.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 시민의 함양
바.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	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한편, 다음은 서울 Y 중학교의 학교교육계획서에 제시된 학교통일교육 목표이다.

- (1) 통일 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 의식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 의식을 함양시킨다.
- (2) 남북한 실상과 통일 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이해를 증진시킨다.
- (3) 남북한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 (4) 건전한 안보 의식과 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시킨다.

위의 표에서는 통일교육 목표 일반과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사이의 차별성이나 논리적 계통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학교 통일교육 목표가 통일교육 목표 일반에서 파생되어 ‘학교 공동체’라는 성격에 맞게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목표의 ‘라’ 항인 ‘남북관계의 이중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부분은 학교 통일교육 목표에서는 특별히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러한 정신은 Y 중학교의 통일교육 목표에서는 (4)항에 반영되어 있으나 그 진술 수준은 매우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단위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 사이에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유사한 예로서, 화해 및 평화는 안보와 과연 충돌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쪽에 우선 순위가 있는지, 안보는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목표가 충분히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목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비해 다분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상성이 곧 모호함으로 이어지는 것은 곤란하다.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통일교육의 목표도 단위 학교 및 개별 교사에게 있어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패러다임 학교통일의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은 추상성을 띠고 있는 데다가 그러한 목표마저 단위학교 차원에서 충분히 공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학교 통일교육 목표의 모호함은 교사들의 통일교육 인식과 관련하여 ‘안보’ 개념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고 있었다.

흡수통일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보를 강조해야 한다(인천 H 초등학교 P 교사).

분단된 상황에서는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안보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된다(서울 M 여자고등학교 사회과 K 교사).

기본적으로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양립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안보교육은 통일교육의 걸림돌인데 두 가지를 조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통일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본다. 사실 교과서에 있는 통일단원을 가르칠 때마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 간에 괴리 때문에 힘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3년 전부터는 안보교육을 버리고 반전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연결시켰는데 학생들의 호응도 더 좋고 설득력도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서울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

주적 개념이 바뀌고 있으므로 안보를 꼭 북한으로부터의 안보만으로 좁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단순히 북한만을 놓고 한편에서는 안보를,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다(경기도 A 고등학교 사회과 L 교사).

결국 학교통일교육 목표가 다분히 추상적인 성격을 띠므로 인해, 예를 들어, 안보와 통일의 관계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치밀한 논의 없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통일은 해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통일에 대한 당위성만이 주로 강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많은 쟁점들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다시 말하면, 혼란과 갈등을 그저 봉합한 채 ‘통일’이라는 결과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통일은 민족사적 의미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당위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규범적 측면만이 선언적으로 강조될 때, 정작 교사와 학생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통일과 학생 사이의 거리, 통일과 교사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 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문제

### (1) 반공교육적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교육 내용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에서 통일교육과의 관련성이 특히 높은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는 기본적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바탕하여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문서와 교과서의 많은 부분에서 냉전적인 사고방식 대신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 그에 대비하고자 하는 관점에 입각하여 북한이나 통일문제를 다루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교과교육의 모든 부분에 걸쳐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관점이 전적으로 수용되지 못한 채 과거의 반공교육적인 시각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례들을 분단과정, 북한에 대한 이해, 통일의 방향 등을 중심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분단과정’에 대한 반공교육적 시각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기존의 반공 교육적 시각에서는 분단현실이 전적으로 소련의 세계전략과 이에 의해 조종된 북한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묘사해 온 측면이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분단과정에 대한 이와 같은 기존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내용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광복 이후, 소련군의 힘을 배경으로 한반도의 북쪽에 집권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보다 당파나 계급의 이익을 앞세웠으며, 소련의 정책을 무조건 추종함으로써 민족 내부의 응집력을 약화시켰다.

.... 그러나 공산주의 세력은,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하다가

소련의 지령을 받아 갑자기 신탁통치에 찬성함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분열상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었다.  
..... 이 무렵,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민족의 분단을 막아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측에 남북협상을 제의하였고 남북협상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김일성의 정치 선전에 이용되는 결과만 낳았다. (고1 도덕, pp. 110~112)

둘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한 반공교육적 시각이 담겨 있는 경우가 있다. 분단이후 남북한 사회는 점차 이질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각기 사회의 변화를 맞이했다. 남한과 다른 모습을 가진 북한을 어떠한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우리의 주요 관심사이자 쟁점이다. 기존의 반공교육적 시각에서는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판단한 북한의 이질성을 ‘좋지 않은 것’ 내지는 ‘불편함’으로 설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아가 통일을 통해 이러한 이질성을 극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우리와는 이질적인 북한 사회의 모습을 매우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공 교육적 시각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부터, 새로운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용어들이 필요하게 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미사여구, 당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선동하는 구호성 언어들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 이와 같이 북한은 그들만의 특수하고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해온 결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은 우리와 다르게 변화되었다.

..... 북한의 주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쌀이 아니라 옥수수였다. 최근에는 감자도 주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인데, 완전히 쌀만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은 평양에 사는 일부 특권계층뿐이다.

..... 북한에서도 유교적 전통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적 이익을 제한하는 집단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고1 도덕, pp. 115~122)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는 ‘통일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반공교육적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쟁점이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등은 바로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기존의 반공교육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통일을 위해 군사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학교 도덕 교과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 북한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와 대화와 교류를 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대남 적화 전략을 수정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분쟁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이다. (중2 도덕, p. 252)

물론 이와 같은 교과서의 서술 내용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가치판단에 입각한 서술 내용이 학생들의 북한관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정적 가치판단이 질게 배어있는 표현들로 인해 학생들이 북한 집권층과 북한 주민들, 그리고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동일시하여 마치 북한 주민들 모두가 호전적이고 선동적이며 공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추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한편 교과서 속에 나타난 이와 같은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서울 Y

중학교 도덕과 P 교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과서의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존의 낡은 사고와 새로운 사고가 혼재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통일교육 내용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경우는 나름대로 교육내용을 재조직화해서 사용하는데 그렇게 교사 개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는 통일교육에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안보교육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에 대한 수업방법이나, 사례 등은 별로 부족하지 않아 수업할 때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그렇지만 통일교육의 내용을 남북한의 현 실정에 맞게 평화와 통일의 관점에서 전면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 교사의 주장은, 교과서의 내용 구성과 서술 방식에 있어서 과거의 관점과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서 양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을 취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신패러다임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의 현실을 미화하고 잘못도 감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화해와 협력 대상으로서의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나 거부감은 갖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과서 서술이 일관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반공교육적 관점이 남아있는 교과외 교육활동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은 교과외 교육에서 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다. 시대적 맥락에 따라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그에 맞추어 교과서가 새로 집필되는 교과교육 분야와는 달리 교과외 교육은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교과교육에서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는 정부의 방침이 상대적으로 일관성있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교과외 교육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상의 변화가 뒤늦게 반영되고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D 초등학교

3학년 담임 K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교과외 교육 활동을 실시하는 기준 중 하나가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이어서, 특정 시기에는 특정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굳어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교실수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량활동에 비해서는 행사, 봉사, 체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에서 그러한 현상을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신문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충일’ 및 ‘6·25전쟁’에 대한 계기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자주 나타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8일 6·25 전쟁과 관련, 각 시군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이관한 공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가 20일 ‘시대착오적 전시행정’이라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6·25전쟁 계기 안보제도 및 대공신고 홍보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학교별 홍보사례를 6월 27일까지 각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요 추진내용은 『북한실상에 대한 초청강연회 실시, 통일안보 현장체험 학습,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공신고 홍보 및 계도 활동 전개(교내방송,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영상자료 활용),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공 신고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학교홈페이지 활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금번 공문은 중복 과다행정과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이 지난 3월 1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업무경감 통합공문』에 제시돼 있지 않는 사업을 펼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통일안보의 달 6월을 맞아 자체 교육계획에 의거해 화해·협력·평화·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글짓기, 그리기, 포스터, 웅변행사 등을 치렀거나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부천 내 초·중·고교에서도 6.25전쟁 50주년을 기념하는 웅변대회 및

글짓기, 포스터 등 학예행사를 개최했으며 S중과 B중 등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6.25전쟁 계기 안보제도 및 대공신고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부천포커스 2003/06/26 >

현충일과 6·25전쟁에 대한 계기교육에서 주로 6·25전쟁 중에 희생된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활동들이 기존의 반공 안보교육의 틀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이다. 사실 전쟁과 희생, 추모, 대비 등에 관한 이야기나 행사를 이끌어 가면서 그 전쟁의 당사자와의 화해 및 평화를 동시에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국 평소에 교과서나 통일수업을 통해서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다가도 6·25만 되면 다시 대결 분위기로 돌아가는 악순환과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현장 체험학습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의 대상이 되는 각종 안보관광지는 남북한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 만들어진 곳들이다.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안보관광지의 주요 전시자료들은 기존의 반공교육의 시각에서 개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학생들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경우, 역시 통일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것이다.

거제포로수용 유적공원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유적 공원 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체험관들을 확대해 통일교육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거제포로수용소의 당시 유적이 남아있는 거제공고가 이전하면서 다수 시민들은 이곳을 거제시가 매입, 현존 유족보존과 체험관, 거제역사관 등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은 “폭동체험관이나 사상대립관 등을 보면서 반공과 친공 대립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대변화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거제포로수용소의 주요 내용 가운데 ‘반공교육’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통일교육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다수 관광객들과 역사답사팀들은 지적했다.

<거제타임즈 2005/5/04>

한편,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통일교육 훈화자료에도 구패러다임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아래의 예시 자료는 서울 S 중학교에서 학생용으로 만든 통일교육 훈화자료이다.

### 탈북 청소년들은 적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가장 먼저 탈북자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갑니다. (중략) 그러나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2개월, 2004년 10월부터 3개월로 연장)이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사회의 적응훈련을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은 각급 학교에 편입학해 남한의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남한에서의 학교생활이 힘들고 두렵다고 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을까요?

첫째, 탈북 청소년들은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급 학생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탈북 후 중국 등지에서 수년씩 떠돌다가 들어온 청소년들은 20세의 나이에도 중학교에 편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의 탈북 청소년들은 나이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둘째, 탈북 청소년들은 학력 경쟁의 가혹함을 호소합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과정에서 장기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3~4년 정도 뒤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탈북 청소년들은 “남쪽은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사회와 역사과목은 처음 듣는 것이라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셋째, 탈북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도 불투명한 진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대학 진학을 강력히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탈북 청소년들은 무슨 대학의 무슨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거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탈북자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자칫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우려도 있다. 학교 부적응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비단 탈북자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청소년들도 적지 않게 겪고 있는 문제이다. 같은 문화권의 남한 청소년들도 실패하는 문제라면, 탈북자 자녀들이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적응하기 힘든 것은 당연한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 방법이나 포용의 자세를 논하기 보다는 탈북자 청소년들의 어려움이나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이질감이 강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학교에서 기존의 자료를 매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 (3)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에 적합한 내용 부족

학생들은 통일교육 내용에 대해 그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인천광역시에서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1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교 통일교육에 대해 흥미롭다고 응답한 학생은 7.9%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흥미롭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72.8%에 달하였다. 학교통일교육이 흥미롭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로 선생님의 설명 위주 수업(59.8%), 어려운 내용(33.3%), 알고 싶지 않음(6.9%) 등을 꼽았다.<sup>12</sup> 같은 조사에서 학생들은 통일교육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생활상(70.0%)를 꼽았다. 남북한의 통일정책(4.3%), 통일 이후의 생활(17.1%), 통일에 대비하여 할 일(8.6%) 등에

<sup>12</sup> 윤웅상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서울: 통일교육원, 2003), p. 13.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이다. 이것은 곧 현재의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물론 학생들의 선호만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는 없다. 내용 선정과 조직은 통일 및 북한과 관련한 범위와 계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추구하는 학교통일교육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학생들의 관심에서 자연스럽게 출발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의 K 교사는 교과별 교육과정 내용 구성을 개편할 것을 주장하였다.

내용이 부족하거나 관련이 별로 없다. 국어나 도덕, 국사 교과 등의 실제 교육과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목 별 단원을 넣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통일에 대해서 수업을 하기란 참 어렵다 (경기도 A 고등학교 국어과 S 교사).

통일교육만을 위해 각 교과에서 따로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것은 교사 개인의 의지 및 재구성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만큼 교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과서 구성 단계에서, 또는 각 교과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형태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와 관심에 맞게 재구성된 통일교육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덕, 사회, 국어 등 흔히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높다고 일컬어지는 과목은 물론이고, 수리과학이나 예체능 등의 과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 라.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문제

### (1) 실시방법의 다양성 부족

학교교육계획서를 통해 분석한 결과로 보면, 학교 차원에서는 각 교

과에서의 통일교육 방법에 대해 특별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교사 개인의 재량에 맡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재량권’이 곧 수업방법의 ‘다양성’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통일교육 관련 단원을 ‘실시할 것이냐, 넘어갈 것이냐’ 혹은 ‘비중있게 다룰 것이냐, 간단히 다룰 것이냐’ 등을 결정하는 재량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을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교과서 뒷부분에 있다고 해도 하기는 하는데 충분히 못할 때도 있다. 그런데 도덕과목 같은 경우는 통일단원 때문에 기본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을 할 시간이 부족할 때가 있다. 그쪽에 신경 쓰다 보면 통일이나 북한을 다룰 시간이 빠듯하다(인천 H 초등학교 4학년 담임 P 교사).

한편 윤용상 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통일을 주제로 공부할 때 교과서 외의 학습자료로 공부했다는 응답은 25.7%에 그치고 있다. 교과 수업에 활용되는 자료나 학습방법면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도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교과 수업에 있어서의 다양성도 미흡한 편이지만, 그러한 문제점은 교과외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반학교들의 경우, 오히려 교과외 통일교육의 방법이 더 획일화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거의 똑같다. 통일교육이든 효도교육이든 에너지절약 글짓기, 표어, 포스터 그리기 대회나 뭐 만들어서 내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 시기만 조금씩 다를 뿐 방법은 똑같다. 교과수업에서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는 이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자꾸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물 없이 그냥 수업시간에 했다고 하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비슷한 대회를 주제만 바꾸



어서 하는 건 교사도 힘들고 아이들도 몇몇에게만 집중되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인천 H 초등학교 4학  
년 담임 교사).

이러한 사정은 고등학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별히 실천에 옮길 만한 계획이 거의 수립되어 있지 않다. 6월  
에 하는 6·25관련 글짓기, 포스터 대회 정도만 열리고 있으나  
그나마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편이다. 그 외에는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업 시간을 할애하거  
도 쉽지 않다(경기도 A 고등학교 사회과 L 교사)

단위학교들의 많은 업무 부담과 바쁜 일정 때문에 학교교육계획서의  
통일교육 관련 부분이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적어도 계획서 상으  
로는 학교들 간에 커다란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또한 각 학교 내  
에서도 해마다 혹은 몇 년 주기마다 특별히 달라지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같은 통일관련 행사를 하면서도 행사의 명칭만 조금 바뀐다  
거나, 담당자가 바뀌는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 그 방법이나 시기 등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특수성 등  
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오히려 ‘다른 학  
교’ 또는 ‘작년 기준’ 등에 맞추다 보니 시간적, 공간적 변화와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단기적 실적 위주의 방법 시행

통일교육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때, 그 정당성과 필  
요성이 매우 높은 교육영역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실무자의 입장에  
서 통일교육은 그 자체로 중요한 하나의 교육영역이라기보다는 학교의  
사업 중 하나로서 교육청에 실적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영역으  
로 간주되는 측면도 있다. 다음은 인천 H 초등학교의 윤리부에서 담당

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추진계획이다. 통일교육은 이 부서의 10가지 교육영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특별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추진내용	세부추진계획
1. 실천 위주의 인성·생활지도 교육	* 3대(칭찬, 대화, 사랑) 3무(체벌, 편애, 폭언) 운동전개 * 고운 마음 심기 운동(훈화집 꾸미기) * 심성수련활동 * 정다운 이웃, 따뜻한 가족 발표 * 어린이생활지도실천카드 및 생활지도 기록카드
2. 호·향토 애호교육	* 호행 선행우수일기 표창 * 향토체험사례 발표대회 * 호행의 날 운영(매월8일) * 호실천 사례발표대회 * 호행관련 그리기대회(표어, 포스터) * 호행, 선행일기쓰기 * 애향의 날 운영 (자연보호캠페인) * 나의 주장 발표대회
3. 학교 폭력 추방 운영계획	* 학교폭력예방 훈화지도 * 주기적인 설문조사 * 학급회의 활동을 통한 자율적 예방 * 학부모 계도활동 * 폭력 예방 문예활동 * 학교 폭력 예방 추진 * 기본 생활 습관 지도 * 학교 폭력 추방 홍보
4. 안전생활 및 교통지도 계획	* 교통안전지도 * 녹색교통대 조직운영 * 안전 교육 실시
5. 어린이회 운영	* 학급어린이회 조직 * 학생 건의사항처리 * 전교어린이회 활동 * 어린이국회운영
6.환경정화 및 환경미화	* 교실환경정비물품구입 및 환경정리지도 * 쓰레기분리수거 * 담당구역청소상황지도 * 학급별 청소담당구역 조직
7. 평생교육	* 학부모 웰빙 스포츠교실 * 학부모아카데미
8. 통일·안보 교육	*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 훈화 및 계시교육 * 통일대비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대회
9. 경제· 에너지 절약 교육	* 폐휴지 수집 * 자원절약지도(주간학습이용) * 분실물 주인 찾아주기 * 이웃돕기 * 음식물 남기지 않기 지도 * 절약 실천사례발표대회
10. 민방위 소방교육	* 어린이 소방대 * 민방위교육관리

H 초등학교의 P 교사는 이러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단기적이고 확실한 실적에 부응하기 위해서

교과외 교육활동은 구체적인 결과물이 있는 것을 위주로 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통일과 관련한 깊이있는 조사나 토론 등을 학교 차원에서 또는 교사 개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실시하기 어렵고 결국은 ‘사진’으로 남길 수 있거나 상위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산출되는 글짓기나 포스터 등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위 교육기관이 학교통일교육을 지원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실적을 요구하는 풍토 속에서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해 보다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신편러다임 통일교육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상위 교육기관에서는 일선학교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어쨌든’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강제성을 띠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통일교육의 ‘실시’ 자체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 실시까지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 (3) 수동적인 학습자관에 따른 학생 참여의 부족

추병완 등(2002)은 통일교육에 있어서의 비현실적인 학습자관을 지적한다. 즉, 교사를 비롯한 기성세대는 북한이나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을 ‘빈 그릇’으로 상정하고 그것을 채워 주는 것이 곧 통일교육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스스로 해보지 못한 채 학교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고 필요하면 제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sup>13</sup>

이처럼 학생들을 수동적인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특히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주제의 무거움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랫동안의 남북대결 시대를 점차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학생들이 이념적인 편향이나 오

<sup>13</sup> 추병완 외, 『통일교육』(서울: 하우, 2002), p. 5.

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충분히 우려를 가질 만하다. 그 때문에 통일문제에 관한 한, 기성세대가 확실한 정답과 경계를 정해 놓은 채 그 테두리 안에서만 내용을 전달하고 활동을 실시하다 보니 교사의 재량이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았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도 자극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계획으로 세워놓고 있지만, 각 학교의 교육계획서를 살펴보면 그리 차별화된 내용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물론 각급 학교들이 통일교육원, 교육부, 교육청 등의 통일교육지침이나 기본계획 등을 참고하기 때문인 탓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통일교육의 성격상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교사 중심, 학교 중심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이끌어 가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보다 적극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교사나 학교가 통일에 대해 ‘완성된 틀’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참여와 구성의 기회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 마. 학교통일교육 평가의 문제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에 있어 평가는 학생의 학업 성취 결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성적을 관리하며, 성적결과에 대해 모종의 판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학교교육과정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평가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단순히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시험에 한정되지 않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교육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있어 평가는 교과영역에 한정되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시험지를 통한 지필평가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교육평가는 학교학습이 이루어지는 전후 및 그 과정 속의 전체 교육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 깊이 관련될 때만이 본래의 존재 이치가 확인된다.

그런데 현재 학교통일교육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평가의 의미가 제대로 살려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악된다.

### (1) 평가 영역의 문제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평가의 영역에 대한 것이다. 평가는 대상이 되는 교육적 활동에 따라 교과교육에 대한 평가와 교과외 교육에 대한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학교통일교육에 있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영역은 교과영역이 대부분이다. 교과외 영역에서는 행사에 대한 시상 이외에 다른 형태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는 도덕, 사회, 국어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교과목의 교수-학습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교과목들은 학교현장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명목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결과는 객관화되고 수치화되어 진학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학교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교육과정상 통일교육 관련 단원이 제시되어 있는 도덕, 사회, 국어과 등이다.

교과외 교육 차원에서는 각종 행사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행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교과 교육차원의 통일교육과는 달리 교과외 교육에서는 통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과외 교육은 교과 교육과는 달리 성적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등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정형화된 방법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관련 행사활동에 참가하는 몇몇 소수의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표창장과 상품권 몇장이 교과외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는 통일교육에 대한 거의 유일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I. 목 적

6·15 남북 공동 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자라나는 본교 학생들에게 분단의 현실을 일깨우고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마음을 함양시켜 통일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북한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시각을 형성하도록 하고, 다름을 인정하여 같음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통일관 정립에 기여

### II. 추진방법

6·15 남북 공동 선언 2주년을 앞두고 교내 대회를 실시함으로써 행사의 '제7회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의 의미 파급 효과를 고양

전교생이 참가하는 교내 대회를 실시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학교 전체적인 관심 제고 유도

### III. 세부 추진 계획

#### 1. 주제

분단의 현실을 깨닫는 내용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내용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단, 글짓기 제목은 자유 선정)

#### 2. 작품 형식 및 원고 분량

운문: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산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 3. 심사

각 학년 국어 담당 교사

심사 기준표

#### 4. 시상

가. 시상인원: 12명

나. 시상 일시: 2002. 5. 14(화)

다. 시상 상품: 최우수상 2명 도서 상품권 3매씩 (5,000×6매= 30,000)

우수상 4명 도서 상품권 2매씩 (5,000×8매=40,000)

장려상 6명 도서 상품권 1매씩 (5,000×6매=30,000)

계 : 도서상품권 20매=100,000

이처럼 교과외 교육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교과외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이 원래 의도하였던 교육적 효과가 달성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평가활동이 없기 때문에 교육활동 자체도 위축된다. 평가를 통해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설계하는 참고 자료로 삼아야 하지만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 (2) 평가 주체의 문제

학교통일교육의 평가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문제점은 평가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는 지필평가나 수행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필 평가에서는 단순히 객관식 지필고사 뿐만 아니라 서술형 및 각종 주관식 평가를 통해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있다. 수행평가에서도 개인별 집단별로 다양한 유형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대부분 객관적인 성적 부여를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평가자는 교사가 된다. 지필평가의 경우 주관식은 교사가 직접 채점하며 객관식이나 단답형 평가의 경우 교사가 사전에 정해진 정답이나 채점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수행평가에 있어서도 교사는 평

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채점기준을 정하고 이에 바탕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즉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업성취를 위해 성취기준을 정하고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바탕하여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성취 기준	*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의 통일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진다.		
평가 기준	상	중	하
	분단 국가들의 통일 사례로부터 우리의 통일 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보다 바람직한 통일 실현 노력에 적용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예상하고, 통일을 위해 요구되는 자세를 피상적인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	통일의 과정을 부분적으로 예상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다소 관심을 가진다.
채점 기준	통일한국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상(3점)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2점)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1점)	통일 한국이 가져올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통일 한국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 제시	상(3점)	통일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2점)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략 제시하고 우리의 자세를 한두 가지 제시하였다.
		하(1점)	통일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다.



그러나 실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는 교사 주도의 평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처럼 교사가 평가의 주체가 될 경우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신이 쓴 답이 교사가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의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것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차원의 가치관에 대한 것이다.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머릿속에 형성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교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나아가 교사 주도의 평가를 위해 객관화시켜놓은 평가기준들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가치 형성과정을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다.

## 바. 통일교육 관련 교사 연수의 문제

### (1) 연수에 대한 동기화 미흡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교육뿐 아니라 인성교육, 진로교육, 인권교육, 에너지 교육, 경제교육, 성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다른 교육들에 비해 특별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거나 중요성을 더 많이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처럼 다양한 이름의 교육들은 대체로 교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기보다는 교육청 혹은 학교 방침에 따라 위에서부터 결정되고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 실행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관한 교사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통일교육 관련 연수에 대한 호기심이나 필요성을 제고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 관련 교사연수를 한다고 할 때, 교사들의 환영을 받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통일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바

탐직한 방향으로 더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고민의 해결책을 반드시 통일교육 연수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것은 비단 통일교육 연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통일교육 연수라고 해서 다른 교육 연수에 비해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 연수를 기피하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연수 기피 현상으로 인해, 통일교육 관련 당국, 혹은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실시하는 통일교육 연수나 통일교육 시범수업에 각 학교마다 할당된 1~2명의 교사들이 마지못해 참가함으로써 목표 인원을 겨우 채우는 사례들도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연수나 시범수업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통일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 보다는,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통일교육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과(도덕, 윤리, 사회 등)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주로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연수 참여에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은 매우 요원해 보인다.

## (2) 연수의 실효성 부족

실제로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수업에 혹은 학교 차원의 통일교육에 적용하고 있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통일교육 교사연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교과서의 관련 단원을 활용하는 것에 비해 훨씬 새롭고 대안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곧 많은 연수 자료들이 연수 현장에서 발표되는 것으로 끝나고 학교 교실에서는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통일교육 연수는 교사 혹은 연수 실시 주체에게 있어서 결국 또하나의 실적으로 기록되는 데 그칠 수 있는 것이다.

### 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개념에 따른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안

학교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민족공동체 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남북간 화해 및 협력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보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북한, 이념, 협력, 평화, 통일 등의 개념 및 현상과 관련하여 총체적으로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통일은 체제나 이념을 단일화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이 그동안 자신의 체제와 이념을 절대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통일’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에서 평화와 공존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그리고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태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향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가. 학교통일교육 체계의 개선

학교 현장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 체계를 재조직하는 작업은 단순히 교과교육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과외 교육의 영역까지 포함해야 한다.

##### (1)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 교육의 재조직

교과교육은 학교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교육활동인 수업이 대부분 교과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교과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교과 담당 교사에 의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국정 혹은 검정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차원에서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 (가) 교과교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수정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교과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에 의해 고시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다. 물론 7차교육과정에서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내세우며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였지만, 이는 교과영역 중 심화선택과목에 있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을 뿐이며 국민공통기본과정에 있는 교과목들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수한다. 또한 심화선택과목에서도 선택된 교과목의 교과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결국 현재의 교과교육체제에서는 동일한 과목을 선택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국가수준의 교과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7차교육과정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전통적으로 각 단원별 내용까지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교과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해서 고시된 교과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교과서제작의 지침이 되고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 평가의 기준으로서 기능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목표와 교수-학습 활동, 평가 활동의 일치를 평가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어떠한 인간으로 기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국가 수준에서 합의한 교육의 기본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목표-교육내용-교육방법-교육평가’를 일관성 있게 운영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 또한 교과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교과 교육과정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여겨지고 있는 도덕과의 교육과정이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관련 교과에서도 통일교육을 수행해야 한다는 선언만 하고 있을 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 교사에 대한 연수, 교육부 차원의 각종 수정 보완자료,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된 수업자료 등을 통해 교과교육과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설계도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자재나 인력을 교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고쳐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과교육과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즉, 교과차원에서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조직이 필요하다.

물론 교육과정의 재조직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겠지만 적절한 행정적 지원과 전문가들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과교육과정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적합하도록 재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교과교육과정의 재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과정 개정 자체의 어려움이다. 7차 교육과정은 지난 1997년 고시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 문제만을 위해 전체 교과교육과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과정의 수정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상황은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정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다.

교과교육과정의 재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점은 교육 과정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반영하는 과정의 어려움이다. 교육과정의 수정은 통일교육이라는 목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요구, 기타 교육적 요구들이 혼재하면서 복잡한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 즉, 교과교육과정 수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각 교과가 능동적으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조직에 적극 협조한다면 좋겠지만 이전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 및 주장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다른 사회적 교육적 요구와 달리 그 토대가 분명하다. 통일교육은 지난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법적인 토대를 찾을 수 있다. 1999년 제정되었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에는 반영될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롭게 진행되는 교육과정 수정 논의에는 통일교육지원법 및 그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통일교육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고시’ 차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상위법인 법률에 토대하여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교과차원의 요구들보다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 (나) 교과교육의 체계적 구성방안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효과적인 학교통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교과가 필요하다.

둘째, 교과교육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반교과들에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교과목들간에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

## 1)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교과의 체계적 조직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교과교육을 통해 신뢰러다임 통일교육을 경험해야 한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교과교육이외에도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은 교과교육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다. 교과교육이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에 비해 목표나 내용선정의 조직, 교수학습, 평가 등에 있어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7차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제시된 개념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까지를 국민공통 기본교육기간(10년)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기존의 교육과정 개정 논의들에서는 도덕과가 통일교육의 핵심교과로 자처하고 있지만 이전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도덕과의 교육과정은 체계적인 통일교육교과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러다임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 통일교육교과는 기존의 교과를 재구성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으며 기존의 교과와는 관계없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일교육교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가) 도덕과를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조직하는 방안

첫 번째 방안은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교과임을 자칭해 왔던 도덕과를 다시금 통일교육 핵심교과로 재조직하는 방안이다. 도덕과는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임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덕과는 공식적으로는 스스로가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라고 주장하지만 도덕과에서 통일교육은 여러개의 하위 목표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내용에 있어 통일교육은 극히 제한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고 그나마도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2단원을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도 못하다. 특히 중학교 교육과정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단원이 중단원 1개에 불과하여 도덕과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3학년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4학년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학년	·평화 통일의 당위성
	6학년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이러한 도덕과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도덕교과에서 통일교육에 배당하는 시간이 보다 더 증대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단원배정으로는 도덕과를 통일교육교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 도덕과 보다는 사회과에서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한다.



초등학교	3학년	·분단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
	4학년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5학년	·평화 통일의 당위성
	6학년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의지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민족 공동체의 변명과 통일 한국의 모습

따라서 도덕과가 통일교육교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의 더 많은부분을 통일교육에 배당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위해 배당하는 시간이 전체 수업시간의 1/3 정도는 되어야 도덕과가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도덕교과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일교육의 교육과정을 재조직해야 한다. 현재 도덕과 통일교육과정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대단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된 중단원이 1개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때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일교육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3년동안 통일교육을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을 볼 때 도덕과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도덕과가 통일교육교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도덕과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관련 내용이 학교급(초·중·고)에 따라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덕과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재조직할 수 있다. 단 아래에서 제시하는 도덕과 교육과정은 조직형

태에 대한 예시이며 단원별 내용은 2005년도 학교통일교육지침서를 참고한 것이다. 참고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서 다루어진다.

먼저 <재조직방안 1>은 현재 도덕과의 기본적인 내용조직원리인 환경확대법<sup>14</sup>을 초·중·고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현재 도덕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환경확대법(expanding environments approach)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인 생활 → 가정·이웃·학교 생활 → 사회 생활 → 국가 민족 생활

환경확대법상으로 통일교육은 ‘국가 민족생활 영역’에 해당하여 교육과정의 마지막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경확대법을 각 학교급에 적용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그리고 고등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인 10학년의 마지막 단원을 신페러다임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해야 한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1>

초등학교	6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중학교	3학년	3. 통일환경의 이해 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고등학교	1학년	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6. 통일준비

<sup>14</sup> 환경확대법(expanding environments approach)미국의 교육학자인 Paul Hanna에 의해 주장된 교육과정 조직원리이다. 교육과정을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 등과 같이 아동의 생활환경에 맞추어 확장시켜 구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음으로 <재조직방안 2>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구성원리를 도덕과의 초·중·고 통일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나선형교육과정이란 계속성과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 질적·양적으로 점진적인 심화 확대를 강조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적용하게 되면 도덕과의 통일교육 내용체계는 초·중·고 3번에 걸쳐 심화 반복되어야 한다. 재조직 방안 2에 따르면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마감교과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3차례에 걸쳐 심화되어 가면서 반복될 수 있다.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2>

초등학교	6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일문제의 이해</li> <li>2. 북한 이해</li> <li>3. 통일환경의 이해</li> <li>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li> <li>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li> <li>6. 통일준비</li> </ol>
중학교	3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일문제의 이해</li> <li>2. 북한 이해</li> <li>3. 통일환경의 이해</li> <li>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li> <li>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li> <li>6. 통일준비</li> </ol>
고등학교	1학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일문제의 이해</li> <li>2. 북한 이해</li> <li>3. 통일환경의 이해</li> <li>4.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li> <li>5.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li> <li>6. 통일준비</li> </ol>

#### 나) 도덕과와 사회과를 핵심교과로 재조직하는 방안

현실의 학교교육에 있어 통일교육은 도덕과의 전유물이 아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도덕과 이외에도 사회과가 통일교육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은 사회과 내부에서도 시민교육내용 중요 영역으로서 중요하게 인정되고 왔으며 학교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사회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사회과가 통일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지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사회과에서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에 관하여 현재보다 더 많은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실상을 비교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특히 통일이 실현된 이후에 남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부담을 감수하는 한편, 실제적인 혜택을 예상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지리과에서는 한반도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지방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으며, 이를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 북한 지방을 우리 민족의 일부로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학교통일교육지침서, 2005)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교육을 위해 이전부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회과의 위상을 인정하고 사회과를 도덕과와 함께 통일교육 핵심 교과로 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도덕과를 통일교육교과로 하여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도덕과가 통일교육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목표들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때 도덕과와 사회과가 통일교육에 있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 즉, 사회과와 도덕과가 각 교과의 성격을 잘 살려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조직할 때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통일교육을 위해 두 교과에서 각기 다루어야 할 내용영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교과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사회과는 교과의 특성상 다음과 같이 사회문제이해를 위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제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다.

사회 현상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능력은 물론, 지리, 역사 및 제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 하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며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른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른다.(7차 사회과 교육과정, 1997)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의 분단의 정치적 상황,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지는 의의 등과 같은 내용이 사회과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과는 북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교과이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의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사회과의 특징이 북한 사회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각종 사회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환경의 이해와 관련하여 사회과에서는 사회변동에 대해 체계적인 시각을 제공해 준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대한반도 통일정책의 변화 뿐만 아니라 탈냉전의 시대가 가지는 세계사적 의의, 정치 경제적 의의 등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향후 통일 시대의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과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과에서 다룰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을 추출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교 통일교육지침서(2005)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들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사회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단 학교통일교육지침서(2005)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조직 형태를 예시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논의는 ‘다.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에서 다루어진다.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분단의 배경과 폐해 나. 통일의 의미 다. 통일의 필요성 라. 통일문제의 성격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나. 북한의 정치·외교 다. 북한의 경제 라. 북한의 군사 마. 북한주민의 생활과 교육·문화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가. 국제정세의 변화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사회과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인정받아 온 도덕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일에 대비한 교육이 통일관련 교육내용의 중심이 되고 있다.

‘도덕’은 새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성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시되고 있는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 교육을 핵심 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핵심 교과이다.(7차 도덕과 교육과정, 1997)

이러한 도덕과의 특징을 고려해 볼때 도덕과에서는 남북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통일교육지침서(2005)에서 제시된 통일교육 내용들 중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도덕과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가. 남북관계의 발전 나.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가. 우리의 통일방안 나.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다. 통일국가의 미래상	가.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과 국가안보 나. 민족공동체 형성

도덕과와 사회과 모두를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내용선정 뿐만 아니라 내용조직에 있어서도 두 교과와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도덕과는 환경확대법에 의해 조직되기 때문에 각 학교급의 마지막 학기에 통일교육관련 내용을 배정하고 환경확대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과에서는 마지막 학년의 1학기에 배정하는 내용조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교과와 특징을 고려하여 사회과와 도덕과의 통일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재조직할 수 있다.

먼저 <재조직 방안 1>은 1학기에 사회과 수업을 통해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2학기에는 도덕과 수업을 통해 통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도덕과와 사회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1>

		1학기(사회과): 현실 이해	2학기(도덕과): 처방
초등학교	6학년	통일문제의 이해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중학교	3학년	북한 이해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고등학교	1학년	통일환경의 이해	통일준비

다음으로 재조직 방안 2는 1학기 사회과, 2학기 도덕과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선형교육과정 구성원리를 적용시킨 것이다. 재조직 방안 2에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통일교육 내용체계를 3개 학년에서 3차례에 걸쳐 심화하여 반복 학습하게 된다.

<도덕과와 사회과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조직체계: 재조직 방안 예시 2>

		1학기(사회과): 현실 이해	2학기(도덕과): 처방
초등학교	6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중학교	3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고등학교	1학년	1. 통일문제의 이해 2. 북한 이해 3. 통일환경의 이해	1.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증대 2.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3. 통일준비

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

도덕과 혹은 사회과의 교육과정을 재조직하여 통일교육교과로 만드는 방안은 현재의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생각해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평러다임 통일교육을 위해 독립된 교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도덕과나 사회과 모두 민주시민교육 등과 같이 추상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통일교육을 하위영역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교과를 통일교육 교과로 재구성하는 것은 일정부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교과정체성이나 교사의 전문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게 되면 도덕과나 사회과와는 관련이 없지만 의미있는 통일교육 내용들이 교과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어과나 예체능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 각종 통일관련 교재들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도 중요도에 따라 자유롭게 신설되는 통일교육교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교과는 학교현장에서 신평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새로운 교과를 신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통일교육교과가 통합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어려움은 더해진다. 전통적인 교과영역이나 독립된 학문영역에 바탕하여 신설되는 교과는 기존의 교과체계나 학문체계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지만 통합적인 성격을 띤 통일교육과정은 기존의 교육과정을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적인 통일교육교과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기 보다는 통합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제시를 통해 향후 개발되는 통일교육교과의 밑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통합교과는 통합적으로 조직하고자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 교육내용에 따라 통합교육과정의 이론은 교과중심교육과정, 경험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과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교육과정이론들에 바탕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유형의 통합교과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교육과정유형에 따른 통합교육과정모형>

	교과중심 통합교과		학문중심 통합교과		경험중심 통합교과	
교육과정유형	교과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과정		경험중심교육과정	
교육내용	교과		학문		경험	
통합교육과정모형	상관형	광역형	다학문적	학제적	중핵형	활동중심
내용조직범위	통일 관련 교과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예체능과 등)		통일교육 관련 학문 (정치학, 국제관계학, 사회학, 역사학 등)		통일교육 관련 교과 및 학문	

## 2) 통일교육을 위한 관련 교과의 체계적 조직

통일교육을 위한 핵심교과가 신설되더라도 이것만으로 학교통일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교육은 한 두개의 교과영역에서 다루어지고 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도덕과나 사회과 이

외의 일반교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과들 중에는 도덕과나 사회과와는 달리 교과의 교육목표나 내용영역에서 직접적으로 통일교육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교과의 특성상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교과들이 많이 있다. 국어과에서는 남북한의 언어나 문학에 대해, 미술과에서는 북한 미술을, 음악과에서는 북한의 음악을 다루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현장에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들 내에서 통일교육 관련내용이 체계적으로 조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교과내에서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과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에너지 교육이나 안전 교육 등과 같은 위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각 교과는 통일교육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과내에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교과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교과간 협의가 강화되어야 한다. 각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통일교육 관련 교과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교과에서 다루어져야할 통일교육의 범위와 계열에 대한 협의체의 협의 내용이 교과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통일관련 교과의 교육의 재조직

학교의 교육적 실천은 보통 두 가지의 기준을 따르게 된다. 첫째, 법령에 의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고, 둘째, 중앙 또는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이 수시로 생산해내는 이른바 ‘교육시책, 중점사업, 개혁방안’ 등과 같은 행정시책 또는 행정지시이다. 교육과정은 일정기간 효력을 유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닌 고시 문서로 제시되지만 행정시책 등은 공문서, 회의, 전화, 전송 등의 수단을 통해서 수시로

학교에 시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과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나 교과와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각 영역별 기본 운영방향이나 시간 배당에 대한 근거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교과와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교육과정보다는 행정시책에 따르게 되고 시달된 행정시책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는 학교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과와 교육과정의 교과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구체적인 운영방향이나 교육내용이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즉 교과와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틀에서는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침에 바탕하여 단위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실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위학교의 교과와 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계획’의 형태로 수립된다.

따라서 교과와 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서는 단위학교에서 수립하는 학교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하면 된다. 물론 학교교육계획을 재조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정까지 할 필요가 없으며,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지침을 시달하거나 단위학교에 대해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통일교육을 위한 교과와 활동의 재구성 방안은 특별활동영역과 재량 활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특별활동 관련 교육과정의 체계화

특별활동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주로 계기교육, 행사활동, 체험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각각의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통일교육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계기교육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기교육은 학생 전체에 대해 동일한 내용 및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전교생들에게 계기교육을 위한 유인물을 나누어 주거나 교장 선생님 훈화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전교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기교육방법은 유인물을 만드는 교사의 통일관이나 훈화를 하는 교장선생님의 통일관이 계기교육 내용에 반영되어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통일교육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유인물을 만드는 교사나 교장선생님들이 학생들이 현재 통일교육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 또한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패러다임에 바탕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책임있는 교육기관에서 실패러다임에 바탕한 계기교육자료를 만들어 배부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담겨져 있는 표준적인 계기교육자료가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계기교육자료를 개발함에 있어 학교급과 학년을 고려해야 한다. 즉 교과교육과정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통일교육내용과 적절히 조화된 계기교육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셋째, 계기교육자료들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가정통신문 등과 같은 유인물 형태의 계기교육자료들은 현재와 같은 멀티미디어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적 감흥을 불러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넷째, 계기교육방법이 다양하게 변화해야 한다. 계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자료 배부, 시청각 자료 상영 등의 일방적인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HR 시간이나 아침자습시간 등을 이용하여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 2) 행사활동

현재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활동이 통일교육에 있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행사활동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바탕한 행사들과 반공을 주장하는 단체들에 의해 주최되는 반공 웅변대회, 글짓기 포스터 대회 등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학교통일교육 행사가 원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행사의 성격과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 행사임이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행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이 갑자기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3년까지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나의 주장발표대회, 글짓기, 포스터 대회가 2004년 부터는 ‘통일안보’를 위한 나의 주장발표대회, 글짓기, 포스터 대회로 성격이 변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관련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홍보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

둘째, 행사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는 행사에서 벗어나야한다. 통일안보를 위한 나의 주장발표대회, 포스터대회, 글짓기 대회 등은 수상을 목적으로 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벤트에 그칠 뿐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전체의 행사가 되기 어렵다. 만약 통일관련 행사들이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에 그친다면 통일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웅변대회, 포스터, 글짓기 대회의 반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나의 주장발표대회, 포스터대회, 글짓기 대회 등 소수의 학생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행사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통일의 날’ 등

과 같이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3) 체험활동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관련 체험활동이 체계적으로 재구성되기 위해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견학 대상이 되는 통일관련 전시관이나 교육시설의 전시 내용이나 교육프로그램이 통일교육에 대한 신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상당수의 전시관이나 교육시설들이 신패러다임이 제안되기 이전에 만들어져 통일교육에 대한 신패러다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도교육청 단위로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히 전시관이나 교육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체험활동이 짜임새 있게 구성되기 어렵다. 전시관이나 교육시설은 주로 1시간 내외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자기 지역 내의 통일관련 시설이나 사적지 등을 연계하여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생들의 수련활동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초등과 중등학교 수련활동은 다양한 주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심신 수련의 차원을 넘어 신패러다임에 바탕한 통일교육이 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수련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학교에서의 교과교육차원에서는 담아내기 힘든 통일교육 활동들을 수련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몇몇 수련원에서는 몇몇 통일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1박 2일이나 2박 3일의 수련활동 기간 전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체험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나)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중 교과 재량활동은 교과영역과 관련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창의적 재량 영역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재구성이 가능하다. 창의적 재량 영역에서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창의적 재량시간에서 일정부분이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정시간을 통일교육을 위해 배정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침을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학교통일계획을 세울 수 있다.

둘째, 창의적 재량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mini-course’<sup>15</sup>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다. ‘mini-course’는 1주-4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통일과 관련된 특정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mini-course’는 다음과 같이 교과교육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시사적이고 논쟁적인 주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6.25 전쟁	6.25전쟁은 남침인가 북침인가? 정전협정을 유지할 것인가?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인가?
북한의 실상	북한은 세금이 없는 나라인가? 북한 주민들을 평등한 권리와 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남한 사회의 갈등	남남갈등의 원인과 해소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닌 탈북자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것인가?

<sup>15</sup> ‘mini-course’란 1학기 혹은 1년 이상의 단위로 만들어지는 일반적인 교육과정과는 달리 1개월 혹은 1~2주 등으로 짧은 기간을 단위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 나.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개선

### (1) 학교통일교육 목표의 일관성 유지 및 명료화

신패러다임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는 남북간의 이해·화해·협력을 통한 공존과 번영을, 궁극적으로는 평화정착·통일·평화의식 확립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수준과 양태의 목표는 물론 한반도와 민족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전한 안보의식과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는 결국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으로 수렴될 수 있는데 이러한 목표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순서와 위계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북한의 실태 및 생활상 비교</li> <li>·문화상대주의적 관점 견지</li> <li>·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류와 화해의 중요성 이해</li> <li>·남북한 상호군축의 이익 파악</li> <li>·공존과 번영에 대한 기대와 의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 고취</li> <li>·한반도 주변정세 이해</li> <li>·건전한 안보의식 함양</li> </ul>

여기서 순서를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 순으로 제시한 것은 결코 안보교육의 중요성이 다른 것보다 작기 때문은 아니다. 다만, 통일교육의 실시과정에 있어서 안보를 먼저 강하게 제시할 경우 북한문화 이해나 평화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경계선을 설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존재에 대한 인정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가능성과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안보를 소중히 해야 함을 강조하는 순서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도가 아니라 이와 같은 절차상의 순서는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의 주안점을 정립



하는 데 있어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문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도 맥이 닿아 있다. 다문화주의의 규범적 의미는 ‘서로 다른 문화들에 의한 인정과 정의로운 공존’을 포함하고 있다. 인종이나 종교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한도 현재 이념과 사상의 차이로 인한 분단에서 비롯된 문화적 이질감을 많이 겪고 있다. 통일교육은 그러한 남북간 차이의 실태, 근본적인 원인, 해소 방안 등에 관하여 이성적인 접근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남북한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 문화를 소재로 삼아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교육이 맹목적인 상대주의로 귀결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수정할 수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한편, 면담에 참여한 서울 Y 중학교의 도덕과 P 교사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북한 바로알기’에서 ‘문화상대주의적 태도 함양’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전에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북한 바로알기’가 주요한 코드였던 적이 있었다. 물론 지금도 반공, 안보 위주의 통일교육과 비교하면 북한 바로알기 교육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체제 경쟁이 일정정도 판가름 나고,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대해 한편으로는 거부감을, 한편으로는 동정심을 낳게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 바로알기’ 교육은 그 한계에 부딪혔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남북한 간의 교류의 활성화와 이후 통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 상호간에 차이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나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서울 Y 중학교 도덕과 교사).

둘째, 평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단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와 기간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폭력

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군축 논의와도 관련지을 수 있다. 군축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신뢰를 쌓는 것이고 그것은 말뿐이 아닌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남북한 사이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핵 개발, 신무기 추가 구입 등의 문제는 매우 모순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통일교육은 반전(反戰), 군축, 평화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의 통일교육은 곧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셋째,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사이의 노력이 우발적 변수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튼튼한 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수많은 교육행위들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보가 뒷받침되어 있다면, 때때로 돌발 상황이 생긴다고 해도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의 원칙을 견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의 진정한 성과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평화교육 측면의 통일교육과 안보교육 측면의 통일교육은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2) 목표의 구체화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명료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목표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학교’ ‘통일’교육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굳이 ‘통일’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목표나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는 교육목표보다는 ‘학교’라는 공간과 ‘통일’이라는 주제가 좀더 부각될 수 있는 학교 통일목표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하여 기존의 통일교육목표 일반 및 학교통일교육 목표를 참고하여, 단위학교에서 쓸 수 있는 좀더

구체화된 학교통일교육목표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통일교육 목표 (일반)	학교 통일교육 목표 (현행)	단위 학교 통일교육 목표 (예시)		
		영역	주안 점	목표 진술
가.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판단 능력 배양 나. 통일의 필요성 인식과 통일의지 확립 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 이질성 극복 라. 남북관계의 이종성 및 안보와 통일의 균형적 인식 마. 통일국가에 대한 가치관 정립 바. 통일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통일 준비	가.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 나.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다. 통일·북한 관련 지식체계 구성 및 올바른 인식태도 형성 라. 화해협력과 상호 존중의 자세 확립 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 및 민주시민의 함양 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지식 이해	문화	남북한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실태 및 차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평화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의 유익함과 정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
			안보	통일과 관련한 한반도 주변의 정치적, 역사적 맥락 및 안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기능 활동	문화	남북한 사이의 문화적,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평화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안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국내 외적 요인에 대한 실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가치 태도	문화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 실현에 대한 의지를 높인다.		
	평화	학생으로서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한다.		
	안보	자유민주주의적 질서와 평화를 위해 안보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기른다.		

앞서 논의한 문화교육, 평화교육, 안보교육의 세 측면을 통일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그 각각의 목표 영역에 대해 지식·이해면, 기능·활동면, 가치·태도면으로 세분하여 목표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목표진

술은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민주시민의 자질함양이나 갈등대처 능력 등에 비해 보다 분명하게 ‘통일’ 관련 내용임을 드러내고 있고 일부 목표진술 속에서는 ‘학생’으로서의 특수성과 ‘학교’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의 목표가 지금보다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내용상의 주안점(문화, 평화, 안보)과 행동영역의 측면(지식, 기능, 태도)이 골고루 다루어지는 학교통일교육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스펙트럼의 다양함은 때로는 궁극적인 상위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적인 하위의 목표나 구체적 방법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현재의 상황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 출발점에 있어서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내용구성 관점의 변화 1: 남북간 화해, 협력, 통일의 중요 강조

그동안 통일은 ‘옳음’의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우리 민족이 마땅히 이루어야 할 과제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그동안의 통일교육도 다분히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반공은 당연히 ‘옳은 것’으로 여겨졌고 북한과의 대결은 곧 안보의 문제로 연결되었으며 국가 수호의 차원에서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그 이후의 극심한 남북대결의 시대를 주로 살아온 기성 세대들은 여전히 북한을 극복의 상대로, 북한과의 대결을 ‘옳음’으로, 통일을 당위의 문제로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의 통일교육 내용 서술에 있어서 일관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러한 기성세대의 특성이나 통일의 본질적 속성에 비해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이산가족상봉, 남북통일축구 등을 가까이서 접한 세대들은 통일을 당위의 문제보다는 이해관계의 문제, 필요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의식이 강하다. 이것은 ‘옳음’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좋은’의 관점이다.

통일은 물론 옳은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다. 통일의 ‘좋은 점’을 조명한다고 해서 ‘옳음’의 중요성을 작게 보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통일교육의 출발점에 대한 접근방식의 무게중심이 ‘옳음’ 쪽에 있었다면, 이제 조심스럽게 ‘좋은’ 쪽으로 옮겨 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가져올 혜택만을 오로지 강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당위성보다는 유익함과 필요성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좀더 친숙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일의 유익함을 강조하는 것은 왜 화해하고 협력해야 하는지, 궁극적으로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공해 준다. 막연하게, 그리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만 가르치게 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지적인 분석과 정서적인 공감을 끌어내기 어렵다. 남북한 사이에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통일로 한걸음씩 나아가갈 때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통일에 대한 동기화는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과 관련하여 서울 Y 중학교의 도덕과 P 교사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전쟁 자체의 위험함, 피해와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안보교육의 비중은 좀 줄이고 통일교육과 더불어서 반전교육, 평화교육을 연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교육도 우리의 우월감이나 체제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내용,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보다는 상호이해와 존중을 위한 내용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이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2) 내용구성 관점의 변화 2: 학생들의 관심과 생활세계 강조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고 할 때, 하위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기성세대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예를 들어 북한의 통일정책, 정부기구, 경제상황, 국제관계 등에 대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필요성도 있고 의미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북한 및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를 높이고 지적 호기심과 감정이입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부터 다룰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수많은 차별, 차이, 갈등의 양상의 하나로서 통일에 접근하는 시도도 의미가 있다.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과 차이와 갈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보다 가까이는 학생간, 남녀간, 빈부간 차별과 차이와 갈등, 기성세대와의 차별과 차이와 갈등 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갈등의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역간, 종교간, 민족간,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차별, 차이, 갈등 등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도 이와 같은 차이와 갈등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즉, 남북간, 이념간 차이와 갈등 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헌법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매우 숭고한 가치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일교육’마저 지나치게 엄숙하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오

히려 통일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다소 상대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을 그 자체로 너무 무겁게 다루기보다는 ‘차이 및 갈등 해소와 공존’을 지향하는 관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기존의 도덕이나 사회교과에서 처럼 북한문제,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피부로 경험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양상 속의 하나로서 남북갈등, 이념갈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통일문제를 끌어낼 수 있다. 이것은 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보다 커다란 틀 속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적 맥락과 관련지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양상은, 물론 갈등 당사자들이 가진 힘의 차이에서도 비롯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로 다름’ 그 자체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을 ‘틀림’으로 간주할 때, 다시 말해서 ‘나와 다르면 틀린 것이다’라고 해석할 때 차별과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은 바로 그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용할 수 있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한다.

통일문제도 사실은 남북간의 오랜 갈등과 긴장, 남북간의 차이와 대립, 남북 내부의 이념갈등, 한반도 주변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을 알자,’ ‘통일을 하자’고 외치기보다는 우리 사회 내부,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차이와 갈등의 모습들을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연습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화해 교육은 관념적으로 남북이 화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입하는 데서가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차별로 대하는 생활문화를 바꾸어 가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관점은 결국 학생들의 일상적 관심사와 생활세계에 좀더

<sup>16</sup>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이겨레 살리는 통일』(서울: 전국

가까운 통일교육을 시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내용요소의 재구성

학교 통일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일교육내용에 대한 재조직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의미와 흥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통일은 멀고 먼, 추상적인 이상향으로 느껴지기 쉽다. 즉,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필연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문화와 생활과 같은 일상적이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이념 중심의 기초에서 일상적인 생활세계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념과 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에 앞서 충분히 정서적 공감대를 고취할 수 있는 생활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이해와 교류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북한과 통일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접근을 넘어 우리 안팎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틀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고 한반도의 안보를 지켜 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내용요소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초중등학교 전과정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과 요소를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다.

---

교직원노동조합 출판부, 2001), p. 78.



영역	내용 요소	주의할 점
남북한 문화와 체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간의 사회적, 심리적 이질감의 현실</li> <li>· 남한과 북한의 공통점 및 차이점 찾기</li> <li>· 북한 지도층과 주민의 생활 비교와 이해</li> <li>· 남북한 사회의 제 측면 비교</li> <li>·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도입</li> <li>·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의 우월감, 북한에 대한 거부감, 남북간의 이질감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한다.</li> <li>· 감성적 측면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동질성 회복 노력을 강조한다.</li> </ul>
평화 정착과 통일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 속에서의 갈등 및 평화의 의미</li> <li>· 갈등과 평화의 의미 확장</li> <li>· 남북한 사이의 평화 부재가 낳은 결과</li> <li>· 평화통일의 유익함과 정당성</li> <li>· 평화를 방해하는 내적, 외적 원인</li> <li>· 남북갈등에 대한 합리적 처방</li> <li>· 평화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갈등과 평화의 의미를 국가와 민족, 세계 차원으로 확대, 전이할 수 있도록 한다.</li> <li>· 통일을 둘러싼 남한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한다.</li> </ul>
민주주의와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li> <li>· 민주주의와 통일의 관계</li> <li>· 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추진</li> <li>· 민주주의와 안보의 관계</li> <li>· 한반도 주변정세와 안보</li> <li>· 건강한 안보관에 입각한 통일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신념이 민주주의임을 분명히 강조한다.</li> </ul>

한편, 다음 사례는 인천광역시 도덕교과교육연구회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현행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재구성한 표이다. 이 표는 새롭게 구성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통일교육의 방법까지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것은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통합적인 요소를 많이 추구하는 초등학교의 특성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다.

학년	단원	제재명	현행 교과내용	재구성한 내용
3	5. 우리의 소원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의 아픔을 그린 자료 보고 느낌 말하기</li> <li>·북한을 바로 알기 위한 질문지 풀기</li> <li>·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을 자신의 문장으로 표현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기</li> <li>·이산가족의 아픔</li> <li>·부산아시아게임 남북공동응원</li> <li>·생활, 문화면에서 남북한의 비교 질문</li> <li>·‘통일’에 대한 마인드 맵</li> <li>·‘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한 빙고게임</li> <li>·통일의 필요성 이해</li> </ul>
		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에 대한 노래 듣고 느낌 말하기</li> <li>·통일을 소망하는 노래 만들어 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을 이루려는 마음 다지기</li> <li>·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li> <li>·‘발해를 꿈꾸며’ 노랫말 알아보기</li> <li>·‘국토분단’, ‘남북통일’로 4행시 짓기</li> <li>·통일후의 모습을 그린 가상뉴스 만들기</li> </ul>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스크랩북 만들기</li> <li>·통일후의 모습 등을 다룬 가상뉴스 만들기</li> <li>·통일 관련 현장체험학습하기</li> </ul>	
4	5. 내나라 내조국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안보의 중요성 알기</li> <li>·우리 민족의 국가안보 능력에 대해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 알기</li> <li>·서희와 안용복의 사례를 통한 나라사랑 이해하기</li> <li>·‘서해교전’ 사례의 분석</li> <li>·어린이들의 입장에서 나라사랑에 대한 반성과 각오 정리하기</li> </ul>
		나라를 위하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화글을 읽고 안보에 대한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기</li> <li>·동시를 읽고 느낌 이야기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라를 위하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실천하기</li> <li>·나라를 위하고 지킨 분들 사례 조사</li> <li>·‘안중근 의사’ 역할놀이 하기</li> </ul>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중근 의사’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길’ 역할놀이하기</li> </ul>	

학년	단원	제재명	현행 교과내용	재구성한 내용
5	9. 한마음으로 평화통일을	평화통일의 당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예술단 교류의 의의 알기</li> <li>·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li> <li>· 통일을 위해 준비할 일 알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의 당위성 알기</li> <li>· 남북 분단의 고통 알기</li> <li>· 베트남과 독일의 통일 사례와 그 이후의 모습</li> <li>· 남과 북의 현실</li> <li>·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알기(통일 서명록 쓰기)</li> </ul>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남과 북 사이에 일어난 일</li> <li>· 통일이 되면 좋은 점 알기</li> <li>· 북녘 땅을 오갈 수 없는 이유 알기</li> </ul>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고 나의 의견 적어보기</li> <li>·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 알기</li> <li>· 통일을 위해 실천할 일 찾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화통일에 대한 신념과 실천</li> <li>· ‘도전 통일벨 퀴즈’ 게임하기</li> <li>· ‘우리의 소원’ 노랫말 개사해 보기</li> </ul>
6	8. 평화통일의 길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나라의 달라질 모습 알기</li> <li>·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li> <li>·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모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조국의 미래 모습 알기</li> <li>· 통일 조국의 국기와 국화 그려보기</li> <li>· 한반도를 통일 지도에 그리고 조사 내용을 붙이기</li> </ul>
		평화통일의 뜻을 지니고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과 고향을 잃은 슬픔 알기</li> <li>· 달라진 언어생활에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어야겠다는 마음 갖기</li> </ul>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별로 주제 토론하기</li> <li>· 비무장지대에 평화의 마을 만들기</li> <li>· 신문기자가 되어 북한의 모습을 취재해 보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실천의지 다지고 활동하기</li> <li>· 통일 신문 만들기</li> <li>· 모둠원끼리 신체 이용하여 ‘통일’ 글자 만들기</li> <li>· 평화의 마을 꾸미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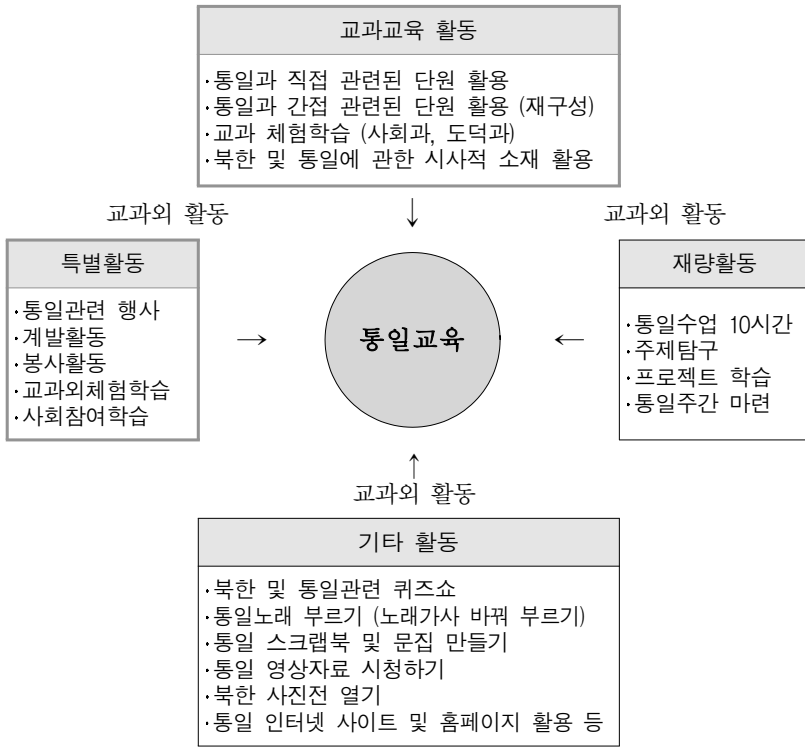
<도덕과 통일교육 관련 내용 재구성 사례>

## 라. 학교통일교육 방법의 개선

### (1) 방법의 다원화 및 다양화

#### (가) 통일교육 방법의 ‘다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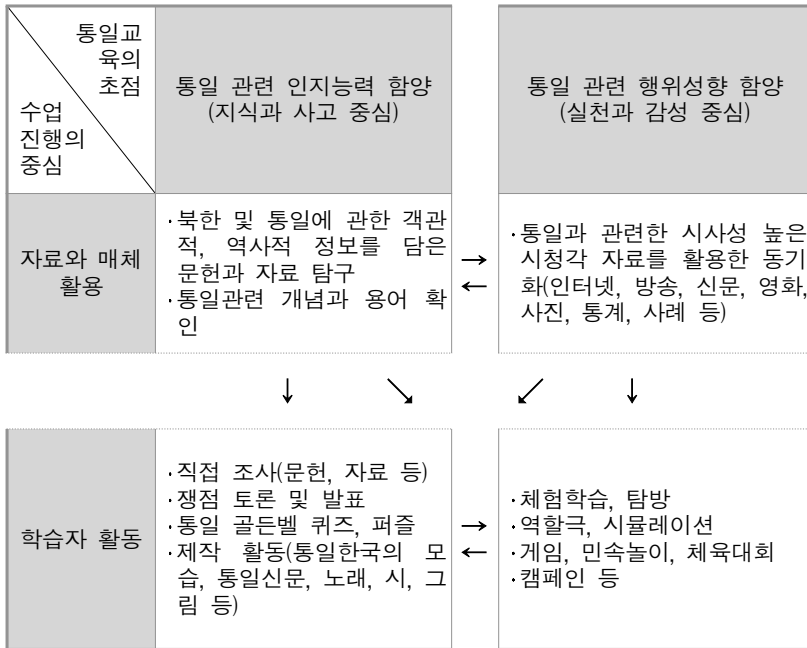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통일교육은 현행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계획’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실천’과 ‘반성’, ‘평가’의 수준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통일 자체의 필요성, 시대적 요구, 학교와 학생의 다양한 관심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도덕과·사회과라는 교과교육, 계기교육과 같은 특별활동 등의 방법에 치우쳐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연구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통일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고민이 실천적 노력으로 보다 많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학교의 실천 사례가 보고서 형태로만 보관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일반학교에도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차원들이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나 교사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지원이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정 시기에 특정한 통일교육 결과물을 내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과거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나 방식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간섭은 줄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의 경우 2년 또는 3년 마다 각각 10주씩 재량활동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을 상위교육기관에서 만들어서 각 학교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의 결과물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평가는 오히려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나)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

통일교육의 행동영역 목표를 크게 통일에 관한 인지능력 함양과 통일에 관한 행위성향 함양으로 보고, 수업이나 활동에 있어서 자료와 매체가 중심이 되느냐 학습자의 활동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습방법 표를 하나의 예로 제안하고자 한다.



위의 표에 예시되어 있는 통일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느슨하게 유형화해 보았는데 이것은 엄밀한 구분은 아니다.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듯이 학습자의 수준 및 수업의 목표와 내용의 맥락에 따라 교육적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그 경계는 얼마든지 넘나들 수 있으며 서로 조합하고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료의 활용과 학습자의 활동이 단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지 능력과 행위 성향이라는 목표가 동시에

고려될 수 있으며 또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예로 든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이 통일교육에 맥락에 따라 융통성있게, 그리고 어느 한쪽을 강조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 (2) 학생 참여형 수업의 확대

통일교육 방법에 있어서 차원의 다원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를 보다 강조하는 수업의 실제 사례들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수업 사례와 특별활동 및 완전히 재구성된 통일교육 활동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교과 내 단원’을 활용한 초등교육 사례<sup>17</sup>

단 원	5.우리의 소원				
본시주제	분단의 아픔과 통일의 필요성 알기				
차 시	1/2(40')	교과서	82-87, 생길:76-87	교수학습모형	시청각활용모형
학 습 목 표	분단된 남북의 현실과 아픔을 알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자료 활용 계획	ICT자료(2002 부산아시안게임 동영상, 북한의 경치,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동영상 자료), < <a href="http://uniedu.go.kr">http://uniedu.go.kr</a> >				

<sup>17</sup> 인천 K 초등학교 3학년 도덕수업에 활용된 사례이다.

단계	학습의 호름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덕적 문제 사태 제시	동기유발  목표확인 및 문제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동영상 보여주기</li> <li>○ 햇볕 정책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의견과 이유를 들어본다.</li> <li>○ 화면을 보고 변화된 생각이 있으면 발표한다.</li> <li>◎ 북한의 아름다운 경치를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고 우리가 북쪽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지 못하는 까닭 알아보기</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단된 남북의 현실과 아픔을 알고,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li> </ul> </div>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햇볕 정책'에 대한 동영상</li> <li>◆ 북한의 경치에 대한 동영상</li> <li>&lt;<a href="http://uniedu.go.kr">http://uniedu.go.kr</a>&gt;</li> <li>◆ 파워포인트</li> </ul>
관련 규범 찾기	기본활동 1  기본활동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 84-87쪽과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하기</li> <li>○ 선경이가 백두산을 우리 땅이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 알아보기</li> <li>◎ 2002 부산아시안 게임에서 남북 공동 응원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기</li> <li>○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자신이 통일을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 생각해 보자.</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산가족 상봉을 담은 자료</li> <li>◇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li> </ul>
규범의 의미와 타당성 찾기	기본활동 3  보충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 보자.</li> <li>○ 통일과 관련된 낱말을 이용하여 빙고게임을 해 보자.(과외활동: 낱말퍼즐)</li> <li>○ 통일이 되면 어떤 점들이 좋고 어떤 점들이 나쁜지 발표해본다.</li> <li>○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알아보기</li> <li>◎ 2002 부산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응원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다시 보여준다.</li> <li>○ 아시안 게임에서 남북한이 같이 응원하는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하기</li> <li>○ 나는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 살펴 보고 통일에 대해서 변한 생각 발표하기</li> </ul>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과 관련된 마인드맵과 빙고놀이로 통해 통일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li> <li>◆ 북한 알기 학습지</li> </ul>
실천 동기 강화	학습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에서 현재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알기</li> </ul>	3	



## (나) ‘교과 단위 이외의 소재’를 활용한 통일교육 사례<sup>18</sup>: 논쟁 문제

### 학습 적용

통일문제에 주마간산식 접근을 하고 있는 현행 사회 교과서만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내용의 재구성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적어도 3~4차시 정도의 시간도 필요하다. 학기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을 따로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을 앞둔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급에서 1달에 4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HIR 시간을 이용하여 담임교사가 실시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 입학 위한 내신성적 산출 때문에 보통 11월 중순이나 하순이면 사실상 정상적인 수업은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에 통일교육을 실시해 볼 수도 있다.

### 1) 수업 설계: 갈등 양상 제시(3차시로 구성)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차별과 갈등 양상들을 구분해 본다면, 대체로 다음의 세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종교간 갈등이나 소수에 대한 차별 등 훨씬 다양하고 세분화된 차별과 갈등 양상을 찾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해도 좋다.

구분	갈등 양상
국내	지역간 갈등, 빈부간 갈등, 남녀간 갈등 등
민족	남북간 갈등, 이념 갈등 등
세계	국가간 갈등, 인종간 갈등, 민족간 갈등 등

<sup>18</sup> 서울 Y 중학교의 2~3학년 사회수업에서 활용된 사례이다.

이 중 어느 하나의 갈등 해결이 다른 갈등 해결에 대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남북화해와 교류가 증진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 나라 내에서 동서갈등은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통일교육을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그 외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심각한 갈등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학생들을 6개 조로 나누어 각 차시마다 2개조가 미리 갈등 양상을 조사하여 수업시간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1차시에서는 지역갈등,<sup>19</sup> 2차시에서는 남북갈등·이념갈등, 3차시에서는 민족갈등·인종갈등의 사례와 원인을 각각 조사하여 준비한다. 그리고 수업 진행은 교사의 도입과 문제제기, 학생들의 조발표와 토론, 교사의 정리 순으로 이어진다. 학생들의 토론 속에는 논쟁문제 학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석 과정, 즉 갈등 해결을 위한 개념의 명확화, 경험적 사실의 확인, 가치갈등 논쟁, 대안 모색과 결론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주로 ‘공간’이라는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수업을 설계해 보았지만 반드시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동일한 범위의 공간 속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다양한 차별과 갈등의 사례를 다루는 미시적인 접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 2) 수업 단계

- |             |           |
|-------------|-----------|
| ㉠ 도입        | ㉡ 조발표     |
| ㉢ 문제제기      | ㉣ 개념의 명확화 |
| ㉤ 경험적 사실 확인 | ㉥ 가치갈등 논쟁 |
| ㉦ 대안모색 및 결론 | ㉧ 정리      |

<sup>19</sup> 여기서 반드시 지역갈등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남녀갈등이나 빈부갈등과 같은 문제도 다루어 볼 수 있다.

### 3) 수업모형 예시

㉠ 1차시: 지역 갈등(지도안은 생략)

㉡ 2차시: 남북 갈등, 이념 갈등<sup>20</sup>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지도상의 유의점	진행
도입 문제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입 자료: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 노래와 가사의 주요 부분</li> <li>• 북한 하면 떠오르는 것은?</li> <li>•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li> </ul>	노래의 랩 부분은 잘 안들리므로 따로 읽어 주거나 복사해 줌	교사
조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갈등, 이념갈등의 사례와 원인 발표</li> </ul>	사전에 조사	학생
보충 설명 문제 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해설: 우리 사회의 통일논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li> </ul> </li> </ul>		교사
개념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이 된다면 그 모습은 어디까지인가?</li> <li>• 남북통일정책의 차이는?</li> <li>• 통일시기는 언제쯤인가?</li> </ul>		발표조 학생
경험적 사실의 확인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의 현상태는 대결인가, 화해인가?</li> <li>• 남북의 국방비는 각각 얼마나 되는가?</li> <li>•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상봉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무엇인가?</li> <li>• 예상되는 통일비용은?</li> </ul>	발표조에게 미리 핵심 질문 배포	발표조 학생
가치갈 등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을 지지/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li> <li>• 통일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은 무엇인가?</li> <li>• 못산다고 차별받는 것은 정당한가?</li> <li>• 1민족은 꼭 1국가를 이루어야 하는가?</li> </ul>	필요할 때 교사가 질문 제시 및 답변 유도	발표조 학생
대안모 색 및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분단의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li> </ul>		발표조 학생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에 대한 정리 및 평가</li> <li>• 느낌 발표</li> </ul>		교사 학생

㉢ 3차시: 민족 갈등, 인종 갈등 (지도안은 생략)

<sup>20</sup> 여기서의 이념갈등은 남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통일논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다) 특별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사례

전라남도 교육청의 통일교육 연구학교였던 M 초등학교에서는 연간 배당된 특별활동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 활발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음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영역	소영역	학년	시간	주 제	내 용
자치 활동	협의 활동	1~4	1	즐거운 소풍	- 소풍가서 지킬 일 - 소풍지에서 오락활동 계획 세우기 - 북한 어린이들의 소풍(들놀이)
	"	1~6	1	이웃돕기	- 불우 이웃 돕기 방법 협의 - 학급에서 어려운 친구 돕기 - 북한 어린이 돕기 방법 협의
	"	"	1	여름방학 생활	- 1학기 동안의 학교 생활 반성 협의 - 여름 방학 중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협의 - 북한 어린이들의 방학생활에 대하여 알아보기
	역할 분담	"	1	운동회와 나	- 운동회에서 자기가 할 일 - 즐거운 운동회를 위해 필요한 일 - 북한의 운동회
적응 활동	절제	"	1	물자 사용 절제	- 물자를 아껴 써야 하는 이유를 알고, 생활 주변에서 아껴 써야 할 물건 찾아보기 - 북한의 물자 부족
	근검 절약	"	1	학용품 아껴 쓰기	- 학용품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기 - 북한 어린이들의 어려운 현실과 연계지도
	기본 생활 습관	3~6	1	친구와의 문제	- 친구들과 생활 속에서 생기는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심리극을 한다. - 북한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할 지 역할극 해보기
	배려	3~6	2	장애우들 의 삶 체험하기	- 장애우 대하는 에티켓 익히기 - 눈이 불편한 장애우 체험하기 - 팔이 불편한 신체 장애우 체험하기 - 평화교육
	진로 활동	5~6	1	직업 정보 전시회	- 북한에서 인기있는 직업 - 같은 교과를 좋아하는 학생들끼리 장래의 직업을 찾아보고 일의 세계에 대한 정보 교환하기

영역	소영역	학년	시간	주 제	내 용
행사 활동	학예	1~6	1	통일 노래 부르기	- 통일 노래 부르기 대회 - 노래 가사바꾸어 부르기 대회
			1	통일 웅변대회	- 통일을 염원하는 주제로 웅변대회 실시
			1	북한어린이 그림 전시회 및 그림 편지 쓰기	- 북한어린이 그림 전시회 - 그림편지 쓰기
	1		6·15 남북정상 회담 계기교육	- 남북 정상회담 관련 계기교육 - VCR영상자료 시청	
의식					
봉사 활동	위문	5~6	2	동백원 봉사활동	- 여수 동백원 봉사활동 - 장애우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애기

### (라) 통일주간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통일교육 사례<sup>21</sup>

매년 6월말이나 7월초는 초등학교에서 1학기를 마무리하고 방학을 준비하는 시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의 집중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 경우 국어, 사회, 도덕 등 여러 교과와 여러 시기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통일교육내용을 한 주 정도로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7월 한 주간을 학급의 통일주간으로 정하여 여러 교과 및 교과외 활동을 심도있게 실시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여러 교과와 교과외 자료를 통합·비교함으로써, 통일에 대해 교과나 시기에 따라 다소 다른 관점, 이를테면 앞서 이야기했던 반공이나 냉전적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다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sup>21</sup> 인천 I 초등학교 5학년 담임 P교사의 사례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2001), pp. 200~202.

1) 시기: 7월 첫주

2) 대상: I 초등학교 5학년 5반

날짜	활동 내용
첫날	'우리는 하나' 통일 주간 정하기
	통일에 대한 어린이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통일신문 스크랩 시작
둘째날	통일이 되어야 이유에 대한 토론
	이산가족과 장기수의 고통알기
셋째날	통일 그림책 만들기
	남북 분단의 원인 알기
넷째날	남북한 언어 비교하기
	통일 OX 퀴즈대회
다섯째날	통일 노래 배우기
	통일 노가바 대회
여섯째날	통일 글짓기
	미래의 통일신문 만들기

## 마. 학교통일교육 평가의 개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

### (1) 평가영역의 확대

#### (가) 평가영역의 확대

첫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 영역이 교과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육 영역으로 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외 영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교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라는 교육적 활동이 함께 이루어질때 교과외 교육활동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물론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소수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과외 교육을 통해 통일 교육을 접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교과교육과 연계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체계적인 교과외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단위학교차원에서 통일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구체적인 평가 실시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내 통일글짓기 시행계획>(예시)	
1. 주제	분단의 현실을 깨닫는 내용 남과 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내용 북한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 (단, 글짓기 제목은 자유 선정)
2. 작품 형식 및 원고 분량	운문 :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산문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3. 평가 방법	1학년 국어과 수행평가 반영 2학년 도덕과 수행평가 반영 3학년 사회과 수행평가 반영

## (2) 학생 참여 평가의 확대

둘째, 성적산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평가 이외에도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변화를 학생들이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학습자의 자기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물론 성적이 반영하기 위한 객관적인 측정은 교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이 통일교육과정에서 변화한 자신을 모습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교사가 평가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학습자가 스스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통일교육을 위한 자기평가지(초등학교용 예시)						
항 목	자기평가			우리모듬평가		
	잘 함	보 통	노력 바람	잘 함	보 통	노력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가하였는가?</li> <li>○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해왔는가?</li> <li>○ 친구와 협력해서 활동해 왔는가?</li> <li>○ 마지막까지 활동이나 작업을 계속하였는가?</li> <li>○ 계획한 것을 예정대로 끝마쳤는가?</li> </ul>						
○ 이번 수업을 통해 통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 이번 수업과 관련하여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러한 이유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일종의 자기평가(self-evaluation)가 필요한 것이다. 원래 자기평가란 학습영역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학습 과정이나 학습 결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에서의 자기 평가는 자신의 변화에 대한 체크리스트 작성이나 통일일기 쓰기 등의 방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적에 반영되기 보다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활동을 반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바. 교사 연수의 개선

### (1)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홍보 및 자율 연수 지원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기존의 통일교육과 무엇이 다른가에 관해 교사들에게 충분히 공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등학교의 도덕, 윤리, 사회과 교사들은 담당 교과가 통일교육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상



당수가 통일교육 연수를 받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방향과 내용의 정당성 및 타당성이 교사들이 공감할 만한 정도의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도덕과 교사나 사회과 교사를 중심으로 통일교육을 연구하는 자율적 교사 모임들의 연구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러한 노력에 대해 통일교육 관련 당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자율적 통일교육 연수와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연수 사이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양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구체화 및 접근 가능성 제고

실적쌓기가 아닌, 통일교육 연수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통일교육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 홍보에 있어서뿐 아니라 실제로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기존의 통일교육 연수와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수가 끝난 이후에도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와의 접촉(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교사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 연수에서 다루어졌던 다양한 내용과 방법들이 교실 수업에 보다 많이 적용되고 더 나아가 다른 동료 교사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소결론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은 교과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교과외 교육의 영역에서도 제대로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나아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교육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가장 시급한 것이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나 여러 형태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제시를 통해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제시하였다.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체계,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막연하게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으로만 인식되던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보다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실패러다임에 바탕한 학교통일교육을 완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은 학교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교사들의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뒷받침하는 토대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 IV

## 신패리다임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



## 1. 신패러다임 사회통일교육

### 가. 사회통일교육

통일교육지원법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이해된다. 즉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어야 하고 통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 및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통일교육은 통일교육의 부분영역이다. 사회통일교육은 우선 학교통일교육과 구별되고 다음으로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또는 공공부문에 대한, 즉 공무원에 대한 통일교육과 구별된다. 대표적으로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은 사회통일교육과정을 통일교육전문위원, 향군안보강사, 민방위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지도자, 통일교육단체지도자, 종교단체지도자, 여성단체지도자, 노동단체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과 함께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역시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현 통일교육지원법은 민간단체를 통일교육주체로 인정하고 통일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대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공공부문을 제외한 사회의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공공 통일교육기관과 민간통일교육단체에 의해 민주시민의식과 민족통일의식의 함양과 육성을 위해 수행되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 나.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

고정식 외(2004)의 선행연구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도 대두된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을 “통일지향 교육패러다임”으로 표현하며 사회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의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한 바 있다.<sup>22</sup>

- 교육의 원칙: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화해·평화와 같은 상호접근을 도와주는 교육
- 교육의 내용: 정치체제나 이념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생활문화의 교육
- 교육의 주체: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교육
- 교육의 내용과 방법: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내용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이에 근거하여 볼 때, 통일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패러다임은 남북간의 공존·화해·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원칙, 비이념적 교육내용의 확대,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조체계, 그리고 교육주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육방법으로 요약된다.

‘신패러다임’적 사회통일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본 장의 논의는 우선 통일지향적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동의하고 이를 신패러다임으로 수용한다. 즉 본 장의 논의는 신패러다임에서 표현되어야 할 새로움을 이론적 차원의 논쟁을 통해 재구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통일지향적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전개시키되 사회통일교육의 체계, 내용, 방법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을 탐구해 가면서 한 층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sup>22</sup>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98.

## 다.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과 과제

### (1) 체계상의 특수성과 과제

학교통일교육체계가 기존의 학교교육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와 달리, 사회통일교육은 새로운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체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시민단체 간, 그리고 민간시민단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통일교육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입장 차이와 민간부문 내에서의 시민단체들 간의 이념적 차이와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운영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교육은 독재와 개발의 시대를 거치는 동안 정부주도 형으로 수행되었고, 본질적으로 체제유지와 반공을 추구한 이데올로기 교육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선진민주국가에서와 같은 민주시민교육은 부재했었고 또 그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체계가 성립되거나 발달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민주화가 확대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그 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는데, 이는 민주적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곧 민주시민교육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 통일교육은 무엇보다 사회통일교육이 과거의 사회교육과 같이 정부주도로 시행되어서도 안 되고 강제성을 띠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에도 고려되었는데, 동법은 공공 교육훈련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지 않고 단지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사회통일교육을 시민단체에게만 일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의·협력하는 사회통일교육체계를 조직하여 제도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편에서는 민간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정부의 관리가 현재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고, 다

른 한편에서 시민단체간의 협의체계 역시 보다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통일교육의 내실을 이룰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야 한다.

## (2) 내용상의 특수성과 과제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함께 추구하고 추진한다.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과 민족공동체적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은 개인적 및 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통일교육을 초정권적 또는 초당파적인 민족적 과제로 시행하기 위해 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지도원칙과 실천방향을 규정하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매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2004년 통일교육지침서의 경우 북한문제의 이해, 북한의 이해, 북한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 남북관계 개선노력 및 국가안보, 통일국가의 목표와 방향, 통일을 위한 준비자세가 주요 내용체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지침은 사회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우선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 간의 차이에서 오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점이다. 특히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그 중에서도 민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통일교육에서는 통일교육지침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민간시민단체는 서로 상이한 가치와 이념 및 방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문제에서도 다양한 이견을 표방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통일관련 민간사회단체 중에서도 정부 통일정책에 찬성 지지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반대 거부하는 단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은 그 의도와는 반대로 형식적 틀로만 머무를 수 있고 심지어는 정부 또는 정권의 통일정책을 하달하는 식으로 간주되어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통일교육지침을 잘 수행하는 단체에게만 통일교육의 기회를 주고 지원 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의 통일문제에 대한 자율적 접근은 장려되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특히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체계는 기본적 교육내용을 제시함과 함께 단체별 자율적 교육내용을 허용하여 양자를 조합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그리고 단체별 교육내용의 차이는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수직적 협의체와 단체들 간의 수평적 협의체에서 상호협의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적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것과 통일우호적인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 및 안보관을 양성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조화시키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상이한 헌법 이념과 질서 하에 있는 1민족 2국가의 통합에서 오는 특수한 문제이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우선 독재 시대에 상처받은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복원해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냉전시대에 만연했던 통일 적대적 의식에 버금가는, 자유민주적 이념과 질서의 우월주의에 입각한 통일 냉소적 의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통일의 당위적 근거인 민족공동체 의식만 강조하여 자유민주적 시민의식을 양보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양 차원을 내용적으로 잘 조화시키지 못할 경우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체교육을 분리시켜 이중적 윤리관을 조장시킬 수 있고 양자간의 대립과 반목을 가시화시킬 수도 있다. 이른바 남남갈등으로 표출되는 현상의 근저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을 지침으로 작성하는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과 통일 지향적 민족공동체 의식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방법상의 특수성과 과제

사회통일교육은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 점은 사회통일교육이 교육의 수용성이 낮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교육을 수행할 전문교육인력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더욱이 사회통일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시민단체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국민적 남남갈등에 직면하여 민주시민교육과 민족통일교육을 통해 사회통합과 민족통일을 위한 정신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통일교육의 방법은 교육의 내용을 전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서 부차적으로만 간주되거나 교육방식을 다양화하는 수준에서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정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의 방법이 여전히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에서 구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수요자를 중심에 두는 전문적 교수법의 개발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

## 2. 사회통일교육 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 가. 통일교육원 중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을 위한 전문적 공공교육기관으로서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수호, 민족동질성 회복, 평화통일 지향을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대상을 보면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 남북교류를 수행하는 기업체, 그리고 단체지도자를 망라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은 특히 공무원의 통일교육 수요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현재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과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비롯하여 20개의 중앙부처소속 교육훈련기관, 15개의 각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 5개의 지방소방학교가 있는데, 통일교육원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 통일교육 위탁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장·단기 구분은 있어야 하지만, 2003년 기준 교육대상자 수를 놓고 볼 때 통일교육원은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32,276

명),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9,741명), 국세공무원교육원(27,125명), 중앙경찰학교(26,087명), 철도인력개발원(19,873명), 경찰종합학교(18,906명) 다음으로 교육수행규모가 큰 기관이다. 통일교육원은 또한 시·도 교육청의 교류와 협의 하에 각급 학교와 교육연수원의 통일교육 및 사회교육기관과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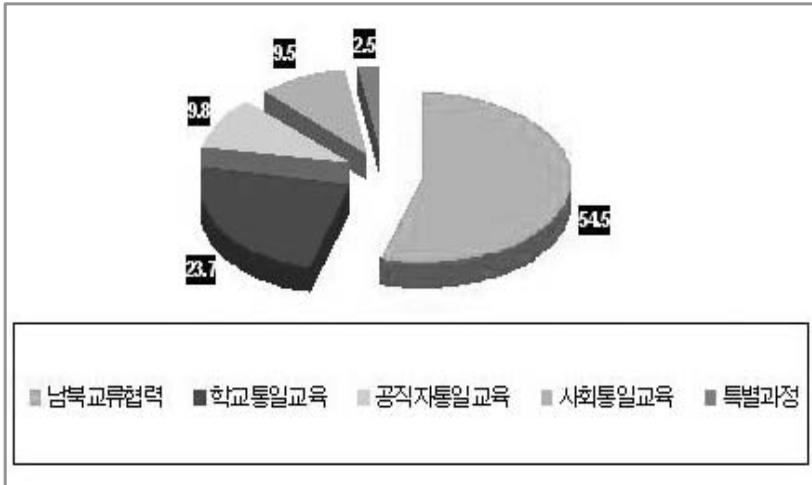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체계는, 아래의 <표 IV-1>과 <그림 IV-1>이 보여주듯이, 크게 사회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공직자통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별 비율을 볼 때 남북교류협력과정이 54.5%, 학교통일교육과정이 23.7%(원격교육과정 5.6% 포함), 공직자통일교육과정이 9.8%, 사회통일교육과정이 9.5%, 특별과정이 2.5%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이 주로 남북교류를 매개로 해서 수행되고 있는 문제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어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즉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 기본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교육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이를 포함하되 타 교육과정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원은 주어지는 교육대상자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피교육자 층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사이버교육의 시행으로 대체될 일이 아니고, 전문적 교수법의 개발과 응용을 통해 성취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1> 통일교육원의 2005년 과정별 통일교육계획

과정명	반명	교육기간	합숙여부	교육인원	학급인원	학급수	비고
사회 통일 교육 과정 (10)	통일교육 전문위원 (신규/연찬) 항군 안보강사 민방위 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 지도자 통일교육단체 지도자 종교단체 지도자 여성단체 지도자 노동단체 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	3-4일	합숙	600	150	4	
		3일	합숙	90	45	2	
		3일	비합숙	90	90	1	
		5일	합숙	90	45	2	
		3일	합숙	270	90	3	
		3일	합숙	90	90	1	
		3일	합숙	90	45	2	
		3일	합숙	180	45	4	
		3일	합숙	90	90	1	신규
		3일	합숙	180	45/90	3	
	소 계			1,770		23	
학교 통일 교육 과정 (14)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일반교과) 중등학교 교사(도덕·사회과, 단기) 중등학교 교사(도덕·사회과, 장기) 통일교육 시범학교 교사 (초·중·고)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 교장·교감(초등·중등) 통일교육 이수교사 학부모 예비 초등교사(교육대 학생) 예비 중등교사(사범대 학생) 대학교수	3일	합숙	60(20)	60	1	
		3일	합숙	35(5)	35	1	
		3일	합숙	450(120)	90	5	
		3일	합숙	450(80)	90	5	
		3일	합숙	270(20)	90	3	
		2주	합숙	180(10)	90	2	
		3일	합숙	35(4)	35	1	
		3일	비합숙	140	70	2	
		3일	비합숙	450	90	5	
		3일	합숙	60(10)	60	1	
		1일	비합숙	1,000		8	
		3일	합숙	80	40	2	
		3일	합숙	120	60	2	
		2일	합숙	40	40	1	
	소 계			3,370		39	

과정명	반명	교육기간	합숙여부	교육인원	학급인원	학급수	비고
원격교육과정(2)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30시간	비합숙	520		5	
		30시간	비합숙	520		5	
	소계			1,040		10	
남북교류협력과정(4)	방북예정자 금강산관광도우미 개성공단근로자 및 교육강사 남북교류협력요원	1일	비합숙	9,000		80	
		1일	비합숙	80	80	1	
		1일	비합숙	1,000		12	신규
		5일	비합숙	60	60	1	
	소계			10,140		94	
공직자통일교육과정(10)	중견관리직 공무원(단기) 중견관리직 공무원(장기) 중견실무직 공무원(단기) 중견실무직 공무원(장기) 통일 직무교육 신임 관리재(행시·기시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 북한이탈주민사회복지담당 보안경찰 비상계획 담당	5일	비합숙	180	90	2	
		2주	비합숙	140	70	2	
		5일	비합숙	360	90	4	
		2주	비합숙	140	70	2	
		5일	비합숙	30	30	1	
		2일	비합숙	265	265	1	
		5일	합숙	270	90	3	
		3일	합숙	270	90	3	신규
		3일	합숙	90	45	2	
		5일	비합숙	70	70	1	
		소계			1,815		21
특별과정 (재외동포, 지역인사, 지역통일교육 센터 관계자 등)	1-3일	합숙	475		11		
합계			18,610 (198)				

<그림 IV-1> 통일교육원의 교육과정별 비율(단위: %)



2004년에 통일교육원이 운영을 지원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부산과 광주에 개설된 것은 통일교육의 지역적 확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 프로그램과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 및 자료와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일학교 등 통일강좌를 운영하고, 청소년 분단현장 체험연수 등 청소년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지방과 대학의 통일문화축제 등 지역사회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 경남 통일교육센터의 경우,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수행되던 통일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의 통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출범하였고, 지역의 통일교육위원 초청연찬회, 통일지도자 교육, 시민교육, 학교 순회교육, 통일문화행사 등을 실시하면서 지역을 거점으로 통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통일교육원의 지도·지원을 받지만, 통일교육원의 지역 지부는 아니다. 이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와 같은 협의체가 지역통일

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설립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지역적 협의체도 아니다.

이러한 사회통일교육의 체계변화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지역통일교육센터와의 관계,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와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나.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통일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12월 22일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하여 지원”<sup>23</sup>하고 있다. 통일교육법 제10조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는 주체 및 요건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협의·협력이 필요하다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협의회를 결성할 수 있어서, 사실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구분 없이, 그리고 공공통일교육기관이든 민간통일교육단체든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규정은 협의회 구성관계에 있어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예컨대 협의회는 학교통일교육 영역과 사회통일교육 영역 간, 공공통일교육기관들 간, 민간통일교육단체들 간,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간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결성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복수의 협의회 설립도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협의회 구성 범위 및 관계, 수는 통일부장관의 인가 규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sup>23</sup> 통일부, 『통일백서 2004』(서울: 통일부, 2004), p. 334.

통일부가 인가한 통일교육 관련 협의회로는 2000년의 통일교육협의회와 2003년 12월에 결성된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가 있다.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조직되어 있고 총 671명의 전문위원이 지역사회 주민, 민방위대원, 예비군, 청소년, 기업체 임직원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연평균 250만 명에 대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24</sup> 또한 통일부는 2005년 5월 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와 통일교육전문위원광주광역시협의회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로 지정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그것들을 중심으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개소하였다. 요컨대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원과 지역통일(교육)협의회간의 공동운영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도 통일교육지원법이 규정하는 협의회는, 『통일백서』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 시민단체간의 협의회로(만) 간주되고 있고 또 2000년 12월에 서울에서 결성된 통일교육협의회가 유일한 협의회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협의회에 관련된 법적 근거를 재규정하고 협의회간, 그리고 협의회와 통일교육원과의 조직적 관계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과 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비정부·비영리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통일교육 협의체이다. 2005년 1월 설립 5주년을 맞은 통교협은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였는데, 종래 임기 2년을 5인의 공동의장이 윤번으로 5개월씩 분담 운영하는 체제를 지양하고 상임공동의장 1인이 2년을 책임 운영하는 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로는 2004년 12월 현재 총 93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었는데, 연구소가 10개 단체이고 시민사회단체가 83개 단체였다.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는 통일단체가 35개, 통일교육 단체가 2개, 여성단체가 12개, 청년·청소년 단체가 13개, 지역에 거점을 둔 단체가 7개, 대북지원단체가 5개, 종교단체가 5개, 그리고 시민단체가 4개로 분류되었다.<sup>25</sup>

<sup>24</sup> 통일부, 『통일백서 2004』(서울: 통일부, 2004), p. 337.



통일교육협회의 조직구조를 볼 때, 정책개발, 시민, 여성, 청소년, 지역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원단체들이 참가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 통일교육협회 자체 내에 설치된 통일교육연구소는 연구사업과 함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통일교육협회의 총예산은 2002년 이래 변함없이 4억7천만 원인데, 그 중 자체 예산은 2천만 원에 불과하고 매년 동일하게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이 4억 5천만 원이다. 이는 통일교육협회의 재정적 자립도가 매우 낮다는 점과 함께 통일교육협회가 통일교육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교육협회와 통일교육원 및 통일부 산하 교육관련 위원회(통일교육심의위원회, 통일교육실무위원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간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우선 통일교육협회와 통일교육원의 관계에는 세 가지의 교류방식이 있다. 첫째, 인력간의 관계로서 통일교육원 교수가 통일교육협회의 이사 내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도 관계된 사안이란, 통일교육원의 교육지침이 통교협의 교육에도 준용되고 있다는 교육지침상의 교류이다. 셋째, 교육교류가 있는데, 이미 앞서서도 언급된 통일교육협회의 위탁교육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일교육협회와 통일부 교육관련 위원회간에 있어서도 공식적인 관계는 부재한 상태이고, 다만 통일교육협회의 상임공동의장이 통일교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다. 개선방안

### (1) 통일교육원의 확대 및 강화

통일교육원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서 통일교육을 수행함과 아울러 각 기관 및 단체들이 수행하는 통일교육을 지도 및 지원하는 기

<sup>25</sup> 통일교육협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회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2004), pp. 2~4. 2005년 5월 회원단체 수는 85개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비활동 단체들을 정리한 결과이다.

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다방면에서 제기되면서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센터로 개편하여 통일교육의 전문성을 도모하자는 논의가 있었다.<sup>26</sup>

통일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다차원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기존의 통일교육원을 통일교육센터로 개편할 것인지, 아니면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통일교육센터를 새롭게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새로 개편 또는 설립되어야 할 통일교육센터를 현재의 통일교육원처럼 통일부 산하에 설치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구로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논의 중 첫째 논의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통일교육센터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의견을 같이 하고, 최근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산과 광주, 그리고 향후 더 개설될 민간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아우르는 통일교육센터가 설립된다면 이것은 곧 통일교육원이 중심을 이루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센터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통일교육센터를 지금과 같이 통일부 소속 기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 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 제V장에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일교육원이 확대 및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개진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통일교육원을 확대·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세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의 지도 및 지원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 동안 통일교육은 양적으로 상당히 팽창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부산과

<sup>26</sup> 예를 들어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99~202; 또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통일교육센터의 제안으로는 이철기 외, 『통일교육에서 民·官의 역할과 과제』(2003), p. 128 참조.

광주에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의 발족과 향후 그것의 증설은 통일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한편에서 관주도의 통일교육이 민간 통일교육으로 확대됨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에서 서울에 집중된 통일교육이 지방으로 분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교육은 주로 주민자치센터와 시민대학을 매개로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문화 및 복지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고, 시민대학은 통일교육과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sup>27</sup> 이러한 실정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민간화 확대와 지방화에 직면하여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여야 하는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위상을 확대 및 강화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원이 주요업무로 수행해오고 있는 통일교육내용 및 교수법의 개발과 보급을 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함에 있어서 우수한 교육교재와 교수법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통일교육이 점차 강의식 교육방식을 탈피하고 토론식 및 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교육대상별로 다양한 교재와 교수법을 전문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일교육원에 대한 재정적 및 인력적 지원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원이 이제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가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평가체계 구축 문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고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sup>27</sup> 조민 외, 『지방자치단체 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방안』(2003), p. 42.

구성되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원 산하에 독립형 협의체로서 통일교육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수행하는 통일교육의 지원을 위한 승인심사와 실적평가를 실시하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개선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2)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들)의 관계 정립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협의회를 지도·지원하는 관리기관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점진적으로 통일교육협의회의 자율성을 강화시켜 옴으로써 그의 협의체로서의 위상을 정착시키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본부사업, 통일교육연구소 사업, 분과위원회 사업, 회원단체 지원사업에서 사업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사전 검열을 통한 사업시정요구 등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산과 광주에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설립되면서 사실상 통일교육협의회는 더 이상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단독적 협의체가 아니라 복수의 협의체로 전환되었고, 이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 계기를 주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관계는 크게 두 가지 대안을 두고 재고되었을 것이다. 하나는 서울에 소재한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앙협의회로 규정하고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그에 소속된 지역협의회로 편재하는 것으로서 지역협의회에게 사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중앙협의회가 지역협의회에게 협의와 함께 지도·지원하는 대안이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의 통일교육협의회에 대한 지도·지원은 중앙협의회를 통해서만 시행된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통일교육협의회와 각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균등하게 병렬적으로 편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대안이다. 현재의 체계가 바로 그러한 저층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총 세 개의

통일교육협의체를 각각 개별적으로 지도·지원하고 있다. 요컨대 통일교육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존의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이 아니라 통일교육원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이 선택된 것이다.

통일교육의 지역적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역통일센터를 독자적 협의체로 설립한 것은 지역 중심의 통일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조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저층구조는 기존의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고층구조를 선택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통일교육협의회로의 권한집중과 위계화를 방지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저층구조는 불가피하게 통일교육원의 업무량을 증가시킬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설립되면 가중될 것이다. 아울러 그러한 저층구조에서는 각 통일교육협의회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또 다른, 포괄적 협의회를 구성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를 기능적 협의체로 머물게 하지 않고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가진 조직적 협의체로 운영되도록 한 것은 통일교육이라는 국가의 공적 과제를 정부기관만이 수행할 수 없는 주·객관적 조건에서 민간 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결과 우리의 사회통일교육 체계가 매우 복잡하게 된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러한 사회통일교육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협의회(들)을 지도·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상부에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협의회(들), 그리고 통일교육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협의·관리·감

독하게 하고, 하부에는 지역별로 같은 방식으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두어 지역단위의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사안을 전달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통일교육의 체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고 정부와 민간 간, 그리고 통일교육협의회들 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촉진될 것이고, 그 결과 사회통일교육의 양적 및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3. 사회통일교육 내용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가.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통일교육은 주로 후자의 주제 영역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이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가 제시한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요약한 아래의 <표 IV-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통일문제의 이해, 북한이해, 통일환경의 이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중대, 통일정책과 통일미래상, 통일준비라는 통일과 북한에 관계된 주제 영역이 대부분이고, 민주시민교육은 통일준비 영역의 한 주제로서만 취급되고 있다.

<표 IV-2> 통일교육의 내용체계(2005)

주 제 영 역	주 제	세 부 항 목
통일문제의 이해	분단의 배경과 폐해	분단의 원인과 성격
		분단의 폐해
	통일의 의미	
	통일의 필요성	
	통일문제의 성격	

주 제 영 역	주 제	세 부 항 목
북한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의 정치·외교	북한의 정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대외정책
	북한의 경제	
	북한의 군사	
	북한주민의 생활과 교육문화	북한주민의 생활
		북한의 교육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대남인식
북한의 문화		
북한의 변화와 전망		
통일환경의 이해	국제정세의 변화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증대	남북관계의 발전	역대정부의 노력
		참여정부의 노력
	남북교류협력의 증대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사업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교역의 확대
		인도적 대북지원
		스포츠·문화 분야 교류
		인적교류의 확대
통일정책과 통일 미래상	우리의 통일방안	
	분단국 통일사례의 교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준비	화해·협력을 통한 평화정착과 국가안보	
	민족공동체 형성	
	민주시민의식 함양	

출처: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또한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 외에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남북한 문화의 만남과 다가서기, 대결을 넘어 화해로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북한주민의 삶 이해, 남북한의 언어생활 이해, 북한주민의 생활문화 체험, 체험과 토론을 통한 다름에 대한 이해,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연습이라는 사회통일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들도 주로 통일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은 부차적인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아울러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통일 및 통일교육 전문 인력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 나. 통일교육협의회의 사회통일교육 내용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은 민간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의 통일교육 사례들을 요약 정리한 아래의 <표 IV-3>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의 통일교육 역시 전적으로 통일이해와 북한알기에 집중되어 있다. 유일하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주최한 통일교육 프로그램만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주제 하에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을 함양하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학습하는 전문적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표 IV-3> 통일교육협의회의 통일교육 사례 내역(2004)

교육 주체	교육 명칭	교육 대상	교육목표	내 용	방 법	기간
남북 어린이 어깨동무	상대를 존중하면 교실이 넓어져요	초등학교생	-분단의 현실과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 -북한이탈주민자녀가 속한 학급 통합교육 -차이인정교육통한 인권의식 함양	-북녘어린이에 대해 흥미 갖기 -남북 문화의 차이와 문화충돌에 대한 이해와 역할극꾸미기 -남북 언어 차이의 체험, 창작 작업	-학교방문 순회 평화교육 주1회 총 4주 8시간 -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좌 -자체평가 실시	1.19 - 12.31



교육주체	교육명칭	교육대상	교육목표	내용	방법	기간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제3회 남북청소년 교류 편지쓰기 전국대회	초·중·고생	-통일에 대한 청소년관심 유도 -향후 남북한 청소년간의 편지 및 우정교환, 편팔통한 동질성 회복위한 환경조성	-전국시·도교육청 통해 초·중·고생 169,253명 예선참가 -각급학교장추천 본선 4,967명참가 -편지집 발간	-본선시상 100명 -본선 입상자 대일평점 반영 -참가증 발급	3.11 - 9.15
	금강산 청소년 수련회		-통일현장체험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유도 -‘남북청소년의 노래’제작·공표 통한 청소년교류의 대중화	-어려운환경의 청소년 편지쓰기전국대회 수상자 대표 지도교사, 공무원, 방송사, 연맹임원 등 참가 -금강산산행과 노래합창 -남북청소년교류 편지발표회및 ‘남북청소년의 노래’ 공표식	-1박 2일일정 수련회행사2일째 1340-1500(80분) -평화행진2일째 1500-1520(20분)	11.23 - 11.24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통일교육	청소년 및 시민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식개척 실천	-평화통일염원 청소년 아영수련대회 -통전폭발사고 북한어린이 돕기참여 -시민, 학생 한마음 통일 박람회 -통일전시장 상설운영, 세미나,포럼 개최	-강의, 관람캠페인 -평등, 한국청소년개발원, 자유총연맹, 흥민통, 통일정보신문사 등 타단체 주관 행사 참여 및 후원	연중
	학생·시민한마음 통일박람회	청소년, 교사, 학부모, 시민	-남북 청소년 통일교육의 진흥 및 범국민 통일외식 저변 확대	-성금모금, 축하공연 -통일안보교육전시장 관람 -북한음식 체험 및 영화 감상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보고회	-체험활동 및 통일관련행사 참여	10. 6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충청통일 아카데미	대학생, 지역 주민, 민평통위원 30명	-자유민주주의의 신념 -민족공동체의 식고취 -건전한 안보관과 통일에 필요한 가치관 함양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평화 -북한의 변화와 전망 -남북한 통일정책과 남북관계 -분단현실, 6·15공동선언 그리고 남북한의 미래 등	-시청각교육 -강의, 토론 -현장답사통한 체험교육 -자체평가	10. 7 -28 매주 목요일

교육주체	교육명칭	교육대상	교육목표	내용	방법	기간
세계평화청년연합	평화세계구현을 위한 청소년인성교육 1/2	청소년 710명, 종교연합 동아리 학생 (2)	-청소년을 통일세대로 길러냄 -평화 함양 -통일시대 종교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역할 모색	-통일교육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인성교육 -안보관 견학	-강연 -견학 및 농촌 체험 -봉사활동 -전방체험	5. 15 - 8. 28
	한일 청소년 통일 대장정	한국과 외국 청소년 114명	-평화의 소중함 인식 -평화의 주역으로서의 리더쉽 함양	-한국과 일본, 미국, 프랑스, 벨기에 청소년의 금강산 방문 및 분단된 남북현실 체험 -통일에 대한 교육	-강화 -금강산 관광 및 교예관람 -평화의 연 만들기 -비치월드컵, 평화의 모래성 쌓기 등	8. 2 - 5
	아시아 동포 청소년 지도자 초청 평화통일 포럼		-총련 과민단의 화해 협력체제 구축과 조국애 고취 -평화통일 위한 해외 동포들의 국제역량강화 -남북 화해협력 위한 해외 동포 지도자의 역할 모색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민간교류의 평가와 전망 -재일 동포의 민족교육과 통일 -아시아의 평화와 재일 동포의 역할	-세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일본 80명, 한국 120명 참가	10.22 - 24
통일교육문화원	찾아가는 통일교육	초중고 학생, 교사, 단체	-통일교육문화원 교육프로그램 실시 -마음을 열고 한반도보기 -한겨레안의 두나라 -다른나라 통일이야기 -북한, 그 곳을 알고 싶다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알아보는 북한이야기 -우리가 만들어가는 통일 -북한 영상물보기	-평화 교육 등		1-10월
	인터넷통일교육	인터넷 회원 만명		-통일배움터의 10개과 및 숙제도우미를 통한 교육		
	북한땅체험통일여행	신청 단체		-강의 및 북한땅 체험(금강산)		2-10월

교육주체	교육명칭	교육대상	교육목표	내용	방법	기간
통일교육문화원	놀이를 통한 통일교육	교사	-전북교육청·통일교육원 중등교사반, 서울시교육연수원, 충남교육연수원 -평화놀이, 통일놀이, 북한놀이			
	정책세미나	일반인	-일반인 및 전문가그룹의 일교육 시도	-국회초청 정책세미나 -제 17대국회는 어떻게 통일, 북한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	-17대국회 초청 정책세미나 -발제 및 토론	5. 24
	통일을 준비하는 대학생 캠프	대학생, 탈북청소년	- 작은 통일 경험	-남북청소년들이 임진각(1차 40명)과 수유리 통일교육원(2차 50명)에서 함께 배우고 만들고 경험함	-강의 및 현장 체험 통일 교육	1.19-20, 8.23-25
	방송을 통한 통일교육	시청자	-극동방송 매주토 오전10시 10분간 북한 상식 및 통일관련 교육 -CBS TV 탈북자문제 및 통일관련 기획특집프로 출연 통일교육			1-9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갈등해결과 평화	관악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 능력함양 및 인권에 대한 올바른 관점	-갈등, 평화개념 이해하기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 인정 -또래 중재 등	-1학년대상 2시간씩 7주에 걸쳐 한반을 두개 모둠으로 진행	'02하반기부터
		연지초		-대화란 무엇인가 -다른사람이 되어 나 표현하기 -행동과 감정 알아차리기 -다양한갈등해결방법배우기 등	-방과후 교실로 주1회 매1시간 11-12회씩	'04. 3월부터
	청소년평화리더십 캠프	남녀중학생30명	-평화문화에 대한 소개, 평화감수성 계발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갈등해결방법 익히기	-협상과 중재훈련 -일상의 평화 다양성 이해	2박3일캠프	1.7-9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청소년통일 한마당 도전! 통일골든벨을 울려라	고등학생	-분단에 대한 이해와 평화와 통일 교육 -청소년의 통일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유도		-퀴즈 -사전학습으로 500개의 기출문제를 제공 -자체평가	10.23

교육주체	교육명칭	교육대상	교육목표	내용	방법	기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아카데미	시민	-남북교류협력이 한반도평화에 미치는 영향 -북미관계의 본질 이해와 리 민족이 나아가갈 길 전망	-분단의 현대사를 넘어 통일의 미래로 -평화와 통일의 시대 거듭나는 군을 위해 -법, 제도의 감옥에 갇힌 통일 -미국대선, 케리와 부시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등	-강좌 -거제포로수용소 기행 및 비디오관람 -자체평가	10. 7 - 24
한국대학리연구회	한일 대학생 민통선 마을 통일봉사	대학생, 일본인 유학생	-민통선마을과 DMZ에서 평화와 통일논의 -지뢰피해마을 봉사	-지뢰피해마을 주민을 위한 봉사과 지속적 관심유도 교육 -지뢰교육 -분단과 통일에 대한 교육	-농활형식의 캠프 -봉사와 토론 -태풍전망대 답사	2박 3일
한국자유총연맹	열린 통일교육의 장	통일 관련 교원, 담당자	-다양한 통일교육방법 체험	-통일교육프로그램·정보·자료 제공 -남북교원 통일교실 운영 등	-이론교육 -체험	
	남북교원 통일교실	남북청 소년	-남북청 소년의 만남의 장을 통한 공감대형성	-통일교육: 통일선언문작성 및 통일미래상그리기 -다름과 하나됨 찾기 등	-교육-역할극 -놀이 및 체험 학습 -퀴즈게임 등	
	열린 통일꾼 한마당	통일 교육 교원, 학생	-통일교육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와 전담교사의 전문성 향상	-북한노래·무용 이해하기 -북한학생놀이 체험 -북한 문화·음식체험	-강연 -노래 -무용 -음식 만들기 등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한·중 청소년 친선 문화제	한국·조선족 청소년	-민족분단현실 인식 및 통일 당위성 고취 -재중조선족청소년의 민족정체성과 동질성 확인·인식 -통일분위기 조성 및 한국이 미지개선 기여	-한·중 청소년 평화백일장 -한·중 청소년 친선세미나 -한·중 청소년 친선의 밤 -백두산 등반, 압록강 유람 -고구려 유적답사, 한민족 민속한마당		8.5 -12

출처: 통일교육협의회, 『2004 통일교육 사례발표』

## 다. 개선방안: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통일교육은 원칙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추구하는 통일교육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내용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통일교육에 포함하는 것은 통일교육의 실용적 성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회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은 정치체제나 이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상, 사회구조와 가치관 등 탈정치적 생활문화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통일교육의 실패러다임에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 (1) 민주시민교육 강화의 필요성

통일교육지원법이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의식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는 제반 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면밀히 숙고할 때, 통일교육의 중심을 두 개의 바탕 중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앞의 서술에서 확인하였듯이 현재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에만 집중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통일준비라는 주제영역의 한 부분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양 축의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의 경우 출판 간행물을 통한 교육사업, 정치교육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외부 정치교육단체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식을 확고히 하고 정치적 협력자세를 강화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sup>28</sup> 그리고 본 센터가 수행하는 정치교육내용의 범위는 단순

<sup>28</sup> 신두철, “독일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1호, (2005), pp. 50~54; 독일 정치교육센터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72~180;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

히 정치적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 등을 포괄한다. 우리의 경우를 볼 때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여야 하는 만큼 통일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통일교육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고 외부 통일교육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전적으로 민주시민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진행하여야 하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양적 확대 및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에는 부분적으로 마치 통일교육이 잘만 이루어지면 민주시민교육도 자동적으로 잘 이뤄질 것이라는 사고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반공적 통일교육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던 과거의 사고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방치된 이유에는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의식의 강화가 자칫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의식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또 다른 한편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의 발달이 미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의 민주시민의식의 발달이 미진했던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공동체 문제에 대한 참여와 건설적 비판과 같은 민주시민의식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이것은 곧 통일교육의 발달을 위한 토대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이 통일교육에서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된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진일보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 및 긍정적 효과와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역점을 둔 기존의 통일교육이 국민의 무관심과 냉소에 직면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강화는 통일교육의 내실을 도모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다.

---

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35~39 참조.

둘째, 민주시민교육은 통일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난제가 있다. 즉, 통일을 준비하는 민주시민의식을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이념에 근거해서 교육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체제이념을 양보하고 민주적 생활원리와 방식에 근거해서 교육하여야 하는가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체제이념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교육이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방기하는 민주주의 교육 역시 문제로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병행하여야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을 확고히 하는 교육과 함께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기능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은 통일과 북한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양산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럴 경우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원리와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 (2)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의 통일교육으로 전개하는 방안: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사회통일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다. 사회통일교육은 이른바 “남남갈등” 즉 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갈등이 남한사회의 기존 이념적, 지역적, 계층적 갈등과 결합되어 나타난 복합적 갈등에 직면하여 이견의 조율과 갈등의 해결에 기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회통일교육은 반드시 통일 관련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교육의 중심내용으로 설정하여 생활 속의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갈등을 민주적 대화와 토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리와 방식을 교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거시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해결

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은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방법을 동시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예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한 통일교육에서 찾을 수 있다.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제목 하에 시행된 이 통일교육은 평화 갈등해결 교육을 통해 통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고, 남북의 공존과 화해를 지향하는 통일의식을 함양하며, 갈등해결 능력의 함양을 토대로 사회문화적 통일의 주역을 양성하며, 자신 및 타인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인식함과 아울러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갈등해결 평화교육은 아래의 <표 IV-4>에서 알 수 있듯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대주제를 12개의 소주제로 분류하여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작성하였다.

<표 IV-4>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의 갈등해결 평화교육

소주제 구분	내용
소통하기 갈등예방과 해결의 기초	- 강의 소개 - 마음 열기/서로 이해하기: 짝 소개(공통점 찾기) - 함께 하는 약속
갈등, 평화개념 이해하기	- 평화개념 이해/ 내가 알고 있는 평화 - 갈등의 원인과 결과 - 바람직한 갈등해결 방법 이해: 그림으로 갈등 표현하기, 갈등 거리제기
갈등의 원인 이해하기	-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 사례를 통해 원인 찾기(남북이해지 활용)
자기갈등유형 이해하기	- 자기 갈등대응 유형 이해(갈등유형 이해지 활용): 분단국가에서의 갈등대응 유형 - 내 스타일의 장점과 단점 찾기: 갈등에 따라 대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입장(position)과 실익(interest)의 분리	- 서로의 요구 드러내고 파악하기: 표면적, 현상적 요구와 실질적 요구의 구별과 실익에 초점 맞추기, 질문 ‘왜(Why)?’의 중요성과 적절한 질문법



소주제 구분	내용
협상의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이다 1: 협상이란?(협상의 원칙과 방법),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기</li> <li>- 일상의 모든 것이 협상이다 2: 협상실습, 당사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갈등해결방법 연습</li> </ul>
차이, 차별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와 차별의 개념 이해</li> <li>- 차별에 대한 감수성 키우기: 권력의 꽃</li> <li>-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구조 이해</li> </ul>
편견의 극복과 다양성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은 무엇인가?</li> <li>-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은 어디에서 오나?</li> <li>- 열린사고와 다양성 존중, 평화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li> <li>- 남한과 북한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통일의 중요한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li> </ul>
합리적 의사소통방법 익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듣기, 말하기: 말 전달하기, 듣기 게임/내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법(나전달법, 평가하지 않고 관찰하기, 내 감정 드러내기, 내 욕구를 넣어 부탁하기, 바꾸어 말하기, 대화속 가시빼기)</li> <li>- 부정적 메시지 듣기: 탓하지 않고 상대의 욕구 들여다보기, No 듣기, No 말하기</li> </ul>
도래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란?: 중재의 원칙과 방법, 중재의 기본기술 익히기</li> <li>- 중재실습</li> </ul>
분노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의 원인, 조절의 방법 익히기: 폭력과 분노의 원인 알아보기, 분노 조절과 분노의 평화적 표출 방법 알아보기</li> </ul>
정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li> <li>- 색깔있는 질문: 나는 무엇을 배우고, 앞으로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li> <li>- 통일시대의 나의 모습은?</li> </ul>

출처: 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04), pp. 205~207.

주제를 선정하고 분류한 전문성과 체계성,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결합한 기술, 주제의 내용에 적합한 대화와 참여를 통한 수업방법의 운용에 있어서 이 교육사례는 민주시민교육을 생활 속의 통일교육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본보기로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

급되었지만, 통일교육은 북한, 남북문제, 통일에 대한 이해만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교육은 그 성격상 민주시민교육일 수밖에 없고 또 이를 지향하여야 한다.

위의 교육사례는 물론 교육의 감수성이 강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원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일반인의 경우 교육대상을 성별, 연령별 내지 세대별, 또는 직업별 등 계층별(그룹별)로 분류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특수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에는 계층간 갈등, 단체인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남북갈등 및 남남갈등 등 많은 갈등구조가 있고, 이것들은 상호 연결되어 생활의 미시적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과 상황에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품성과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이자 곧 통일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 4. 사회통일교육 방법의 실태 및 개선방안

### 가. 통일교육원의 사회통일교육 방법

통일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추진방향은 “통일교육의 인프라 정비, 국민에게 다가가는 통일교육, 우리 체제에 대한 자긍심 교육 강화와 통일문제 무관심 해소, 통일교육 정보화 확대,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방식의 개선”에 놓여져 있다. 또한 통일부는 초칭교육,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등을 다양화된 통일교육으로 소개하고 있다.<sup>29</sup> 나아가 통일부는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라는 문서를 통해 학교통일교육과 차별화된 사회통일교육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본 교육지침서는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이 중

<sup>29</sup> 통일부, 『2005 통일백서』(서울: 통일부, 2005), pp. 217, 219~222.

요한 역할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의 중시, 생활 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다양한 학습기법의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sup>30</sup> 그렇지만 엄밀히 볼 때 통일부가 제시하고 권고하는 교육방법은 한편에서 교육내용의 전달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대변하는 기능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통일교육원이 이미 2001년에 발간한 『통일교육 학습법과 그 실제』에는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교수법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것들은 북한 관광 가상체험 모형, 역할놀이 모형, 브레인 스토밍 및 웃놀이 활용 모형, 문화 이미지 활용 모형 등 총 17개의 모형을 망라하고 있어 그 다양성이 돋보이고, 모형을 예시하는 데 있어서도 모형의 개요, 모형의 소개, 모형의 원용, 교수-학습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에 그대로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모형들은 주로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회통일교육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가공을 가해야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조할 때, 사회통일교육을 수행하는 강사가 사용하는 교육방법에서 강의식이 43.6%, 토론식이 25.0%, 시청각 활용이 19.7%, 체험학습이 11.8%로 나타나 강의에 의한 교육이 여전히 대부분을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앞의 <표 IV-1>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통일교육원이 수행하는 사회통일교육 과정은 통일교육 전문위원, 향군 안보강사, 민방위 소양강사, 정훈장교, 통일단체 지도자, 통일교육단체 지도자, 종교단체 지도자, 여성단체 지도자, 노동단체 지도자,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교육대상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통일 관련 전문가와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일반인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이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sup>30</sup>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서울: 통일부, 2004), pp. 8~9.

통일교육은 남북교류 협력과정에서 방북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1일 교육으로 제공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교육방식이 응용되고 있으나 일반인만을 위해 특화된 교육, 더욱이 일반인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계층별로 분류하여 특성에 맞게 제공되는 교육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일반인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한데, 특히 그것은 사이버교육에서보다 집체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이버 교육의 경우 대화를 통한 교육 등 상기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교육이 온전히 시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체교육은 대상을 계층별로 분류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통일교육협의회의 사회통일교육 방법

통일교육협의회 소속 단체의 통일교육은 주로 집체교육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단체는, <표 IV-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체적으로 다양한 교육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회원단체 연대사업에서 51개 단체에 대한 지원유형을 볼 때 강좌가 27.4%(14개 단체), 토론회와 포럼이 21.0%(11개 단체), 기행이 15.6%(8개 단체), 세미나와 워크숍이 8.0%(4개 단체), 백일장이 8.0%(4개 단체), 순회교육이 8.0%(4개 단체), 강연과 캠프가 각각 6.0%(3개 단체)를 점하고 있어서,<sup>31</sup> 교육방식 중에서도 강좌, 토론회, 포럼 등에 의한 통일교육이 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통일교육협의회가 2004년에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관련자 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원단체가 시행하는 통일교육 중에서 포럼,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이 50.4%, 현장체험교육(기

<sup>31</sup> 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서울: 통일교육협의회, 2004), p. 12.

행, 캠프, 백일장 등)이 24.4%, 강좌가 18.3%, 순회교육이 4.6%, 그리고 기타가 2.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 방식으로는 현장체험교육이 45.9%로 가장 많았고, 포럼,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이 37.7%, 강좌가 9.0%, 순회교육이 4.1%, 인터넷교육이 2.5%, 그리고 기타가 0.8로 나타났다.<sup>32</sup>

따라서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지원함에 있어서 현재 주로 시행되는 교육방식을 고려하여 특정한 교육방식으로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또 선호되는 교육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교육방식으로 누구에게 제공할 때 교육적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교수법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관점을 필요로 한다.

추가적으로 사회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체로서 가지는 통일교육협의회 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앞의 <표 IV-3>에 요약된 2004년 회원단체의 통일교육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례가 발표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이에 대해 “성인통일교육이 강좌나 포럼 위주로 단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것과 청소년 통일교육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sup>33</sup>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마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내용과 방법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보다 다양하여 전자에서 취득한 경험을 후자를 위해서도 응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데는 청소년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이 성인 교육생을 모집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중 청소년

<sup>32</sup> 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pp. 320~321.

<sup>33</sup> 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p. 7.

을 주로 상대하는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육협의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통일교육의 대체기능을 자처하기보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통일교육의 경험을 응용하더라도 성인 교육생을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 계층별로 다양화하고 각 계층에 부합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다. 개선방안: 목표그룹(Zielgruppe) 전략의 도입

### (1) 교수법(Didaktik)에 대한 재인식

통일교육원이 2001년에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를 발간하여 다양한 교수법을 제시하며 그 시행 및 응용을 권고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통일교육 교수법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교수법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하여 교수법의 중요성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지침서가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이라는 이름 하에 제안하는 교육방법은 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도방법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도방법을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다.<sup>34</sup> 주지하고 있듯이 교육의 효과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뿐만 아니라 방법에도 의존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의 세 가지 절차와 요소가 보여줘야 할 유기적 관계는 목표가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어서 그것들이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단선적 관계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경우 방법은 수단으로만 간주되고, 그 결과 방법의 문제는 교육의 도구와 방식의 다양화를 주창하는 정도에 머무른다.<sup>35</sup>

<sup>34</sup>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서울: 통일부, 2004), p. 8.

<sup>35</sup> 통일교육에 관한 한 선행 연구는 성, 연령, 직업, 학력 수준 등 계층별로 실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방법의 문제를 다 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이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

일반적으로 교수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교수법에는 협의의 이해방식과 광의의 이해방식이 있다. 먼저 협의의 이해는 교육방법을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만 이해한다. 이 경우 방법은 교육내용의 실행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그 가치가 제한된다. 그러나 여기서 목표와 내용은 주요한 것이고, 방법은 부차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방법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듀이(J. Dewey)의 교육철학이 잘 지적하듯이, 무엇(내용)은 어떻게(방법)를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이다. 또한 방법 자체가 교육의 대상, 즉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기학습 방법에 의한 교육을 구사할 때 자기학습은 곧 교육의 내용적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 방법의 문제는 결코 교육의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 절차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sup>36</sup>

다음으로 “전문적 교수법”으로 명명되는, 교수법에 대한 광의의 이해는 방법의 문제를 교육과정 전체 속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한다. 그것은 교육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가지 물음, 즉 무엇(내용)을 무엇을 위해(목표) 왜(근거) 어떻게(방법) 교육할 것인가를 유기적으로 조망한다.<sup>37</sup> 이 경우 교육의 전 과정이 곧 교수법의 범위와 대상이 되고, 협의의 이해에서는 수단이나 도구 또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한 단계에서 작용하는 방법의 문제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된다. 이러한 교수법에서는 교육을 기획함에 있어 먼저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정하고 난후 다음으로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이미 처음

---

고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의도가 무시될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이란 방법상의 문제일뿐 각 주제별 내용과 결론 등 핵심내용은 공급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통일교육은 공급자의 의도를 수요자가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48.

<sup>36</sup> J. Detjen, “Die wissenschaftliche Politikdidaktik als Leitdisziplin der politischen Bildung,” G. Breit/S. Schiele(Hg.), *Demokratie braucht politische Bildung*,(2004) p. 71 참조.

<sup>37</sup> J. Detjen, “Die wissenschaftliche Politikdidaktik als Leitdisziplin der politischen Bildung,”(2004), p. 68.

부터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방법의 문제를 협의로 이해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고, 이에 비해 방법의 문제를 광의로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 학습자를 단지 교육의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후자의 경우 학습자를 교육의 동반자로 간주하기를 지향한다.

## (2) 목표그룹 전략의 개요와 필요성 및 기대효과

전문적 교수법, 즉 방법의 문제를 전 교육과정에서 유기적 및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법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신페러다임 통일교육이 구현해야 할 중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은 특별히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주문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의 요지는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자료와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다.<sup>38</sup> 그렇다면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론은 경영학의 마케팅 전략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케팅 전략의 핵심은 공급자 중심의 생산 및 판매의 기획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수요자를 이른바 목표그룹(Zielgruppe)으로 분류하여 설정하며, 목표그룹의 욕구·선호 등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요자를 확보·유지함은 물론 새로운 수요자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성의 제고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교육이론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교육을 교육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생산·소비되는 상품으로 설정하는 교육적 마케팅 전략의 철학적 문제 - 대표적으로 교육의 공공성 상실 -를 논외로 하고 볼 때,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교육의 중심을 교육주체와 그의 의도로부

<sup>38</sup>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서울: 통일부, 2004), p. 9.



터 수요자의 필요로 전환시키고, 수요자를 목표그룹으로 분류하여 특성화시키며, 수요자를 확보·유지·개발하는데 기여하는 안목을 제공한다. 요컨대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교육의 기획 단계에서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먼저 정하는 대신 목표그룹을 예정하고 그의 확대를 염두에 두며 목표그룹과 함께 그의 욕구·선호·관심 등을 먼저 파악한다.<sup>39</sup>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사적 교육시장에서 더 유용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적 마케팅 전략은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통일교육과 같은 공적 성격의 교육에서도 교육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마케팅 전략을 통일교육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마케팅 전략이 추구하는 수익성의 관점을 약화시키고 또한 교육적 마케팅 전략기획에서 목표그룹의 설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그것을 목표그룹 전략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에서 목표그룹 전략이 필요한 근거 내지 그 기대효과는 - 물론 마케팅 전략 자체의 필요성 및 그것이 약속하는 기대효과와 교육적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차별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크게 다음의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필요하고 수요자의 양적 확대와 질적 만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즉, 목표그룹 전략은 수요자를 성별, 연령별, 직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목표그룹으로 설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자 층을 확대하고,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을 통해 그룹별 교육의 동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원 중심의 교육이든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의 교육이든, 특정한 목표그룹에만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목표그룹을 다양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욱이 그것은 목표그룹이 주어져 있는 학교통일교

<sup>39</sup> W. Beer, "Politische Bildung Kommunizieren: Marketing fuer ausserschulische Bildung," W. Sander(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2005), p. 620 참조.

육 체계에서보다 목표그룹의 다양화가 필요한 사회통일교육 체계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 목표그룹 전략은 학교통일교육의 효과를 병행하는 차원에서 두 개 이상의 그룹을 결합하는 목표그룹을 설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6.25를 경험한 세대와 청소년을 결합하는 목표그룹이나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단위 목표그룹을 구성하여 통일에 관한 세대 간 차이를 극복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목표그룹 전략은 교육주체의 교육능력 향상을 보장한다. 즉, 교육주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수요자의 목표그룹에 적합한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학습을 보다 충실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육주체의 교수법 발전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 (3) 목표그룹 전략의 운용절차

교육기획의 우수성은 결코 공급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서 보장되지 않는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기획은 편리함을 줄 수 있지만, 수요자를 대상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한에 있어서 수요자를 지속적으로 확보·유지하거나 새로운 수요자를 개발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수요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도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전체적으로 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게 된다. 위에서 서술한 전문적 교수법의 안목과 결합된 목표그룹 전략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기획 및 운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sup>40</sup>

- ① 목표그룹 예비 선정: 교육을 제공할 목표그룹을 예비적으로 선정
- ② 사전조사: 기존 자료의 분석과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예비 선정된

<sup>40</sup> W. Beer, "Politische Bildung Kommunizieren: Marketing fuer ausserschulische Bildung,"(2005), p. 620 참조하여 자체적으로 작성하였음.

목표그룹의 욕구·선호·관심·문제 등을 조사

- ③ 교수법 개발: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목표그룹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의 내용(무엇), 목표(무엇을 위해), 근거(왜), 방법(어떻게)을 체계적으로 개발
- ④ 목표그룹 선정 및 학습자 모집: 목표그룹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간 및 공간 계획을 설정하여 교육에 참여할 학습자를 모집
- ⑤ 교육실행: 기획된 교수법에 따른 교육의 실행
- ⑥ 평가: 교육을 실행한 후 학습자에 의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
- ⑦ 발전적 적용: 목표그룹 내에서의 교육을 발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과 아울러 학습자를 확대

교수법 개발의 세 번째 단계에서 개발되어야 하는 좁은 의미의 방법은 물론 재차 다양한 교육도구 및 매체(영상, 오디오, 사진, 컴퓨터 등)를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교육방식(대화, 현장학습 등)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게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 5. 소결론

사회통일교육은 남북간 공존·화해·평화를 추구하는 교육의 원칙 하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이념적 교육내용을 확대하며, 교육주체별로 자율적인 교육방법을 운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른바 동일지향적 사회통일교육 패러다임 또는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으로 묘사되는 그러한 패러다임은 그 동안 각 사회통일교육주체들의 노력을 통해 의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서술되었듯이 그러한 사회통일교육의 신패러다임은 아직 체계, 내용, 방법 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

고 있다.

먼저 통일교육원 중심의 사회통일교육과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의 사회통일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 간의 관계를 현행대로 저층구조 하에서 통일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통일교육협의회(들)을 지도·지원하는 체계를 유지하되, 수직적 차원에서는 통일교육원, 통일교육협의회(들), 그리고 통일교육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전반적 사안을 협의·관리·감독하게 하고, 통일교육협의회들의 수평적 차원에서는 지역 거점 통일교육협의회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운영협의회를 두어 지역단위의 사회통일교육에 관한 사안과 상호교류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는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현행 사회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듯이 통일교육은 통일 및 북한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통일교육에 치중된 사회통일교육은 비이념적 교육내용에 집중해옴으로써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탈피하는 성과를 낳고 있지만, 향후 사회통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이론을 직접 교육하는 방식보다 갈등해결을 지향하는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의 중심적 주제로 선정하여 생활 속의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까지 시행된 사회통일교육의 방법은 통일교육원 중심이든 통일교육협의회 중심이든 간에 교육의 수단이나 도구 및 방식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즉 사회통일교육의 교수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교육도구 내지 방식의 다양화로만 이해되었고 또 그렇게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보다 많은

피교육자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전문교육인력의 교수능력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의 문제를 전문적 교수법의 관점에서 재인식하고 이른바 목표그룹 전략을 적용하여 교육의 목표그룹을 다양화하고 특성과 수요에 맞는 교육의 내용, 목표, 근거, 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V

##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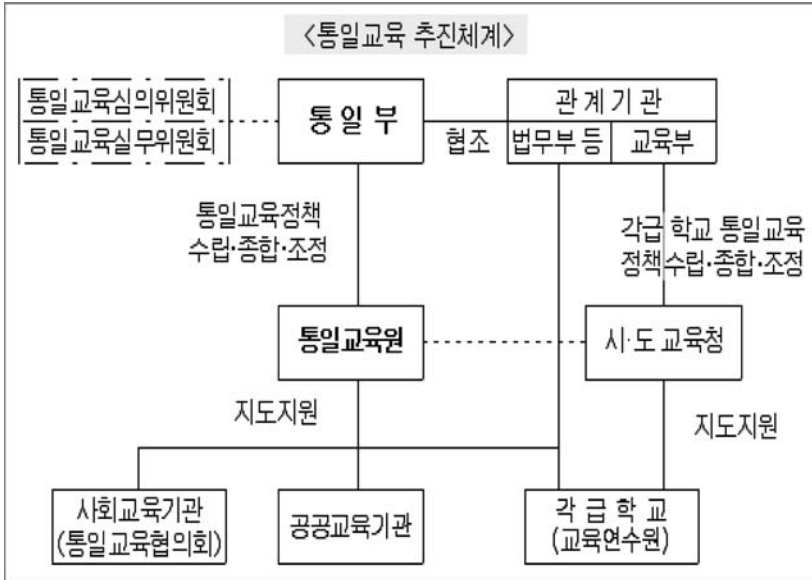


## 1.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와 문제점

### 가.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들 사이에 통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 자료 등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민간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 즉 통일교육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행 통일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체계 내지는 네트워크는 1999년 8월에 발효된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전반적인 통일교육정책을 수립·조정·종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통일교육의 주관부서, 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정책의 수립·조정·종합은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짜여 있다.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 내지는 통일교육 추진체계의 기본 구조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료: 통일교육원, <http://www.uniedu.go.kr/profile/schedule06.jsp#ma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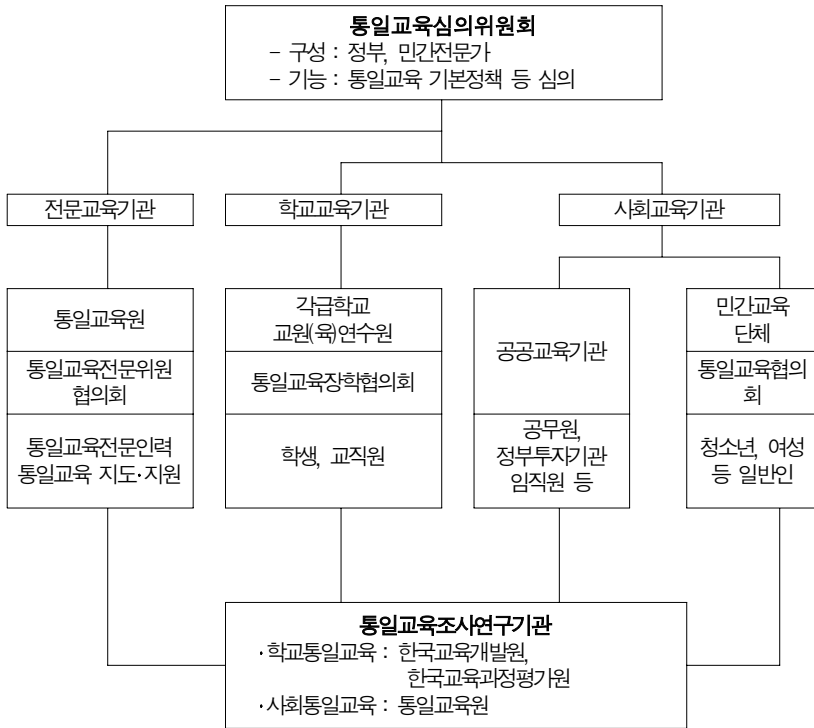
위의 도식에서 보듯이, 현행 통일 교육 네트워크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평적 네트워크는 협조망 내지는 실시체계로, 수직적 네트워크는 지침망 내지는 지침체계로 불린다.<sup>41</sup> 수평적 네트워크는 주로 행정부처, 즉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등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수평적 네트워크의 주요기관으로는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수직적 네트워크는 통일부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등에 따라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에서 실시하는 내용을 확정하고 반영하는 연결망으로 여기의 주요기관으로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기타 공공교육기관 및 각급 학교와 교육연수원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 네트워크

<sup>41</sup>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60~61.

와는 구분되는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는 일반적으로 정부와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우선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중심을 형성하는 통일부의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살펴보면,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에게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중심 통일교육체계>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되며, 통일교육심의위원회

가 심의·결정한 통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지침 등 주요 정책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하거나, 통일교육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타 주요 통일교육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체계는 앞장의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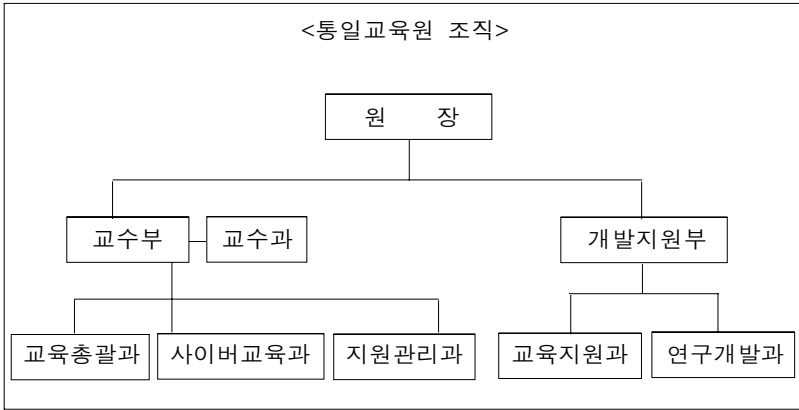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들의 구성과 기능 및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담당하고 있는 임무의 성격에 따라 크게 전문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 (1) 전문교육기관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가와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가 있다.

#### (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한다는 목표 하에 통일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주로 정부기관·공공기관·사회단체·교육기관의 간부 및 요원이다.



(출처: <http://www.uniedu.go.kr/profile/organization.jsp>)

통일교육원의 조직을 보면, 교수부와 개발지원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교수부에는 교육총괄과, 사이버교육과, 지원관리과가, 개발지원부에는 교육지원과와 연구개발과가 있다. 교육총괄과의 주요 임무는 통일교육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전문인력 등에 대한 통일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이수자를 관리하는 것이다. 사이버교육과는 사이버통일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이버통일교육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한다. 지원관리과에서는 통일교육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의 주요 임무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원하고, 국내외 통일교육 실시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성하고 운영하며 통일교육협의회를 지원한다. 따라서 통일교육 네트워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각급 학교와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교재와 자료를 개발·보급하며, 통일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 (나)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통일문제에 관해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 사회 지도층 인사를 통일교육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위원들의 협

의체를 구성하여 이들을 통일교육전문가로 양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치·운영되는 협의체이다. 이들은 지역에서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예비군교육을 비롯한 여러 세미나와 강연회 등을 통해 통일교육 활동을 한다. 2004년 12월 말 기준 749명의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중앙 및 16개 시·도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교육전문위원협의회는 내용상으로는 사회통일교육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

## (2) 학교교육기관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초·중·고등학교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통일교육장학협의회’와 대학통일문제연구소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와 협조를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협의회의 목적은 학교통일교육담당 주체들이 학교통일교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지원한다.

통일교육장학협의회는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 실시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04년도에 동 장학협의회를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로 확대하여, 인원을 총 400명으로 늘렸다.

다른 한편, 정부는 대학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를 통한 단일지원방식에서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등 통일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5개 단체(대학)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 (3) 사회교육기관

### (가) 통일교육협의회

사회통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0년 설치·운영되고 있는 ‘통일교육협의회’가 있다. 통일교

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 간의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고자 설립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간의 협의기구라는 성격을 띤다. 2005년 5월 기준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5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의 수는 유동적이다. 단체 재정은 주로 회원단체의 회비에 의존하며, 단체운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총 예산 4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이 국고보조금이고 나머지가 자체예산임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국가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청소년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 정책개발분과위원회)와 사무국, 통일교육연구소를 두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사업을 살펴보면, 여성분과위원회는 통일교육을 통해 여성통일지도력을 형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성통일학교와 여성통일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분과위원회는 지역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여건이 가능한 지방 도시별로 통일강연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문제에 대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 하에 지역통일교육단체 간담회와 통일골든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별, 대상별 차별화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목적 하에 청소년 통일교육담당자 심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과위원회는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 합동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남남대화 활성화 등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및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정책개발분과위원회는 통일교육 정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통일교육협의회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대사업 평가활동의 정형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연구소는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교육이론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실사구시적인 통일교육의 상을 정립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조직도>



(출처: [http://tongiledu.org/new/one\\_html/index.php?menu\\_id=4](http://tongiledu.org/new/one_html/index.php?menu_id=4))



#### (나)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 관련 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통일교육의 일환으로 2004년에 처음으로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지역통일교육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2004년 말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향후 지역사회 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범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헌법 기관이며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기능은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통일 의지와 역량의 결집 및 기타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 필요 사항에 관해 자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통일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한 분과위원회로서 교육위원회가 있으며, 여기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교육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교육 자료의 제작과 보급, 남북한 통일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개발 및 기타 통일정책과 관련한 교육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산하 지역협의회에서는 지역별로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통일문제에 대한 강연회나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통일후세대 육성 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및 간담회, 중·고생 대상 학교순회 통일교실 운영, 평화통일염원 글짓기·옹변·그림 그리기 등 사생대회 등을 통해 통일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 (5)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은 통일교육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은 아니지만, 국민들에게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착시키고 통일논의의 확산과 체계적, 전문적 종합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통일교육 네트워크를 다루는 데에 있어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기관이다. 통일연구원은 국가의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문제 전문연구인력으로 구성된 정책개발 기관의 성격을 가지며, 통일관련 정보 연구물과 자료를 활발하게 출간하고 있다.

1998년 12월 통일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출범한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주요 연구기관, 대학통일연구소 등과 권역별 공동학술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북한 통일관련 정책보고서를 개발하고, 정보자료·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 및 단체 간의 네트워크는 현재로서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다른 통일교육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통일교육실무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일 년에 수회 정도만 개최되고 있어 통일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각종 정책결정 내용이 각 부처와 통일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휘·감독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데에서도 기인한다.<sup>42</sup>

또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체계의 전문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 학교교육기관들 사이에도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중앙기관로서의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충족

<sup>42</sup>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 67.

시키기 위해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는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는 등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할 위한 상호간의 교류가 거의 없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담당기관에 따른 통일교육에서의 다양성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과 노선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게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다수의 민간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통일교육협의회의 경우, 통일교육협의회 주요 존치 이유인 통일교육 관련 사업의 회원단체간 연계·조정 및 정보·자료의 공유를 위한 연대 사업과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sup>43</sup> 이것은 회원단체간의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통일교육협의회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회원단체들간의 독립적이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통해서 다양한 사과의 통일교육 관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를 도모하도록 협의회 내의 구조를 네트워킹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 나.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킹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통일교육 네트워킹의 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주도하는 경향이 짙으며, 상대적으로 민·관간의 유기적 연결구조가 미흡하다. 통일교육 네트워킹 정부 주도적인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통일교육 자체가 오랜 기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데에 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 역시 정부의 관변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정부주도적인 통일교육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노력은 2000년에 통일교육협의회 설립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

<sup>43</sup>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p. 67.

로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민·관간의 유기적 연결구조는 매우 미흡한 상태로서 통일교육에 있어 협력적 관계보다는 많은 경우 서로 독자적인 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이라는 것은 통일교육이 집권세력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의 조직체계를 보면,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통일전문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은 통일부에 소속되어 있다. 이는 통일교육이 초당적이고 독자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적절히 반영하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체들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각 기관 및 단체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부 산하 교육관련 위원회 간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상호 교류와 협력의 부재로 인해 활동의 중복이 나타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동시에 각 통일교육관련 기관과 단체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추어 자신들의 업무와 교육내용 등을 계속 혁신해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존의 방식을 유지해나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식정보시대의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2.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신패러다임의 통일교육은 협의의 통일교육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시민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통일교육, 즉 통일교육은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태도를 양성하는 교육이며, 통일에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건전한 평화관과 안보관을 형성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 통일교육은 더 이상 정부의 주도하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한 유기적인 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통일교육의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와 의사와 교육방향이 통일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통일교육기관 간의 기능과 역할에서의 긍정적 분담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의 일부가 됨으로써 통일교육의 내용이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다원주의에 기초하고, 획일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속에서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편협성이나 독단성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는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통일 이후에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3.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방안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은 지금까지의 좁은 의미에서의 통일교육과 더불어 민주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는 이 양자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포괄하는 체계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정보화 사회의 진전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미디어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제도적 조직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다음과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조직들은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분리시켜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적인 기구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하여 기존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형태를 구상해 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통일교육을 총괄하고 아우르는 중앙기관으로 '시민정치교육본부'(가칭) 설치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 및 통일 교육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시민정치교육본부가 네트워크의 핵이 되어 이들 기관과 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이들에게 교육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교재, 전문 서적 및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을 제공하는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정치교육본부에는 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가 협의체 형식으로 참여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들 기관 및 단체는 각각 주력사업을 설정·특성화하여 해당 업무에 주력한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원은 교육업무, 통일교육협의회는 민간단체의 통일사업 지원, 통일연구원은 통일과 관련된 자료 및 서적 지원 등에 특화한다. 이를 통해서 각 기관 간의 중복적인 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업무 협조와 조정은 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면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통일교육원은 직접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피교육자의 수준과 관심 및 수요에 따른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통일교육 관련 민간단체에 제공하고, 이들 민간단체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들 간에 균형을 잡는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지금까지 주로 통일정책에 관한 정책개발에 주력하던 범주를 넘어서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간행물과 교육자료 및 보조자료를 생산해내는 사업을 맡게 될 것이다. 이 업무는 시민정치교육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

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초당적이면서 중립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민정치교육본부가 특정 정부 부처에 소속되면서도 예산은 독립적으로 집행하고, 의회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시민정치교육본부를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지만, 예산을 이들 부처와는 독립적으로 집행·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정부와 집권 정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현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통일교육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체계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듯이 통일교육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어 시민들의 정치교육과 건전한 정치문화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된 헌법기관화 함으로써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시민정치교육본부는 각 도와 광역시 등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를 둔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설치와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기본 틀은 시민교육정치본부와 유사하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조직을 구성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에서는 지역의 통일 및 시민교육 관련 단체와 협의·협력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일 및 시민 교육과 행사를 지원한다.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들은 각 업무분야별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지역시민정치교육본부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해당 지역시민단체가 다른 지역시민단체나 중앙의 시민단체와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sup>44</sup>

이러한 방안은 시민정치교육본부와 이에 참여하는 주요 기관과 단체(통일교육원과 통일교육협의회 및 통일연구원, 기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주요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들 기관과 단체들 사이에 한편으로는 상호간의 협의와 유기적인 협력,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전제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전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야 한다.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실현을 위한 통일교육 네트워크의 구축에서 현재의 통일교육원이 위에서 언급한 시민정치교육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편과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그보다는 통일교육원은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 간의 가치관과 이념의 격차를 줄이고, 민주사회에 대한 보편적 신념을 제공할 수 있는 정치교육에 대한 필요에 대비하면서 좁은 의미의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점차 민주시민교육까지 포괄하는 시민정치교육에 특화하는 전문기관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sup>44</sup>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 교육네트워크의 틀이 형성되고 운용이 안정화되면, 스웨덴의 스터디그룹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요건과 특정한 교육 요구를 지니는 학습자 모임이 구성되면, 그 모임이 요구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 자발적인 평생교육을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특정 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통일교육 수요가 발생할 때,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학습자 모임과 강사풀을 연결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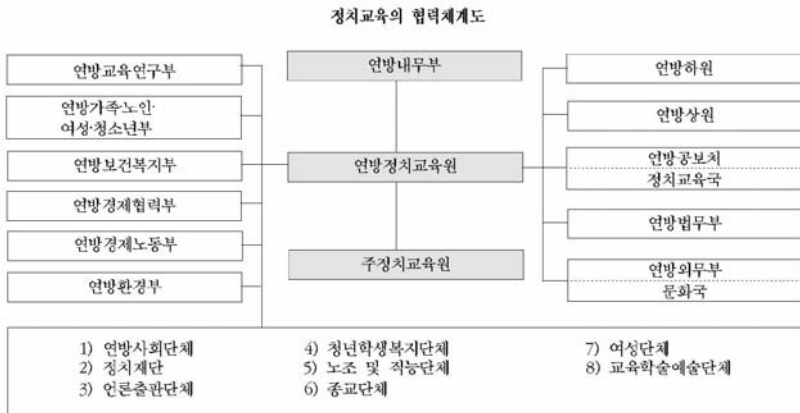


## 4. 사례연구: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 현황

### 가. 제도적 측면

#### (1) 제도적 기관들

독일에서 시민정치교육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적 기구로서 연방차원에는 내무부 산하의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있으며, 주차원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상응하는 ‘주정치교육본부’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시민대학’(Volkshochschule)이 시민정치교육을 개설하고 있다.



(주: 연방정치교육원=연방정치교육본부, 주정치교육원=주정치교육본부  
출처: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riedrich Ebert Stiftung, 2004.)

그밖에 정부기관이 아니면서 그 규모와 활동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의 독특한 시민정치교육기구로서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재단(Stiftungen)이 있다.

### (가) 연방정치교육본부(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분단이 된 후, 시민정치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 정부기구로서 연방 및 주 정치교육본부(Bundes- und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학교 및 사회단체들에게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써 꾸준히 시민정치교육을 시행해오고 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연방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1952년에 네 가지 과제 수행을 목표로 발족되었다. 네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을 국가적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파시즘의 지배를 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즉 국가사회주의적 이념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이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시민정치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러한 과업을 위해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되었다.

둘째, 첫 번째 목표와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새로운 체제, 즉 민주주의와 진정한 시장경제에 대한 이념을 단지 소수의 엘리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역시 전체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정치교육과 이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

셋째,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설립될 당시 이미 자유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 간의 동서갈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특히 분단국가로서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동독과 대치상태에 있는 서독의 입장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국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1950년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슈만이 프랑스와 독일의 석탄과 철강 산업을 통합시키기 위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키고, 1952년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 국가로 구성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형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이미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설립 당시에 관심을 모았던 유럽통합에 대한

사고를 국민들 속에 널리 퍼트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 가지 과제 중에서 1991년 통일과 함께 세 번째 과제의 성격이 국내적으로는 새로 연방에 편입된 구 동독주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동유럽 및 중부유럽 국가들에서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는 데에 주요 역점을 두게 되었다. 또한, 통일과 함께 공산주의가 지배했었던 국가 지역(러시아, 폴란드, 체코 등)에서 독일로 이주해 오는 이민자들과 극우주의자들에 대한 시민정치교육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게 되었다. 사실상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시민정치교육은 위의 네 가지 과업을 기본으로 삼으면서 정치적 및 사회적 시대 변화와 함께 정치교육의 구체적인 중심 테마를 적절히 변화시켜왔다. 예를 들어, 1950년대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건설과 기능이 핵심 주제였다면, 1960년대 초반에는 독일 역사에 대한 회고, 특히 전체주의체제에 대한 계몽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sup>45</sup> 1960년대 후반에는 소위 68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운동을 통해 사회적 변혁이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으며, 1970년대에는 당시 주요 사회적 관심사였던 경제문제와 동방정책, 테러리즘이 주요 사업이 되었고 더불어 정치교육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의 개발이 핵심 테마로 다루어졌고, 1980년대에는 신사회운동의 발전과 함께 환경문제, 평화·안보정책 그리고 사회운동이 주요 주제가 되었다.<sup>46</sup> 그리고 1990년대에는 통일과 함께 등장한 동서독 경제 및 사회통합, 극우주의가 핵심 테마가 되었다.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시민정치교육과 관련된 서적 및 자료의 발간이다. 서적 발간은 저자들을 섭외하여 직접 출판을 하거나 또는 기존의 서적 중에서 시민

<sup>45</sup>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통일부, 2002), p. 100.

<sup>46</sup>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통일부, 2002).

정치교육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적의 라이선스를 사들여서 저렴한 가격에 교부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연방정치교육본부에서 발간되는 도서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교육 시리즈 간행물들이다. 이 간행물들은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일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에 대한 폭 넓은 기초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47</sup> 몇 년 전만 해도 이들 간행물들은 크기가 모두 같고 표지도 흰색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관행이 다양성을 무시한다는 판단 하에 지금은 다양한 크기로 출판되고 있으며, 가능하면 그림을 많이 넣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 밖에 CD 등 다양한 정치교육 보조 자료와 주간신문 《국회》(Das Parlament), 이것의 부록인 《정치와 현대》(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정치교육정보》(Information zur politischen Bildung), 《정치잡지》(Die politische Zeitschrift), 《수업주제》(Thema im Unterricht), 《확대경》(Zeitlupe) 등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전체 간행물들을 모든 시민과 단체, 학교, 기관들은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상의 활동으로서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홈페이지: <http://www.bpb.de>)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셋째, 주요 활동은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단체들의 프로젝트와 학술활동(학술회의, 국제회의, 전문가회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독일에는 현재 약 340개 정도의 정치교육관련 자원단체들(Freie Träger)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들 자원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당, 노조, 교회 등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sup>47</sup>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p. 106.

<sup>48</sup> 각 정기간행물들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pp. 104~107 참조.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프로젝트를 제출한 단체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 하고 있다.

지원 단체에 대한 평가는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사항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첫째, 이 단체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교육을 해 오고 있는가, 둘째, 적절한 공간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셋째, 양질의 정치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넷째, 단체의 규약이나 정관 등을 갖추고 있는가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자원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 년 단위로 행해지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이러한 재정지원을 매개로 여러 정치적 내지는 이념적 노선을 가진 단체들의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가능하면 시민들이 다양한 사고와 이념의 시민정치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신나치주의 등 극우단체나 종교적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조직상 연방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내무부를 통해 연방예산에 책정되지만, 사실상 내무부와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운용한다. 이러한 예산의 독립성은 바로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시민정치교육을 주도할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는 내용상의 획일성과 정부에 대한 종속성 내지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이 연방정치교육본부가 중립적이고 초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있다. 또한, 여야 연방하원의원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를 통해 연방정치교육본부의 활동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벗어날 수 있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적 사고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크게 원장과 집행부, 9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고문단과 22인의 여야 연방하원의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집행부는 매년 예산안, 사업계획 및 활동보고서를

감독위원회에 보고하며, 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학술고문단의 지원을 받는다. 연방정치교육본부에는 현재 약 150명의 정규직원과 20명 정도의 계약직원이 일하고 있는데,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자세한 구성과 조직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 연방정치교육원=연방정치교육본부)

출처: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riedrich Ebert Stiftung, 2004.)

### (나) 주정치교육본부(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주정치교육본부는 독일의 16개 주(Land)에 설치되어 있는 주 차원의 정치교육본부로서,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고 시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려는 목적 하에서 정치교육 및 담당단체에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하며, 출판물과 멀티미디어 매체 등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한다는 점에서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동일하다. 그러나 자체적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하에 각 주정치교육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 주의 역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주정치교육본부의 조직과 운영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유사하나, 주 수상실 소속으로 예산·인사·업무 등은 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주 의회의 감독을 받는다. 즉 주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은 연방정치교육본부와는 관계없이 주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따라서 예산규모도 주마다

차이가 있다.

통일 직후 독일의 시민정치교육의 핵심 현안은 구 동독지역의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적인 가치관과 정치문화를 이식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구 동독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체제에 잘 적응하게 됨에 따라 동서독주민 간의 내적 통합을 보다 빨리 달성될 것이고, 동시에 통일 독일에 민주주의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대 아래 본(Bonn)의 연방정치교육본부는 베를린에 지부를 설치하고, 구 동독지역의 각 주에 주정치교육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구 동독지역의 신설된 주정치교육본부는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인적, 운영 노하우 등)가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주정치교육본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 구 동독지역의 각 주정치교육본부를 구 서독지역의 특정 주정치교육본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고, 주정치교육본부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구 서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로부터 제공받도록 했다. 흥미로운 것은 어느 구 서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가에 따라 구 동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의 운영과 활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구 동독지역 중에서 작센(Sachsen)주는 가장 크고 훌륭하게 운용되는 주정치교육본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서독에서 시민정치교육을 위한 제도와 운용이 가장 잘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의 주교육정치본부가 파트너라는 사실에 크게 기인한다. 이러한 자매결연체제는 통일이후 북한에서의 시민정치교육의 운용과 관련해서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러나 작센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통일 이전에 우리의 시민정치교육체제가 제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잘 정비 및 체계화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 (다) 시민대학(Volkshochschule)

사회시민정치교육은 이미 정규교육을 이수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인들의 재교육 내지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평생교육체제를 위한 기관인 시민대학에서도 중요한 강좌로 취급되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시민대학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관은 아니며, 어학, 취미, 컴퓨터, 청소년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양강좌가 제공되고 있다.

시민대학은 중소 단위의 행정구역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에 2,400개 이상 존재한다. 여기에서 개설되는 민주시민교육강좌는 주로 지역, 국가,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시사적 문제들로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판단과 정세를 이해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라) 정당의 정치재단

이러한 정부기구 이외에 독일에 독특한 정치교육기구로서 정당의 정치재단들이 있다. 현재 독일에는 여섯 개의 정책재단이 있다. 사회민주당(SPD)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riedrich Ebert Stiftung),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 녹색당(Die Grüne)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 Böll Stiftung), 자유민주당(FDP)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Friedrich Naumann Stiftung), 기독교사회연합(CSU)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Hans Seidel Stiftung), 민주사회당(PDS)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 Luxemburg Stiftung) 등이다.

이들 재단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들로서, 엄밀히 말하면 각 정당에 소속된 부속적인 기구가 아니고 공공성을 매우 강하게 띠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교육 목적은 정당의 소속 당원에 대한 당원



교육이 아니라 일반 시민정치교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정당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치교육과 관련하여 소속정당의 이념적 색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고히 한다는 기본 목표 하에서 정치교육의 기본체제나 개념, 방향, 내용구성 등에 정치재단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 (2) 제도적 네트워크

독일의 정치교육 네트워크의 특징은 다양한 정치교육담당기관과 단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협력하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최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정당들에 의해 운영되는 정당재단들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정치교육기관들이지만, 필요시 이들은 서로 협력·지원한다. 특히 해외의 시민정치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해외에 지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해외에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정당재단들과 협력함으로써 해외정치교육활동을 지원한다. 물론 이때 연방정치교육본부는 특정 정당재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의 관계는 얼핏 주정치교육본부가 전체 정치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본부의 지부처럼 보이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협력·지원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연방정치교육본부와 각 주정치교육본부의 예산·인사·업무를 결정하는 소관기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주정치교육본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로부터 그리고 다른 주정치교육본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각 주에 합당한 정치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 사이에 경쟁과 갈등을 있기도 하지만, 일 년에 두 번에 걸친 연방정치교육본부와 모든 주정치교육본부의 정기적인 지도부 회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국가 정치교육의 주요 사업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또한 지도부만이 아니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의 각 기능분과들(행사학술회의부, 인쇄/출판부, 멀티매체/IT부, 외부단체지원부 등)도 분과별로 매년 회합을 가지면서 서로 간에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방정치교육본부 및 주정치교육본부와 정치교육관련 자원단체들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이들 정치교육본부는 자원단체들의 프로젝트에 대해 재정과 간행물, 다양한 정치교육자료를 지원할 뿐 이들의 사업에 대해 간섭이나 통제를 하지 않는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정치교육이 집권당의 정치적 성향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적인 주요 정치교육기관의 예산과 업무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는 서로 상이한 소속 상부기관과 예산 소관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정치교육본부는 연방정치교육본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치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연방정치교육본부의 경우, 여야 연방하원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음으로써 집권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통일교육은 정치교육의 커다란 틀 속에서 한 분야로서 실시되는 것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과 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통일 이전

서독에서의 통일교육은 우리와는 달리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분으로 취급되었을 뿐 관념적 성격의 적극적인 통일교육은 없었다. 비록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통일방식에 대해서는 이념과 노선에 따라 상이한 견해가 제시되었지만, 통일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와는 달리 통일방식에 대한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또 민간단체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빚어지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통일방식을 둘러싸고 대립될 수 있는 이념적 갈등을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합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상당 부분 녹여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치교육본부를 위시한 정치교육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면서 보다 통일에 대한 폭넓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네트워크화 하며, 정치교육본부와 민간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통일 이후에 동서독 주민들의 내적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정치교육본부와 주정치교육본부의 경우, 통일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제도적인 개편이나 사업의 변경은 없었다. 또한 구 동독지역에 신설된 주정치교육본부의 경우, 구 서독지역의 주정치교육본부와 유사하게 조직되었으며 유사한 운영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앞의 두 번째 시사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데, 통일 이전 서독에서 실시된 통일관련 교육이 편협한 관점이나 특정 이념에 근거해서 통일을 앞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다양한 정치교육 및 통일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치교육기관들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화 했던 것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이후의 남북한 주민간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통일교육기관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일 이전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나. 법적 측면

독일 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통합한 흡수통일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통일 이후 기존의 구 서독법과 제도가 거의 그대로 구 동독지역에 이식되었다. 따라서 시민정치교육의 대상이 확대되었을 뿐 커다란 법적 변화는 거의 없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 동독지역 시민의 저항도 거의 없었다.

# VI

## 결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통일교육지원법이 이미 1999년 제정되었고, 2001년에는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며, 2003년 12월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법적 기반은 불충분하지만 어느 정도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의 조성에도 불구하고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 아직까지 미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시행방법 및 교수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고,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간의 연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미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첫째, 통일 전 교육과 통일 후 교육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통일을 위한 교육과 통일에 관한 교육, 그리고 통일 후 남북한의 통합을 위한 교육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며, 둘째, 학교와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통일만을 위한, 따라서 통일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 차원인지, 일반적인 시민교육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 또한 명확하지 않다. 아울러 셋째, 이러한 통일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또는 시민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Erziehung)과 통일을 위한 이해와 판단을 부가하여 점차적인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을 집적하는 교육(Bildung)의 차원인지에 대한 구분 역시 불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 특히 남북한관계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정착되고, 이에 따라서 통일교육이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실현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실시되는 통일교육은 새로운 방법론에 의하여 교육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여,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학습’(Erziehung)과 ‘교육’(Bildung)이라는 교육의 두 가지 측면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학교통일교육이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시민교육적 차원보다는 오히려 통일에 대한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시민교육의 내용을 ‘교육’해야 할 것이며, 사회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학습’보다는 오히려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이건 사회통일교육이건 간에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효과를 달성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통일교육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지루함과 당연적 내용을 탈피하고 재미를 부여하고, 수동적 교육보다는 능동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통일교육의 교과 내용에서, 그리고 교과외 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피교육자가 참여하는 여러 가지 방향의 통일교육이 실시됨으로 해서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의 실질적 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통일교육 역시 피교육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참여를 전제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통일교육의 실시가 요망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이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불구하고 대부분이 정부나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과 중앙집중적으로 시행되어 지방에서는 통일교육의 수혜나 교육에 대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단체, 학교와 사회 각 부분이 공동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통일교육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에 기초하고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통일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답습되고 있다는 점을 실패러다임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유연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교육을 시행한다는 실패러



다임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반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정립과 교수법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재 까지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내용의 통일교육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새로운 교수법에 의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사고에 의한 통일교육의 시행이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합하는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연대를 통하여 중복되고 반복되는 통일교육을 지양하고 새로운 통일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범정부차원의 가칭 ‘시민정치교육본부’를 설립하여 이 기관이 통일교육을 위한 교육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기구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을 지향하게 하고 현재의 16개 시도에 지부를 결성하여 정부주도 및 중앙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통일교육을 보완하여 효과성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보론

독일 신 연방주에서의  
정치교육과 학교교육: 작센 주와  
브란덴부르크 주를 중심으로



## 1. 서론: 연구의 취지와 목적 및 방법

독일의 통일이 공식적으로 성취된 후 15년이 지나가고 있다. 역사 일반의 본질적 특수성으로 인한 일반화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일은 분단 극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통일의 가능성과 희망을 불러 일으켰는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일 통일의 난제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가 등장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한 과학적 예견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은 또한 우리에게 통일을 대비 내지는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심어주게 되었지만, 통일은 여전히 예측불가능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에 대한 회의와 예측불가능성 및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통일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며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독일통일이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평화통일과 흡수통일과 관련하여, 평화통일이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없는 일반적 철칙으로 수용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한 일이지만, 흡수통일 문제는 우리의 통일정책이 양면성을 띠도록 강요하고 있다. 즉,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초는, 화해협력정책과 평화공존정책이 확인시켜주듯이, 원칙적으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우리가 통일을 계획 내지 관리의 대상으로 포착하면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정책의 양면성은 통일교육의 양면성과 결부되어 있다. 즉 통일교육 역시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원칙적으로 흡수통일의 필요성을 교육적으로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그의 가능성에 준비하는 교육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획에서 이를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 인프라, 즉 남측의 통일교육 인프라를 남과 북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안목을 개발

하는 것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조건이 형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궁극적으로 남북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목적 자체의 필요성과 정당성에는 이의가 없겠지만, 통일의 조건은 통일교육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즉, 통일교육의 방향성, 체계, 내용, 방법은 통일의 조건이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은 두 가지 통일의 조건을 놓고 각각의 대안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의 조건은 독일과 같이 흡수합병의 불가피성이 배태하는 통일의 조건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의 통일 상태인 남북연합을 통해 형성되는 통일의 조건이다. 통일의 조건이 사실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지만,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구상하는 것은 통일교육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진은 통일된 독일의 신연방주(구동독주)에서 교육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를 조사하는 기획을 하게 되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신연방주에서의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특히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주요 교육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또 어떠한 교육방법을 구사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통일교육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5개의 신연방주 중에서도 작센(Sachsen)과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를 선택하여 사례조사를 하였다. 사례조사는 양 주의 정치교육센터(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을 방문하여 담당자와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입수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진은 이를 통해 양 주에서 정치교육센터가 어떠한 방식과 구조로 설립되었고, 무슨 목적을 지향해 오고 있으며, 수행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려고 했고, 추가적으로 구동독의 학교교육체제 개혁에서 사회교과의 개편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또 이를 담당할 전문교원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데에도 관심을 두었다.

본 조사가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지향한다는 점, 더욱이 흡수통일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본 조사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흡수통일을 정당화한다는 의혹이나 오해를 낳을 지도 모른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우리는 독일의 신연방주들에서의 정치교육사례가 우리의 통일이후 통일교육만을 위해 교훈적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 자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의 조사가 독일의 모든 신연방주에서 실시된 것이 아니고 분석에 사용한 자료들 역시 상호비교가 곤란한 점이 많아 일반화의 개연성이 적은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교육기관이 독립성을 견지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전개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것들은 우리의 통일교육과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을 위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독일 신연방주에서의 그러한 장점은 결국 구서독에서 발달된 정치교육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미리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서도 통일이후의 통일교육 역량은 곧 통일이전의 통일교육 역량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 2. 작센 주에서의 정치교육과 학교교육

### 가. 정치교육센터

#### (1) 설립과 목적

작센 정치교육센터가 드레스덴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1991년 7월 1일인데, 그를 위한 초석은 작센의 파트너 주(Land)인 서독 바덴-뷔템베르크(Baden-Wuerttemberg)의 정치교육센터에 의해 놓여진다. BW 정치교육센터는 이미 1990년 초 “작센 사무소”를 열고

교육행사들을 시행하는데, 이를 담당했던 (직원 중) 2인의 직원이 후에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인력으로 전환된다. 1992년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인력은 8인으로 증가하는데, 그 중 절반은 구동독 출신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2005년 현재 총 24명의 직원이 작센 정치교육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설립이 BW의 정치교육센터의 지원과 지도를 받게 되면서 작센의 정치교육은 BW의 정치교육센터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비록 BW 정치교육센터의 경험과 노하우가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과업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과업의 중점은 작센 정치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실행되었다.

작센 정치교육센터는 초기에 작센 주정부의 직속관청(Staatskanzlei) 산하에 있었는데, 1995년 초에 문교부 소속으로 이전한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센터의 조직 역시 3개의 과를 갖춘 전문적인 구조로 재편된다.<sup>49</sup>

독일의 연방 및 주의 정치교육센터가 추구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적 규범과 제도에 비판적으로 동화하는 교양과 능력을 자발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돕는, 요컨대 민주시민의 양성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정치교육센터는 시민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도 부차적인 목적을 둔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경험했던 신연방주들에 있어서 정치교육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교육이 남긴 부산물과 대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주요 목적 역시 작센 인을 민주시민으로 교양시키는데 있고, 이를 위해 센터는 ① 정치 교양을 위한 지식을 매개하고, ② 비판능력과 의사형성을 촉진·지원하며, ③ 정치적 참여를 동기화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sup>50</sup> 그런데 이러한 목표 설정에는, 본 센

<sup>49</sup> W. Rellecke,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p. 225~226.

<sup>50</sup> W. Rellecke,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p. 224~225.



터의 출판 및 공론 담당자가 역설하는 바와 같이, 신연방주라는 특수성으로부터 유래하는 3가지 배제원칙이 내재하고 있다. 첫째, 지시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nicht indoktrinieren), 둘째, 강압적인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되며(nicht ueberwaeltigen), 끝으로 편파적인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nicht einseitig sein)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작센 정치교육센터는 정치교육의 초당파적 원칙을 견지하면서 타율적 양육이 아니라 자율적 교양(도야)에서 정치교육의 근본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배제원칙은 정치교육이 일반적으로 견지해야 할 철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센의 경우 그것은 특별히 과거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이 시행했던 방법을 배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 (2) 조직구조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센 정치교육센터는 주정부 문교부(Kultusministerium)의 산하에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적 관계에서의 위계 일뿐 센터는 정치교육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즉, 센터는 행정적으로 주의 문교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정치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거나 사업의 순위를 정하는데 있어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정치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별도의 독립적 감독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매년 4번의 회의를 통해 정치교육의 내용적 균형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감독기구는 2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1인은 주 의회의원이고 10인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다.

작센 정치교육센터에서는 인력관계상 지도부와 행정부서가 통합되어 있고, 사업별로 편성된 3과가 조직적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과에는 행사를 담당하는 2개의 과와 출판 및 공론업무를 전담하는 과로 나뉘져 있는데, 행사를 담당하는 과는 다시 교육대상그룹별로 3개의 전문부서(사회운동단체·남녀평등 담당, 청소년 담당, 공직 담당)로 나뉘진 과와 교육주제별로 3개의 전문부서(지역학·시대사 담당, 경제·환경 담

당, 유럽·국제 담당)로 짜여진 과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출판 및 공론업무를 담당하는 과에는 도서관 운영과 구동독사를 정리하는 업무도 할당되어 있다.<sup>51</sup>

### (3) 주요 과업 및 프로그램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주요 과업 및 프로그램은 크게 출판사업과 행사개최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출판사업은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구입해 배부하는 출판물과 자체 출판물로 나뉘지는데, 구입 배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독일 관련 주제와 개별적 정치분야 관련 주제이고, 자체 출판은 주로 작센 관련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표 1>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출판내역(1995)

주제	총	구입		자체 출판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작센	22,683	1980	3.9	20,703	44.73
독일	26,230	18,250	36.4	7,980	17.24
유럽연합	5,950	5,950	11.9		
지역학	10,084	5,084	10.2	5,000	10.81
정치교육	4,200	1,200	2.4	3,000	6.48
정치이론	2,510	2,510	5.1		
개별적정치분야	24,627	15,027	30.1	9,600	20.74
총	96,284	50,001	100	46,283	100

출처: Jahresbericht 1995, pp. 44~45.

작센 정치교육센터가 개최하는 프로그램은 목표대상별 및 주제별로 분화되어 있다. 우선 그것은 여성, 청소년, 교원 등 목표대상별로 분화되어서 기획되고 실행된다. 또한 프로그램은 지역학과 시대사, 유럽 및

<sup>51</sup> W. Rellecke,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 226.

국제적 문제, 경제 생태 환경을 주제화한다. 프로그램의 진행방법 역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세미나, 포럼, 연수여행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됨으로써 시민친화성을 제고한다.

개최되는 모든 행사가 센터가 단독으로 주체하는 것은 아니다. 센터는 교회, 노조, 재단, 시민단체 등 이른바 자유로운,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freie Traeger)가 준비하는 행사를 지원하여 센터의 행사로 주관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지원은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방침을 제공하는 정도의 지원에 머무른다.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는 센터가 아니라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센터와는 재정적으로 무관하다. 즉,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는 지원금은 주 정부로부터 받고 행사는 센터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 수행단체가 비록 지원금을 주 정부로부터 받기는 하지만, 그것은 행사내용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을 용인하는 대가는 아니다.

작센 정치교육센터은 초기에 지역사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었다. 이것은 시민들의 사회주의적 정치교육에 대한 적대감을 고려하여 정치적 주제를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와 지역사를 배제했던 중앙집권적 동독사 취급에 맞서 지역사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체성 확보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부터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아래 <표 2>는 지역학과 시대사를 주제화한 프로그램의 사례를 보여준다.

<표 2>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지역학과 시대사 관련 프로그램(1995)

일 시	장 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인원
2.06-09	라이프치히	역사문화의 대상으로서의 기념물	라이프치히 대학	역사학자, 대학생	23
3.20	라이헨바흐	종전 50년-우리와 아무 상관없을까?-포럼과 토론	없음	청소년, 지방정치인, 시대적증인	약180
3.23	헴니츠	동독역사의 정리 - 역사: 강압적으로 획일화된 사회의 징표	없음	개방	18
4.06	드레스덴	고몬다이 추모를 위한 영화초연	작센 외국인협의회	개방	약250
5.11	빌카우-하스라우	낭독과 토론회-“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개방	약120
5.08-12	뮌헨	중증신체장애청소년의 독-독 만남회합	드레스덴 신체장애청소년주립학교	신체장애청소년	9
5.29	마르크노이 키르헨	낭독과 토론회 - “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청소년	약 90
6.07-14	바덴-뷔텐베르크 /작센	작센과 바덴-뷔텐베르크의 만남세미나	바덴-뷔텐베르크연방정치교육센터	개방	34
6.19-23	튀링엔	“종전 50년” 글짓기대회 수상자여행	없음		12
8.07-08	플라우엔	낭독과 토론회 - “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330
8-11 (7회)	헴니츠, 괴얼리츠,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아우쉬비츠	작센 도시들에서의 유대 흔적 찾기	괴얼리츠기독교교육기구, 괴얼리츠기독교-유대교협회	청소년, 역사학자, 교원,관심자	45
9.11	월스니츠	낭독과 토론회-“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150
9.29	츠빅카우	낭독과 토론회-“종전 50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180

일 시	장 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 인원
9-11 (7회)	라이프치히, 베르다우, 월스니츠	구두 역사 - 여러 도시들 의 모델세미나 1. 피난과 추방 2. 1945이후 정치적 희망 3. 재건기의 신가치 지평	없음	시대적증인, 역사학자, 교원,청소년, 관심자	1.약 125 2.약 603. 약 150
10.09 -11	바트 엘스터	국경을 초월한 유로사용 지역 협동업무	SMI	지방 및 연방정치인,	34
10.10	드레스덴	작센의 역사와 현재	SMI; 양성교육과 연속교육 담당부서	동서독의 국가업무에 있어서의 작센의 젊은 사무원	24
12.02	드레스덴	작센 지역주민축제- 전통 과 혁신사이의 관습	작센 고향보호협회	전통담당자, 지역역사학 자, 관심자,	약120
12.08	로데비슈	낭독과 토론회-“종전 50 년” 글짓기대회를 맞아	없음	중고교학생, 개방	약 70

출처: Jahresbericht 1995, pp. 26~27.

## 나. 학교교육

### (1) 교과개편

작센의 학교교육체제는 통일 후 파트너 주(Land)인 BW의 학제를 모델로 해서 개편되었는데, Hauptschule와 Realschule를 포괄하는 중등학교(Mittelschule)와 김나지움이 중등교육 학제의 두 축을 이룬다.

통일 후 교육제도의 개혁에서 학제 개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은 교과목의 개편이었다. 학제 개편은 사실상 교과개편 만큼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교과목의 개편을 볼 때 구동독의 이른바 “국민교과(Staatsbuergerkunde)”가 민주주의적 장치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교과(Gemeinschaftskunde)”로 개편되었다. 공동체교과는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과명과 이름이 같은 공동체론, 법론, 경제론이라는 3개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체론과 법론은 중등학교와 김나

지움 모두에서 가르치는데 비해 경제론은 김나지움에서만 교육한다.

중등학교에서의 공동체론의 중점은 자유민주적 공동체의 원리, 정치체제의 법적 및 민주주의적 원리와 연방주의적 국가구조 속에서의 정치체제의 정치적 및 사회적 기능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있다. 법론의 경우 연방 기본법과 작센 주 헌법의 근본적 가치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리고 김나지움의 경우 중급반에서는 공동체론, 법론, 경제론이 모두 독자적인 과목으로 교육되고 고급반에서는 사회과학적 과제영역에서 훈련과목으로 특수하게 취급된다.<sup>52</sup>

## (2) 교원교육

통일 후 교육개혁에서 가장 큰 난제는 교원을 확보하는 일이었다. 특히 공동체교과의 경우 공민교과를 담당했던 구동독의 교원을 배제해야만 했기 때문에 교육능력을 갖춘 교원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교과의 교육은 처음에 비전문적 교원이 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문교부는 1991년부터 BW 주정부의 학문예술부, 기타 대학교와 연방 및 작센 정치교육센터와 협력하여 교원 연속교육(Fortbildung)과 확장교육(Weiterbildung)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아래의 <표 3>은 1995년 작센 정치교육센터가 주관한 교원연속교육의 프로그램 내역을 보여준다.

---

<sup>52</sup> W. Buerger/R. Kunde/R. Tramm, "Saechsische Gemeinschaftskunde in der Lehrerfort- und -weiter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p. 231~233.

<표 3> 작센정치교육센터의 교원연속교육 프로그램(1995)

일시	장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인원
2.13-2.17	코세바우데	사회과 교원훈련	연방정치교육센터	사회과 향상교육과정 수료자	26
2.16 / 23 4.03 / 27	드레스덴	중등학교 사회과 교원 양성교육시리즈	없음	중등학교 교원	25
2.24	드레스덴	주 의회에서의 주 정치	작센 주 의회	교원	25
3.08-10	드레스덴	교원 교육방식 훈련	없음	사회과 교원 위주	28
3.16	드레스덴	폭력성과 그의 극복	주 수사관청	9-10학년 사회과 교원 위주	10
3.23	라이프치히	수업중의 토론	없음	김나지움과 중등학교의 전문교원	12
3.27-31	본	서독의회제도의 참의원과 연방주의	본 연방의사당	사회과 교원 우선	35
4.05-07	크리펜	유럽에 관한 수업	라이프치히 유럽의 집	교원	6
4.11	헴니츠	수업중의 토론	없음	전문교원	10
4.24-26	베를린	통독 후의 베를린	없음	학생	15
5.17	드레스덴	주 의회에서의 주정치	작센 주 의회	교원	15
9.19	드레스덴	배심재판소 형사소송절차	없음	교원	26
9.30 -10.01	마이센	학교수업에서의 의회와 정부	정치교육을 위한 독일통일센 터 작센주연합	사회과와 역사과 교원	28
10.9-13	코세바우데	사회과 교원훈련	연방정치교육센터	중등학교 사회과 향상교육과정 수료자	22

일시	장소	행사명	행사파트너	목표대상	참가인원
11.2-3	드레스덴	지방자치단체 민주주의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없음	사회과 교원, 게마인데와 지역고문단, 시민단체활동가	20
11.15-17	크리펜	유럽통합-어떻게 전달할까?	라이프치히 유럽의 집	교원	20
11.23-24	그라우파	바그너의 니벨룽겐의 반지 음악에서의 정치	없음	음악과 및 타 교원, 관심자, 바그너 애호가	12
11.26-12.01	취리히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없음	사회과와 역사과 교원, 대표자, 시민대표	26
12.14	드레스덴	작센 주 의회	작센 주 의회	교원	22

출처: Jahresbericht, pp. 20~21.

교원 확장교육은 비전공 교원에 의한 수업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했고, 지속적인 교원 확장교육의 결과로 2001년까지 524명의 공동체교과 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1998/99년 학기 이후 김나지움의 고급반에서는 비전공 교원에 의한 수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 3. 브란덴부르크 주에서의 정치교육과 학교교육

#### 가. 정치교육센터

##### (1) 설립과 목적

작센 정치교육센터의 설립에서와 같이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설립도 서독의 파트너 주(Land)의 도움을 받았는데, 브란덴부르크의 경우 노트라인 웨스트팔렌(NRW)의 정치교육센터로부터 인력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았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NRW의 지원과 지도



의 결과 1992년 가을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는 조직적 및 인력적 구조를 갖추고 설립하기에 이른다.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가 지향하는 목적 역시 민주시민의 교양을 함양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두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적 제도와 법치국가적 구조의 운용에 전제가 될 지식을 매개하는 일, 정치적 무관심 해소를 위한 노력과 함께 책임지는 정치적 행동을 양성하는 일, 그리고 다원주의적 논쟁문화와 민주주의적 결정과정에서의 참여를 양성하는 일로 구체화된다.<sup>53</sup>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그리고 브란덴부르크가 보유한 특수성은 정치교육센터의 설립과 과업방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특수성은 다음의 4가지 사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54</sup>

첫째, 구동독 출신의 시민운동가(Dr. H.-J. Misselwitz)가 센터 설립을 위임받음으로써 서독의 기본법이 표방하는 민주주의 질서원리와 함께 구동독의 시민운동정신을 센터의 토대로 결합해 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는 서독 정치교육센터의 단순한 복사판이 아니라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브란덴부르크의 초기 주정부가 사민당, 녹색연합, 자민당의 연정(Ampelkoalition)으로 구성됨으로써 센터가 정치적 초정당성, 중립성을 견지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았다.

셋째, 브란덴부르크의 광대한 면적(29,500km<sup>2</sup>)은 특히 주 수도인 포츠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게 했다. 그리하여 센터는 교육기능을 담당하는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freie Traeger)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을 센터의 중점사업

<sup>53</sup> 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 98.

<sup>54</sup> 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 98.

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끝으로 센터는 예술 및 문화를 정치교육의 내용 및 방법으로 활용함으로써 이를 센터의 특징적 프로필로 발전시켰다.

## (2) 조직구조

브란덴부르크의 정치교육센터도 작센의 그것처럼 초기에는 주정부 직속관청(Staatskanzlei)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서 2000년에 이르러서야 주정부의 교육·청소년·체육부 산하로 이전한다. 거기서 센터는 장관과 부지사의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독립성을 견지한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12명에 불과하고(2003), 조직구조는 5개의 업무분야(정치매개, 전시, 출판, 신(新)매체, 그리고 외부 사회교육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는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경우 자문위원회가 잘 조직되어 있다. 자문위원회는 1994년 주 의회의 위원회로 출발하였지만 2001년 주 의회 밖으로 나와 현재의 자문위원회로 재편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정치교육의 초정파적 독립성이 견지되도록 하는 기능과 더불어 정치교육의 기획과 실행에도 조언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3인의 주 의회의원, 교육에 관련된 1인의 학자와 1인의 지방정부 정치인, 그리고 주지사도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sup>55</sup>

## (3) 주요 과업과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프로그램은 작센의 그것과 비교해서 목표대상별 분화보다 지역별 분화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은 광대한 면적의 교육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sup>55</sup> 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p. 99~100.

브란덴부르크의 프로그램 역시 작센의 경우만큼 주제별로 다양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4>에서 보듯이 다양한 프로그램 주제 중에서 정치교육 자체를 주제화한 행사는 10~13건에 지나지 않아 비중이 적고 그 대신 과격주의·폭력·외부인 적대성, 정치와 사회·세계관, 역사를 주제화한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주제영역별 행사현황

주제영역	행사 수	
	2001	2002
과격주의, 폭력, 외부인 적대성	69	34
정치와 사회, 세계관	56	35
역사	55	48
유럽연합	24	16
정치체제, 민주주의, 법질서	21	33
안보, 국제 관계	16	18
생태, 소비자보호	14	14
정치교육	13	10
시민참여, 시민사회	11	17
지방정치	11	5
경제와 복지	8	4
브란덴부르크	3	12
이행 및 독일통일	2	2
전체	303	248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과업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센터가 자체 사업보다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freie Träger)와의 협력과 지원사업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행주체에 대한 지원액이 센터 자체의 예산지출액보다 현저하

게 많다. 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센터의 예산이 점점 감소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센터는 2002년의 경우 자체 예산지출액을 줄이고 수행주체 지원액을 가능한 한 삭감하지 않도록 하면서까지 단체지원에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표는 또한 센터가 수행주체에게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각센의 경우와 비교되는 점이기도 하다.

<표 5> 브란덴부르크 예산 사용내역(단위: 유로)

구분		2000	2001	2002
수행주체 지원예산	예산안	1,007,245	1,007,245	956,200
	지원액	937,864	936,399	820,688
센터 예산	예산안	232,586	232,638	205,500
	지출액	214,625	213,404	149,615

브란덴부르크 정치교육센터의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와의 지원과 협력은 단체지원에 관한 제도적 규범을 발전시키게 했다. 센터는 사회교육 수행단체의 지도자들에게 훈련세미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의 교육시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회교육 수행단체에 대한 센터의 지원과 협력이 제도화되어 있음은 특히 단체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문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매개함
- 시대사적 주제, 특히 국가사회주의와 동독 사회주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촉진 지원함
- 반민주주의적 및 과격주의적 행태에 반대하는 계몽을 촉진 지원함
- 문화적 및 인종적 소수에 대한 선입관을 제거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 지원함
- 국제적 관계의 전개와 평화보호 문제, 그리고 유럽의식의 강화를

위한 이해와 지식을 매개함

또한 센터는 수행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단체가 설정한 행사 목적, 행사의 내용적 균형성, 그리고 행사의 방법적 다양성을 선발기준을 위한 지표로 삼고 있다.<sup>56</sup>

## 나. 학교 교육

### (1) 교과개편

브란덴부르크 학교교육의 개혁과정에서 구동독시대에 획일적으로 명명되었던 “공민교과”는 새로운 교과의 내용과 교육적 성격을 그대로 표현하는 차원에서 “정치교육” 교과로 개명되었다. 학교 정치교육은 민주주의적 정치교육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민주주의적이라 함은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배움을 교육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주정부의 교육·청소년·체육부는 학교 교원들이 무비판적인 전달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비판과 논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과 합의 능력을 양성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소년·체육부는 학교 정치교육의 주요 내용을 두 차원에서 안내했는데, 그것들은 한편으로 하나의 공동의 세계를 위한 평화와 생태적 및 사회적 책임을 교육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 직업생활, 사적인 영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sup>57</sup>

<sup>56</sup> W. Kuenzel & M. Weyrauch,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2003), pp. 102~105.

<sup>57</sup> H. Rohmer-Staenner & H.-J. Huschka, “Schulreform im Land Brandenburg -Das Beispiel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2003), pp. 106~107.

## (2) 교원양성

작센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란덴부르크의 정치교육 교과개편에서도 무엇보다 수업을 담당할 전문교원을 확보하는 난제에 봉착했다. 여기서의 정치교육도 초기에는 비전문교원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당시 정치교육 교과를 수업할 수 있는 전문교원 수요는 1,500명에 달했는데, 1991년부터 베를린과 포츠담 대학교에서 가동된 교원 확장교육 프로그램과 1994~95년부터 1999~2000년까지 주정부가 주관하여 실행한 교원 확장교육 프로그램의 결과 1,000명의 정치교육 전문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로써 교원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의 수가 감소한 것도 일조를 했다.<sup>58</sup>

## 4. 요약 및 시사점

위에서 서술한 조사는 통일독일의 5개 신연방주들 중 작센과 브란덴부르크를 중심으로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에서의 정치교육의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본 조사는 우선 신연방주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정치교육의 경우 그 변화를 사회과 교과개편과 교원양성에만 국한하여 실시한 것도 본 조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우리의 통일이전 및 통일이후의 통일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첫째, 양 주에서의 정치교육센터가 설립되고 설정된 목적에 따라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초기단계에서 각 주의 구서독 파트너 주의 지원과 지도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오랫동안 축적된, 구서독 주 정치교육센터의 체계적, 내용적, 방법적(교수법적) 역량이 구동독 주로 전수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구동독 주에서의 정치교육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

<sup>58</sup> H. Rohmer-Staenner & H.-J. Huschka, "Schulreform im Land Brandenburg - Das Beispiel Politische Bildung," (2003), pp. 107~109.

것은 주 정치교육센터였고, 연방 정치교육센터는 간접적으로만 관여했다. 이로부터 우리는 우선 독일의 정치교육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통일교육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 차원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과의 파트너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둘째, 두개 주의 정치교육이 비록 파트너 주의 영향을 받기는 했어도 그것은 결코 서독의 정치교육 모델을 그대로 복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었다. 이는 부분적으로 독일의 연방주의적 질서로부터 나온 결과이지만, 구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이 수요자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적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이 낳은 결과라는 점이 보다 중요한 차원이다. 이를 통해 구동독에서의 정치교육은 과거 사회주의가 실시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교육철학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고, 이는 정치교육의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정치교육센터든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든 정치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가능한 한 최대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센터는 주 정부의 조직적 산하기관으로서 재정적으로 주 예산에 의존적이지만 정치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독립성은 센터의 정치교육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토대이기도 하다. 또 다른 차원의 독립성은 센터와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와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외부 수행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은 주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센터는 수행단체와의 관계에서 교육내용이 정치교육 목적에 일치하는가 또는 정치적 중립성이 견지되는가 등 최소한의 정도에서 방침을 제공하기는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서 최대한의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다.

넷째, 정치교육센터의 외부 사회교육 수행주체와의 네트워크 운영

에서 배울 점이 많다. 이는 정치교육을 위한 민관협력관계의 한 성공적 사례로 분석할 수 있다. 협력의 농도는 주별로 다르다. 작센의 경우 그것은 비교적 보다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데 비해, 브란덴부르크의 경우는 지원 지침이 운영될 정도로 제도화되어 있다. 협력의 농도를 제외하고 볼 때, 그러한 파트너십은 정치교육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 일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 정치교육에 있어서 국가적 기관의 기능과 위상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외부 단체의 정치교육시장 진입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교육도 민간 통일교육 수행단체와의 지원 및 지도를 병행하는 협력관계를 보다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연방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독일 정치교육센터가 제공하는 풍부한 프로그램과 구사하는 다양한 교수법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통일교육은 아직도 목표대상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지 못하고, 주제별로 풍부하게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며, 교수법에서도 궁핍한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다른 주제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끝으로, 독일 신연방주 학교교육 개혁은 정치교육의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보였고 풀기 어려운 난제를 제공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사회과 개편은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사회과를 청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교과명은 주마다 다르지만, 새로운 교육내용을 새로운 교수법으로 교육할 전문교원을 확보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도 각 주는 독자적인 교원 연속 및 확장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했지만 주 정부간 및 주 정부와 각종 교육기관 간의 협력관계가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고정식 외.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교육부. 『사회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교육부. 『도덕과 교육과정』.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 김동규 외. 『남북한관의 의식조사와 통일교육 개선방안』. 서울: 집문당, 2001.
- 김창환 외. 『독일의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태 분석』. 서울: 통일부, 2002.
- 문용린 외.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연구 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 1995.
- 박병석. 『독일 정치교육의 의미·과제·실행체계』. FES-Information-Series. Friedrich Ebert Stiftung, 2004.
- 박찬석 외. 『통일교육론』. 서울: 백의, 2000.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도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2002.
- 신두철. 『독일의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한·독 사회과학논총. 제15권 제1호』. 2005.
- 윤웅삼 외. 『즐거운 초등학교 통일교육』. 서울: 통일교육원, 2003.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교육위원회. 『이겨레 살리는 통일』.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판부, 2001
- 제성호. 『통일관련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 추병완. 『통일교육』. 서울: 하우, 2002.
- 통일부. 『2005 학교통일교육 기본 지침서』. 서울: 통일부, 2005.
- 통일교육협의회. 『민간단체의 사회통일교육 현황 -통일교육협의회와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2004.
- 통일교육협의회. 『2004 통일교육 사례발표』. 2004.

통일부. 『2005 통일백서』. 2005.  
 통일부.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년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1.  
 한만길 외.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3.

Beer, W. “Politische Bildung Kommunizieren: Marketing fuer ausserschulische Bildung.” W. Sander(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Bonn: BfPB, 2005.

Buerger, W. & Kunde, R. & Tramm, R. “Saechsische Gemeinschaftskunde in der Lehrerfort-und-weiter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2003.

Detjen, J. “Die wissenschaftliche Politikdidaktik als Leitdisziplin der politischen Bildung.” G. Breit/S. Schiele(Hg.). *Demokratie braucht politische Bildung*. Bonn: BfPB, 2004.

Kuenzel, W. & Weyrauch, M. “Die Brandenburg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2003.

Rellecke, W. “Die Saechsische La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2003.

Rohmer-Staenner, H. & Huschka, H.-J. “Schulreform im Land Brandenburg -Das Beispiel Politische Bildung.” K. P. Wallraven(Hg.). *Handbuch politische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enden*. Schwalbach:

Wochenschauverlag, 2003.

<<http://www.tongiledu.org>>.

<[http://tongiledu.org/new/one\\_html/index.php?menu\\_id=4](http://tongiledu.org/new/one_html/index.php?menu_id=4)>.

<<http://www.acdpu.go.kr>>.

<<http://www.bpb.de>>.

<<http://www.kinu.or.kr>>.

<<http://www.unikorea.go.kr>>.

<<http://www.uniedu.go.kr>>.

<<http://www.uniedu.go.kr/profile/schedule06.jsp#map01>>.

<<http://www.uniedu.go.kr/profile/organization.jsp>>.



## 부록: 통일교육 설문 분석

### I. 조사방법과 응답자의 특징

#### 1. 조사내용과 방법

이 조사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게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기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통일관을 포함하여 통일교육 실시내용과 교육분야, 통일교육 자료획득 방법,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 통일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통일관과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통일의 속도, 북한·통일문제 관심도, 정부의 대북정책 인지도, 북한의 신뢰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 대상 국가 등 5개의 문항을 질문하였다. 통일교육 경험과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경험 유무와 평균 시간(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통일교육 회수), 역점 통일교육 내용, 통일지향과 대비교육의 비중, 통일교육 방법, 수강생의 관심도를 질문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한 질문을 첨가하였다. 통일교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통일교육 수강 경험 유무, 통일교육의 도움 정도, 북한·통일 관련 정보 획득 방법, 바람직한 통일교육 주관기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등을 다루었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중등학교의 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고,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자료이다. 조사의 모집단은 통일교육원에서 지난 5년 동안 통일교육을 받았던 중등학교 교사(교장·교감 포함)와 통일교육원에서 위촉한(하였던) 통일교육위원(전문위원)이다. 표본은 교사의 경우 지금까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명부에서 추출하였다. 통일교육위원의 경우 2005년도 신규 위촉자와 과거 위촉자를 대상으로 하여 추출하였으며, 표본의 수는 교사와 통일교육(전문)위원 각각 800명으로 합계 1600명이다.

질문지는 조사내용에 부합하는 질문을 폐쇄형(closed-ended)으로 작성하였으며, 각 질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하는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방식을 택하였다. 설문은 우편을 통해 우송·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05년 8월 초에 2회에 걸쳐 질문지를 우송하였고 9월 초까지 회수된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지를 우송한 후 5~7일 후에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우송된 질문지 중 약 63.1%인 1,009매가 회수되었다. 이중 교사가 539명으로 응답률이 67.3%, 통일교육위원이 470명으로 58.8%의 응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기재가 부실한 4개를 제외한 1,005매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응답 내용을 컴퓨터 통계패키지인 SAS로 처리하여, 교차표를 작성·해석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 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간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항목별로 카이제곱( $\chi^2$ ) 검증을 실시했으며,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항목에 대해서는 결과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 2. 응답자의 특징

### (1) 교사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응답자는 남자가 364명으로서 전체의 68.2%를 차지하고 여자가 170명으로서 31.8%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와 비교해 볼 때 남자가 과잉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학교현장의 통일교육 교사는 여자가 더 많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은 20대가 20명으로 전체의 3.8%, 30대가 51명으로 9.6%, 40대가 192명으로 36.0%, 50대가 211명으로 39.5%를 차지하며, 60대도 60명으로 11.2%를 차지한다. 이렇게 봤을 때, 설문 응답자의 연령은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으며 둘을 합해 절대 다수인 75.5%를 점하고 있다.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가 118명으로 22.1%이며 고등학교가 77.9%로서 고등학교 교사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나누어 보면, 인문계고등학교가 45.1%이고 실업계고등학교가 23.2%, 그리고 기타가 9.6%로서 설문 응답교사는 주로 고등학교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에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교의 소재지를 보면, 서울·인천·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이 전체의 31.1%로 가장 많고, 영남권이 25.6%, 호남권이 14.2%, 충청권이 17.6%이며, 기타 강원도와 제주도가 합해서 11.6%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분포를 감안해 볼 때 수도권이 과소대표되어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교사들의 전공은 사범계열이 80.5%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비사범계열은 19.5%이다. 사범계열 중에서도 ‘기타 사범계열’이 전체의 43.0%를 점하는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전공은 다양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기에서 선택한 전공을 기준으로 보면, 윤리(도덕) 전공이 17.2%로 가장 많고, 일반사회교육(8.5%), 역사교육(6.4%), 그리고 지리교육(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교육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가 36.7%이며 진보가 26.4%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간 성향은 34.8%이다. 이는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간으로 균등분포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교사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교사보다 약 1.5배 많은 특징을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1.9%이며,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34.8%이다. 반면 ‘매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1.7%이며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4.7%이다. 이런 정치적 성향은 일반 교사의 정치적 성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교사)

변수	속성	빈도(명)	비율(%)
성	남자	364	68.2
	여자	170	31.8
연령	20대	20	3.8
	30대	51	9.6
	40대	192	36.0
	50대	211	39.5
	60대	60	11.2
학교	중학교	118	22.1
	인문계고등학교	241	45.1
	실업계고등학교	124	23.2
	기타	51	9.6
소재지	서울인천경기	164	31.1
	영남	135	25.6
	호남	75	14.2
	충청	93	17.6
	강원/제주	61	11.6
전공	일반사회교육	45	8.5
	역사교육	34	6.4
	지리교육	28	5.3
	윤리(도덕)교육	91	17.2
	기타 사범계열	227	43.0
	비사범계열	103	19.5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	10	1.9
	보수적	185	34.8
	중간	196	36.9
	진보적	131	24.7
	매우 진보적	9	1.7



## (2) 강사

이 설문에 응답한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듯이, 사회통일교육 강사는 남자가 409명으로 88.1%이고 여자는 55명으로 11.2%로서, 남자가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응답비율이 모집단의 성별 구성을 반영한다고 보면, 사회통일교육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주로 40대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40대가 4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60대 이상으로 32.1%이며, 50대는 18.3%이다. 20대는 1.1%에 불과하고 30대도 5.6%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의 성격상 주로 중장년층에 강사가 집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강의하는 곳은 민간단체가 가장 많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가 85.3%로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이 9.7%, 정부기관이 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41.2%로 가장 많고 영남(19.5%), 호남(16.7%), 충청(13.7%), 강원과 제주(8.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적 분포는 대체로 우리나라의 인구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학력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응답자가 71.2%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대학졸업 이상을 고등교육 이수자로 분류할 경우, 고등교육을 이수한 강사는 대학(18.5%), 대학원 중퇴(2.8%), 그리고 대학원 졸업(71.2%)을 합해 92.5%에 달한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정치적 성향은 일반 학교 교사의 정치적 성향과 유사한 비율로 분포되고 있는데,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35.6%, ‘중도’가 39.2%, 그리고 ‘진보적’이 25.3%이다.

<표 2>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강사)

변수	속성	빈도(명)	비율(%)
성	남자	409	88.1
	여자	55	11.2
연령	20대	5	1.1
	30대	26	5.6
	40대	199	42.9
	50대	85	18.3
	60대	149	32.1
강의기관	정부기관	23	5.0
	민방위교육	45	9.7
	민간단체	393	85.3
거주지	서울인천경기	192	41.2
	영남	91	19.5
	호남	78	16.7
	충청	64	13.7
	강원/제주	41	8.8
학력	고졸 이하	15	3.2
	대학중퇴	20	4.3
	대학졸업	86	18.5
	대학원 중퇴	13	2.8
	대학원 졸업	331	71.2
정치적 성향	매우 보수적	5	1.1
	보수적	162	34.5
	중간	184	39.2
	진보적	109	23.2
	매우 진보적	10	2.1

## II. 자료 분석

### 1. 통일관

통일관과 관련한 질문은 모두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학교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 모두에게 적용되었다. 질문은 바람직한 통일의 속도, 북한·통일문제 관심도, 북한관(북한의 신로도 평가), 국제관(통일을 위한 협력대상국), 그리고 정부정책 인지도와 관련되어 있다.

먼저 통일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해 질문해 본 결과, 응답자들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사와 강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 있지 않다(<표 3> 참조). 구체적으로, ‘당장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0.5%, ‘가급적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7.3%, ‘점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9.8%, ‘가급적 늦게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0.1%이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들은 통일은 바람직하되 서두르기보다는 통일의 부작용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바람직한 통일 속도

(단위: %, 명)

	당장 통일	빨리 통일	점진적 통일	늦게 통일	통일 반대	계
교사	0.4	16.8	81.2	1.5	0.2	100.0 (N=537)
강사	0.6	18.0	78.2	3.2	0.0	100.0 (N=468)
계	0.5	17.3	79.8	2.3	0.1	100.0 (N=1,005)
$df=4, \chi^2=257.47, p<0.0001.$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률은 ‘매우 관심이 있다’(54.6%)와 ‘관심이 있는 편’(33.7%)을 합해 88.3%에 달한다. ‘관심이 적다’거나 ‘없다’는 응답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표본 자체가 학교 또는 사회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북한·통일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관심 정도에 있어서 교사와 강사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교사의 경우 관심의 정도가 강사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 ‘매우 큰 관심’의 29.5%와 ‘관심 있는 편’의 48.5%를 포함하여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8.0%인 반면, 강사의 경우 ‘매우 큰 관심’에만 83.3%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4> 북한·통일문제 관심 정도

(단위: %, 명)

	매우관심	약간관심	보통	적은관심	관심없음	계
교사	29.5	48.5	20.4	1.7	0.0	100.0 (N=536)
강사	83.3	16.7	0.0	0.0	0.0	100.0 (N=468)
계	54.6	33.7	10.9	0.9	0.0	100.0 (N=1,004)
$df=4, \chi^2=257.47, p<0.0001.$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곧바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인지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겨우 과반수를 넘어서는 54.6%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표 4> 참조). 구체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인지도에 대해서 ‘잘 안다’는 응답은 12.5%이며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42.1%에 불과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4.1%이며 ‘잘 모른다’ 혹은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합해서 11.2%에 달한다.

대북정책 인지도와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교사의 경우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잘 안다’는 응답과 ‘잘 아는 편’이라는 응답은 교사의 경우 32.2%이며 강사의 경우 80.3%이다. 이렇게 볼 때, 강사의 경우 대북정책 인지도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교사의 경우 매우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 정부의 대북정책 인지도

(단위: %, 명)

	잘안다	잘아는편	보통	잘모르는 편	거의모름	계
교사	3.6	28.6	48.7	18.7	0.4	100.0 (N=535)
강사	22.8	57.5	17.5	2.3	0.0	100.0 (N=470)
계	12.5	42.1	34.1	11.0	0.2	100.0 (N=1,005)
$df=4, \chi^2=257.47, p<0.0001.$						

북한관과 관련하여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인 63.0%가 ‘동의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13.7%이며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49.3%이다. 이는 남북간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하여 북한이 일관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반면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관과 관련한 응답에서 교사와 강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교사는 60.1%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에 공감을 나타내는 반면 강사의 경우 66.2%가 공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 유보적 입장(‘잘 모르겠다’)이 15.2%로서 강사의 3.9%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차이로 보인다.

<표 6>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모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계
교사	11.6	48.5	15.2	21.9	2.8	100.0 (N=534)
강사	16.0	50.2	3.9	25.4	4.5	100.0 (N=464)
계	13.7	49.3	9.9	23.6	3.6	100.0 (N=998)
$df=4, \chi^2=257.47, p<0.0001.$						

통일의 국제관과 관련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협력해야 할 나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거의 모두가 ‘미국’과 ‘중국’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라는 응답이 66.6%, ‘중국’이라는 응답이 2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러시아라는 응답은 거의 없다(<표 7> 참조). 이는 개인적 가치관을 떠나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가장 큰 영향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의 표시로 보인다.

그러나 교사와 강사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교사는 61.8%가 미국을 그리고 29.6%가 중국을 일차적 협력 대상국가로 지적한 반면 강사는 72.2%가 미국을 그리고 24.9%가 중국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 설문 문항 하나를 가지고 교사와 강사간 국제관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다. 문항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듯이, 중국을 지적한 경우도 미국 일변도에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 중국과도 잘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차후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 나갈 필요가 있다.

<표 7> 국제 협력 대상 국가

(단위: %, 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름	계
교사	61.8	29.6	0.6	0.0	8.0	100.0 (N=513)
강사	72.2	24.9	0.5	0.0	2.5	100.0 (N=446)
계	66.6	27.4	0.5	0.0	5.4	100.0 (N=959)
$df=4, \chi^2=257.47, p<0.0001.$						

## 2. 통일교육 경험

이 조사의 모집단은 최근 통일교육원에서 강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도덕·사회과 교사이거나 혹은 사회통일교육에 참가하는 통일교육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표본에 포함된 교사나 강사는 대부분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조사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와 강사는 79.9%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교사와 강사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강사는 91.3%로 거의 대부분의 강사는 강의 경험이 있지만 교사의 경우 약 70.0% 만이 강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도덕·사회과 교사가 강의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학생들의 통일무관심 현상도 어느 정도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의를 어느 정도 자주하는지에 대한 조사는 강의를 실시했던 교사와 강사에 한하여 서로 다른 질문을 하였다. 교사의 경우 학기당 강의 시간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강사의 경우 연평균 강의 회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강의했던 경험이 있는 교사는 교과시간이 1~4간 그리고 교과외 시간은 1시간 미만과 1~4시간 사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8> 참조). 구체적으로, 교과시간에 강의를 한 교사의 경우 1~4시간 사이의 강의가 46.3%, 1시간 미만

23.4%, 5~9시간 강의가 19.2%, 그리고 10시간 이상은 11.1%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주관적이긴 하나 10시간 이상을 평균 15시간으로 잡고 1시간 미만은 0.5시간 그리고 기타는 중간을 평균시간으로 잡으면 교사의 교과시간 통일교육 강의는 평균 4.3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의 시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 1시간 미만과 1~4시간이 각각 45.3%와 44.0%로 가장 높고 5~9시간과 10시간 이상은 각각 6.4%와 4.4%로 나타나고 있다. 교과시간 평균과 같은 방법으로 교과의 평균강의시간을 계산하면 1.9시간이다.

<표 8> 학기당 강의시간

(단위: %, 명)

	1시간 미만	1~4시간	5~9시간	10시간 이상	계
교과시간	23.4	46.3	19.2	11.1	100.0(N=333)
교과외시간	45.3	44.0	6.4	4.4	100.0(N=298)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연평균 강의 회수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1~2회가 20.0%, 3~5회가 27.3%, 6~11회가 17.2%, 그리고 12회 이상은 35.5%가 강의를 실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표>로 제시하지 않았음). 거의 반수에 해당하는 47.3%의 강사는 2달에 1번도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 반면, 한달에 한번 이상 강의를 실시하는 강사는 1/3 수준인 35.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의미하며,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가 절실함을 시사한다.

사실 사회통일교육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부심을 비교적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회통일교육 강사로서의 자부심’은 ‘매우 높다’(31.6%)와 ‘높은 편’(52.7%)을 포함하여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8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부심이 낮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하다. 이런 자부심은 표본이 주로 교사와 교수 등 전문직 그리고 과거 통일



관련 행정을 수행했던 이른바 ‘통일전문가’로서 주관적이기는 하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강의 기회가 적음으로써 일종의 실망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통일교육 교사와 강사들은 어떤 내용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을까?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 모두 역점 통일교육 내용 그리고 통일지향과 통일대비교육의 비중 등 2개의 질문을 하였다.

통일교육 역점 내용은 <표 9>에 요약·제시되어 있는데, 통일교육 교사와 강사는 북한바로알기 및 평화공존의 필요성과 관련된 교육에 역점을 두는 비율이 가장 높고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과 통일의지 함양 순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바로알기에 역점을 둔다는 응답이 24.2%,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24.0%로 가장 높고,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이 22.7%, 통일의지 함양이 17.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안보의식 고취와 국제협력 증진은 각각 9.0% 및 2.9%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강사를 분리해 볼 때, 비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북한바로알기,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의지 함양, 그리고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비율이 높고 안보의식 고취 및 국제협력 증진을 역점적으로 교육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 북한 바로알기, 평화공존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의지 함양과 관련된 교육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에 대한 교육이 28.3%, 북한바로알기에 대한 교육이 24.7%, 평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20.4%이며, 통일의지의 함양이 17.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평화공존의 필요성, 북한바로알기,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통일의지 함양과 관련된 교육을 역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

화공존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이 27.1%, 북한바로알기 교육이 23.7%,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18.0%, 그리고 통일의지 함양이 17.2%로 나타나고 있다. 교사와 강사의 경우 모두 안보의식과 국제협력의 증진에 대한 교육은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국제협력의 증진과 관련된 교육이 교사의 경우 1.9%, 강사의 경우 3.8%로 매우 낮게 타나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 문제 등 통일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국제협력의 증진 등 이른바 ‘통일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적게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로 보인다.

<표 9>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역점을 두는 교육내용은?  
(복수응답)

(단위: %, 명)

	안보의식	북한알기	공동의식	통일의지	평화공존	국제협력	계
교사	7.7	24.7	28.3	17.0	20.4	1.9	100.0(N=647)
강사	10.1	23.7	18.0	17.2	27.1	3.8	100.0(N=760)
계	9.0	24.2	22.7	17.1	24.0	2.9	100.0(N=1,407)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교육(통일지향교육)과 통일이후에 필요한 교육(통일대비교육)의 상대적 비중과 관련해서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교사와 강사를 포함한 전체 비율은 통일지향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통일대비교육도 보완실시한다는 응답(지향>대비)이 전체의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통일지향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이 22.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반적으로 교사와 강사는 통일지향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대비교육에 중점을 둔다는 응답은 17.7%이며, 통일대비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지향교육도 보완한다는 응답은 7.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통일지향에 중점을 두는 것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매우 복잡함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0> 통일교육 중점 분야

(단위: %, 명)

	통일지향	통일대비	동등하게	지향>대비	지향<대비	계
교사	26.1	18.9	15.2	34.8	5.1	100.0(N=376)
강사	19.2	16.6	7.2	47.4	9.6	100.0(N=416)
계	22.5	17.7	11.0	41.4	7.5	100.0(N=792)
$df=4, \chi^2=29.04, p<0.0001.$						

통일교육자들은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실시할까? 통일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간 서로 다른 질문(질문은 동일하나 응답항목이 다름)을 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표 11>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통일교육은 학교와 사회를 막론하고 강의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토론 등 다른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거의 전적으로 강의와 토론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학교 교사의 경우는 비디오나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멀티미디어나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거의 전적으로 강의와 토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표 11> 교육방법 (복수응답)

(단위: %, 명)

	강의식	토론식	멀티미디어	시청각	체험학습	탐구수업	계
교사	41.1	16.9	27.9	-	9.6	4.5	100.0(N=616)
강사	43.6	25.0	-	19.7	11.8	-	100.0(N=748)

그러면 학생들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는가? 이에 대한 교사와 강사의 주관적 평가 결과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이 일반 성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매우 관심’(3.2%)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편’(27.0%)라고 응답한 교사는 불과 30.2%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관심이 ‘거의 없다’(2.4%)와 ‘무관심한 편’(32.5%)을 합쳐 관심이 없는 학생은 관심이 있는 학생보다 많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질문에 대해 강사에게 물어본 결과는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에 ‘매우 관심’이 있다(5.2%)와 ‘관심이 있는 편’(46.8%)를 합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2.0%에 달한다. 반면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매우 무관심’(0.9%)과 ‘무관심한 편’(16.2%)을 합쳐 17.1%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학교의 학생과 사회의 성인들간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은 통일에 무관심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12> 학생의 관심 정도

(단위: %, 명)

	큰관심	약간관심	보통	약간무관심	큰 무관심	계
교사	3.2	27.0	35.0	32.4	2.4	100.0 (N=374)
강사	5.2	46.8	30.8	16.2	0.9	100.0 (N=425)
계	4.3	37.6	32.8	23.8	1.6	100.0 (N=799)
$df=4, \chi^2=48.05, p<0.0001$						

그러면 통일교육은 의도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을까? 교사의 경우, 통일교육의 영향과 관련해서 6개의 질문 항목을 설정하였는바, 그 응답 비율은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교사들

은 자신들의 교육이 질문 항목 모두에 있어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매우 동의한다’가 9.7%, ‘동의하는 편’이 63.1%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72.8%에 달하고 있다. 이런 긍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에 임하는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각 항목별 평가는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실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고 있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13.6%)와 ‘동의하는 편’(77.1%)을 합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90.7%로 가장 높고,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매우 동의’(7.0%)와 ‘동의하는 편’(76.3%)를 합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83.3%로 다음을 잇고 있다. 그러나 ‘안보와 통일문제를 균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은 ‘매우 동의’(7.3%)와 ‘동의하는 편’(53.8%)을 합해 동의한다는 응답에 61.1%로 가장 낮으며, ‘통일 후 필요한 자세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매우 동의’(8.8%)와 ‘동의하는 편’(53.2%)을 합해 62.0%로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대체로 교사들이 실시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표 9>에 보았듯이, 교사들은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과 북한 바로 알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두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한 결과 그 영향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통일교육의 영향 평가

(단위: %, 명)

진술내용	매우 동의	약간 동의	잘 모름	약간 반대	매우 반대	계
☆ 북한실상 이해 증대	13.6	77.1	7.2	1.6	0.5	100.0 (N=375)
☆ 민족공동체 형성	7.0	76.3	14.8	1.3	0.5	100.0 (N=372)
☆ 안보와 통일문제 균형인식	7.3	53.8	31.7	7.3	0.0	100.0 (N=372)
☆ 통일의지 함양	12.3	59.5	23.7	4.5	0.0	100.0 (N=375)
☆ 통일과정 이해 증대	8.9	58.9	27.4	4.8	0.0	100.0 (N=372)
☆ 통일대비 자세 인식	8.8	53.2	34.5	3.5	0.0	100.0 (N=374)
계	9.7	63.1	23.2	3.8	0.2	100.0 (N=373)

### 3.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교사와 강사들은 기존에 받은 통일교육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한 교사의 71.0%와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80.8%는 통일교육을 한 번 또는 그 이상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중 통일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교사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통일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질문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표 14>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기존에 받은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일정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받은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큰 도움’이 39.3%, ‘도움 되는 편’이 54.9%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94.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도움이 안되는 편’(1.8%)이라거나 ‘거의 도움이 안된다’(0.4%)는 응답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1.6%에 불과하다.

<표 14> 통일교육 수강 효과

(단위: %, 명)

	큰 도움	약간 도움	보통	낮은 도움	도움 없음	계
교사	36.9	57.0	4.7	0.5	0.8	100.0 (N=379)
강사	41.6	52.9	3.6	1.8	0.0	100.0 (N=382)
계	39.3	54.9	4.2	1.2	0.4	100.0 (N=761)
$df=4, \chi^2=8.62, p=0.13$						

그렇다면 통일교육자들이 예전에 자신들이 받았던 통일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보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되어 있는데, 교육내용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63.5%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응답이 26.0%이며, 교육방법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8%에 그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방법보다는 교육내용에 치우치고 있거나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교사와 강사별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교사의 경우 교육방법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9.3%)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사의 경우 교육자료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30.6%)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통일교육원이나 교원연수원 등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교육방법 혹은 학교통일교육 사례에 대한 수강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강사의 경우 통일교육 자료의 획득이 여의치 않음을 보여주는 현상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5> 도움 내용

(단위: %, 명)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자료	기타	계
교사	65.6	9.3	21.7	3.4	100.0 (N=291)
강사	61.3	4.1	30.6	3.7	100.0 (N=271)
계	63.5	6.8	26.0	3.7	100.0 (N=562)
$df=3, \chi^2=10.58, p=0.014$					

그러면 통일교육자인 교사와 강사는 어떤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획득하고 있을까? 북한·통일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16>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문·방송·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32.4%로 가장 높고, 인터넷을 통해서(19.6%), 통일교육에 참가해서(18.1%), 그리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자료를 통해서(17.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스컴이 정보의 신속한 전달에는 유익하나 객관적 자료를 얻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데 매스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입수 방법과 관련하여 교사와 강사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사의 경우 매스컴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이 41.0%로 강사(25.3%)보다 훨씬 높으며, 정부자료를 입수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응답의 경우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비율(23.7%)이 교사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전문서적으로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도 강사가 16.9%로서 교사의 6.1%보다 훨씬 높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강사보다 정부자료나 전문서적 등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자료를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설문결과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16> 정보 입수 방법 (복수 응답)

(단위: %, 명)

	매스컴	정부자료	인터넷	전문서적	통일교육	계
교사	41.0	10.7	22.4	6.1	19.9	100.0 (N=1,087)
강사	25.3	23.7	17.4	16.9	16.7	100.0 (N=1,336)
계	32.4	17.9	19.6	12.1	18.1	100.0 (N=2,423)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좀더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교사들에게 질문해 본 결과 북한실태(17.8%), 통일 이후의 양상(16.0%), 그리고 급변사태(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7> 참조). 분단국의 통일사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응답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일의 당위성이 3.8%, 남북관계가 6.4%, 통일기반이 6.6%, 그리고 통일정책은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응답 결과는 통일의 당위성은 필요하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관심이 덜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분단국의 통일사례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불과 1.4% 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이외의 응답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급변사태(15.1%)와 통일이후의 양상(16.0%)에 관심이 높은 것은 비록 현재 직접적인 적용가능성은 적지만 통일이 가져올 문제점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관심 내용 (복수응답)

(단위: %, 명)

	당위성	통일정책	북한실태	남북관계	국제환경	통일기반	급변사태	통일이후	통일사례	교육방법	계
교사	3.8	7.8	17.8	6.4	13.7	6.6	15.1	16.0	1.4	11.3	100.0(N=1,060)

통일교육을 어느 기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사와 강사 모두 통일교육원을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76.1%가 그리고 강사는 83.8%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을 주관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교원연수원이 주관해야 한다는 응답(교사의 경우만 선택가능)은 14.2%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에 대한 경험이 가장 축적되어 있고 교수진을 포함한 역량이 가장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18> 참조). 그리고 통일교육원이 있는 현실에서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 하여 통일교육이 더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표 18> 바람직한 통일교육 주관 기관

(단위: %, 명)

	통일교육원	교원연수원	별도 기관	민간단체	기타	계
교사	76.1	14.2	7.7	1.7	0.4	100.0 (N=523)
강사	83.8	-	5.3	6.9	4.0	100.0 (N=450)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강사간 상이한 질문(질문은 같으나 답변 항목이 다름)을 하였는데, 그 응답 결과는 <표 19>에 요약·제시되어 있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교사와 강사간 응답에 있어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는 연수기회의 확대를 지적한 비율(33.1%)이 가장 높으며, 교육자료의 보급(22.7%), 명확한 교육지침(17.4%), 학생의 관심(12.2%), 정부의 지원(11.3%), 그리고 학교의 지원(3.3%)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반면 강사의 경우는 정부의 지원을 지적하는 비율(42.8%)이 가장 높고, 연수기회의 확대(33.3%), 교육자료의 보급(13.2%), 명확한 교육지침(10.7%)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는 교사와 강사간 역할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경우 명확한 교육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연수를 통해 지식을 획득하고 구체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강사의 경우는 교육대상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표 19> 통일교육 활성화 과제 (복수 응답)

(단위: %, 명)

	연수기회	교육자료	교육지침	정부지원	학교지원	학생관심	계
교사	33.1	22.7	17.4	11.3	3.3	12.2	100.0(N=966)
강사	33.3	13.2	10.7	42.8	-	-	100.0(N=439)

### Ⅲ. 요약 및 통일교육 개선에 관한 함의

이번 조사에 응한 학교통일교육 교사와 사회통일교육 강사들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교사의 78.0%가 북한·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강사의 경우 모두(100.0%)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더욱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도 교사는 29.5% 그리고 강사의 경우는 물경 83.3%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도는 교육생들의 관심도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교육자의 평가에 의하면, 청소년 학생들의 경우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비율은 겨우 30.2%에 불과하며, 성인 수강생의 경우 청소년 학생들보다 높기는 하지만 52.0%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볼 때, 통일교육자들이 갖고 있는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높은 관심도는 적극적 통일교육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정부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인데 교사들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교사들의 경우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1/3에도 못미치는 32.2%에 불과하다. 강사들의 경우 80% 이상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안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잘 안다’는 응답은 22.8%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론 통일교육이 정부의 대북정책만 다루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정책은 통일교육의 중요한 일부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실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는 크게 북한실태, 통일환경, 그리고 통일정책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통일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교사들이 경우 북한바로알기와 민족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협력 분야는 거의 다루지 않는 실정이다(<표 9> 참조). 강사들의 경우 비교적 균형있게 다루는 것으로 보이나 유독 국제협력과 관련된 내용은 3.8%만이 역점을 두고 있다. 결국 통일교육은 통일정책과 통일환경을 포함한 전반적 통일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대북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자들이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느끼는 애로점은 크게 두 개 즉, 강의 기회의 부족과 자료의 제한으로 보인다. 학교통일교육 교사의 경우 평균 교과 강의시간이 학기당 4.3시간에 불과하며, 평균 한달에 1회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의 경우도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 교사의 경우 교과외 시간을 포함하여 강의시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입시에 대비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강사들의 경우, 고정된 교육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애로가 있다.

두 번째 애로점은 교육자료와 관련되어 있다.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와 강사는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교육자료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일교육 연수를 교육자료 확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통일관련 정보는 신문·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육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매스컴은 자료의 신속한 획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자료나 전문서적을 활용할 때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자료의 부족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통일교육의 개선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통일교육 기회의 확대가 절실하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나 기법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교사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 시간을 늘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자의적으로 특정 교과 시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뿐 아니라 학교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할당은 입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북한·통일 문제를 입시에 출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비함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통일교육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사회통일교육 강사의 경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 기회가 신장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강사에 집중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강사를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교육의 편향성을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주로 북한 바로 알기와 민족공동체 형성 등 올바른 대북관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육의 목표가 북한관, 평화관, 그리고 이념관을 포함하는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는데 있다고 볼 때, 통일교육을 특정 분야로 한정해서는 안된다. 북한 바로알기와 민족공동체 형성 등 올바른 북한관이 필요하고 건전한 안보관과 평화공존의식,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시민의식 등 균형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통일 의지 함양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의 질은 교육자의 질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육자 자신이 전문적일때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통일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한 과제로 교사나 강사 구분 없이 연수기회의 확대를 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통일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통일교육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수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교육원에서도 지역별로 통일교육센터를 확충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수기회 확대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명실상부한 통일교육연수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일교육자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 통일교육자료의 보급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끝으로 민관파트너십의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통일문제는 특정 개인의 관심사가 될 수 없는 반면 국가의 문제로 단정지을 수도 없는 특수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과 관은 서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에 공동으로 기여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자의 양성과 교육자료의 보급 그리고 통일교육 기관의 조정 역할은 국가 담당해야 하며, 통일교육자는 국가적 입장에서 통일문제를 가르쳐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통일교육을 주관할 수 있는 기관은 통일교육원밖에 없다고 볼 때 통일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통일교육자를 중심으로 하는 연수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기능은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통일교육 기회의 확충과 관련된 제도적 정비,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지역통일센터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필요가 있다.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핵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 정세 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 · 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 I )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페라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 ◆ 비매품 ◆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노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근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근,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희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의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중철

####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 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